

20
16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GLOBAL LEGAL ISSUES (IV)

- 교육문화법 분야
- 국제보건법 분야
- 국제소비자법 분야
- 국제스포츠법 분야

20
16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

GLOBAL LEGAL ISSUES (IV)

- 교육문화법 분야
- 국제보건법 분야
- 국제소비자법 분야
- 국제스포츠법 분야



Issue 01	교육문화법 분야 007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및 동향 분석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42
Issue 02	국제보건법 분야 119 재난구호/질병관리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168
Issue 03	국제소비자법 분야 179 소비자보호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및 동향 분석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226
Issue 04	국제스포츠법 분야 249 국제스포츠에 있어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록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 28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1

교육문화법 분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육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및 동향 분석”

- 부록 ▶ Annex 1 –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1970 Convention
Annex 2 –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nex 3 –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Annex 4 –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전진성 팀장은 City, University of London에서 1999년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및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유네스코국제문화정책학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활동 분야는 유네스코 거버넌스와 문화정책분야이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육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및 동향 분석

전진성*

Abstract

- ▷ 2015년 5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운영지침’은 협약의 모호한 조항에 대한 보완적 해설을 통해 체약국 간의 상이한 해석 위험을 최소화하고 협약의 취지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동 지침을 근거로 협약 내용에 대한 통일적 유권해석이 보편화될 경우 지침에 포함된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내법 이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에 대한 권고’는 오늘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기록매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록물’의 정의에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까지 확대하여 포함하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 유통되는 정보의 중장기적 보존·관리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 ▷ 교육 분야 세부목표들을 포함해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사회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2030 실행계획에 포함된 11개의 범지구적 지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그 달성 여부를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 지표로서 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고등교육학위인증에 대한 국제협약’은 아직 준비 초기단계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고등교육 학위의 질적 수준 보장과 인증 문제, 고등교육 학위의 종류를 포함한 전반적 틀의 설정 문제, 형식 및 비형식 학습과정의 인정 문제, 기존의 지역 협약들 간의 관계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논의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 수요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현재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 산업군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2001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개정 권고의 재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교육 2030 실행계획의 전체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I. 머리말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전문기구로서 규범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 글은 유네스코 제38차 총회를 비롯하여 2015년에 개최된 유네스코 주요 정책회의에서 다뤄진 문화와 교육 분야 국제규범 의제들 중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에 대한 권고안」, 「고등교육학위인증에 대한 국제협약 준비 관련 예비보고」, 「2001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개정 권고의 개정 제안」 등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규범들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 동향과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일부 규범들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배경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자료를 참고하기도 했다. 교육 분야 국제 동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문서로서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교육 2030 실행계획에 관한 고위급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교육 2030 실행 계획」의 핵심 내용과 이들의 시사점도 정리했다.

II. 문화 분야

1.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2015년 5월에 개최된 표제 협약 당사국 총회와 같은 해 11월 열린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표제 협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1970년 협약’으로도 알려져 있는 동 협약은 전문과 함께 총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막는 국제적인 규범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협약의 제3조는 협약 당사국이 본 협약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선언하고 있다. 제5조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의 목록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6조는 문화재 반출증명서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7조는 문화재의 반입통제와 그에 따른 반환 및 회수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 내의 박물관 혹은 유사기관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입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8조는 문화재 불법 반출입에 관여한 자에 대해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는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의 동참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11조는 외국 군대의 점령을 통한 직·간접적 문화재 반출과 소유권 양도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있다.

■ 유네스코 1970년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5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동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의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¹⁾’이 핵심의제로 다루어져 긴 논의 끝에 채택되었다. 동 지침은 협약의 모호한 조항에 대한 보완적 해설을 통해 체약국 간의 상이한 해석 위험을 최소화하고 협약의 취지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지도하는 차원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침이라는 한계로 인해 공식적인 구속력

1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ESCO, 2015

을 갖지는 않으나 동 지침을 근거로 협약 내용에 대한 통일적 유권해석이 보편화될 경우 지침에 포함된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내법 이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네스코 1970년 협약 및 새롭게 채택된 지침의 내용과 관련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 협약 제5조 및 지침 Para 20(Paragraph 20)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문화유산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지정문화재목록(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²이 있으나 이 목록이 유네스코 1970년 협약 제5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재청의 지정문화재목록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목록을 비롯하여 개별 박물관, 미술관이 각각 제작 관리하고 있는 목록들은 있으나 중요문화재에 대한 통일적 관리목록과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은 동 협약의 충실한 이행 차원은 물론 우리나라 중요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한편 협약 제6조는 문화재 반출증명서 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번에 채택된 지침 Para 58부터 62까지는 반출증명서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Para 59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성명, 문화재 사진 및 설명, 특징, 반출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문화재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증명서 위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Para 62의 경우 체약국 세관당국, 문화재 관리자, 경찰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네스코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개발한 문화재 반출증명서 양식³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2 문화재청, 문화유산디지털허브-문화유산 종목, 문화재청, 2016.7.25, <http://hub.cha.go.kr/main.do>

3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외전시 등의 목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반출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행정서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협약이 요구하는 ‘문화재 반출증명서’의 취지 및 형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⁴ 따라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동 협약과 지침이 권고하고 있는 ‘문화재 반출증명서’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지침 Para 36은 합법적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취득한 유물을 포함하여 박물관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종교적 혹은 공공 기념물 등에 표준 유물등록증(Object-ID Standard)을 발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침은 등록증에 사진을 포함하여 유물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유물 도난 시 국제적 공조를 통한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화재 반출증명서와 함께 유물등록증 발급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의 불법거래가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이번 지침은 문화재를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 국제경찰(INTERPOL),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가 공동으로 마련한 일련의 기본행동요령(Basic Action)⁵을 첨부문서로 제공하면서 체약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본행동요령은 유네스코, 국제경찰 및 국제박물관협회 회원국들이 인터넷 상의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ESCO, 2015, p.30.

4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p106

5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ESCO, 2015, pp 40-42

문화재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고, 문화재를 거래하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필요시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사협력을 요청하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전에 문화유물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문화재 도난사건 발생 시 국제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적으로 거래된 문화재의 회수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문화재가 합법적인 주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 제8278호, 2007.1.26 공포) 과정에서 문화재 거래 시 민법상 선의취득 불가 및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등 문화재 도난과 도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온라인상의 불법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는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거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지침에 포함된 온라인 불법거래관련 기본행동요령을 토대로 국내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38차 유네스코 총회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유네스코 1970년 협약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⁶가 있었다. 51개 당사국의 이행 현황을 종합한 이번 보고서에서 다수의 회원국은 문화재의 불법거래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터넷 활용 등 새로운 방식의 불법거래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인터넷 상의 문화재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는 동의제 관련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네스코 회원국 중 아직 1970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6 UNESCO, Report on the measure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38C/29 Annex), UNESCO, 2015

회원국들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1970년 협약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1995년 UNIDROIT 협약⁷에도 가입할 것을 적극 권고했으며, 1970년 협약 제16조에 따라 당사국의 협약 이행 보고 의무를 강조했다.

■ 평가 및 시사점

유네스코 1970년 협약은 내용상 사법적 성격보다는 국제공법/행정법적 성격이 강한 규범으로서 체약국들로 하여금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을 막기 위한 일련의 행정적 조치사항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거나 위반한 체약국,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기 집행적(self-executing)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 협약은 체약국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의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체약국으로 하여금 공통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협약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밖에도 동 협약의 적용 대상을 협약 발효 이후의 문화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 박물관과 기념관 등에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점, 문화재의 반환 내지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도 동 협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31개국에 가입한 중요한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운영지침은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1970년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아직 보완이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⁷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UNIDROIT, Rome, 1995

⁸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pp100-103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네스코 회원국 중 아직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반출에 관한 UNIDROIT 협약’(1995년 UNIDROIT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들의 조속한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1970년 협약은 문화재보호기관의 설립, 문화재 목록의 작성과 관리, 문화재 반출입의 통제, 국제적 공조 등 불법문화재의 반출입을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행정 조치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1995년 협약은 도난 문화재 및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청구, 선의 취득자에 대한 보상, 반환청구권의 시효 등 실체적 권리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⁹ 또한 1995년 협약은 체약국이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어할 자기집행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1970년 협약과 큰 차이가 있다.

규범적 구속력이 큰 1995년 협약은 1970년 협약과 비교하여 협약 가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지금까지 1970년 협약에 비해 가입국 수가 현저히 적었으나 최근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막는 실효적인 방법은 결국 민사적인 규율의 통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1995년 협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¹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1995년 협약가입을 통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을 즉각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약가입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협약 가입을 통해 국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크게는 문화재 환수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발언권과 도덕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1995년 UNIDROIT 협약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¹¹

9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pp67-68

10 2015년 9월 현재 37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해있다.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된 1970년 협약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바레인,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니제르, 파키스탄, 폴란드, 터키 등 7개국이 1995년 협약의 가입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에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모로코, 세르비아, 시리아, 스와질란드 등 5개국은 곧 1995년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11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pp113-114

2.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에 대한 권고안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2015년 11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총5개조로 구성된 표제 권고안을 검토하고 이를 채택했다.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관련 국내 법안, 정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권고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이 매4년 단위로 동 권고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 캐나다, 폴란드, 일본, 중국 등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 이번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어정의

이번 권고는 ‘기록(Document)’을 정의함에 있어 기호, 문자, 이미지(사진 혹은 동영상), 음성 등의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 모두를 포함하면서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은 집단, 문화, 국가, 혹은 인류 전체 차원에서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 기록물로서 인류 전체를 위해 보존·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이가 제한 없이 동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² 이번 권고에서는 ‘기록물 관리 기관(Memory Institutions)’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기록물 관리소, 도서관, 박물관, 기타 교육·문화·연구 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¹² UNESCO,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38C/24), UNESCO, 2015, p2.

■ 기록유산 식별 (제1조)

이번 권고 제1조는 회원국들이 자국 내 기록보관소, 도서관, 박물관, 기타 교육/문화/연구 기관들이 기록유산관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기록물 선별, 수집, 보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록물 관리 기관들이 기록유산의 선별, 획득, 선택취소에 관한 정책,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지식 분야, 예술적 표현 분야, 역사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유산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선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잠재적 혹은 임박한 손실의 우려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별하고 관련 기관이 이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인식제고 차원에서 중요 기록유산을 선별하여 국가, 지역, 혹은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하고, 기록유산 선별, 보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기록유산의 보존 (제2조)

권고 제2조는 기록물의 보존이란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기록의 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학문, 과학, 기술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날로그 매체의 경우 원본, 유물, 혹은 정보기록매체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디지털 기록물의 경우 정보 생산 혹은 획득 전에 미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회원국 정부, 기록물 관리 기관,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권고 제2조 4항, 제2조 5항, 제2조 6항의 경우 주목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제2조 4항은 회원국들이 보존활동의 핵심 요소로서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기록유산 전문가를 위한 연구 및 훈련기회, 필요한 장비 제공 등)를 위한 조치와 정책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한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존활동 관련 모범사례, 최신 과학기술, 관

런 학문/과학/기술/기계/기술공학 분야에서의 핵심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 b. 제2조 5항은 기록유산의 일부에 대한 합법적 접근 통제가 있다 해도 해당 기록물 관리 기관이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국내법의 보완을 권고하고 있다.
- c. 제2조 6항은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왔거나 혹은 관련이 있는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자국 내 기록물 관리 기관들이 관련국들과 해당유산에 대한 디지털 사본 및 관련 프로그램을 공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기록유산에의 접근성 (제3조)

권고 제3조는 기록물 관리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소장 기록물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 기관의 역량강화에 힘을 쓸 것을 회원국에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권고 제3조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기록물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성장을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증진을 위해 활용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권고 제3조는 비밀, 보안, 안전, 사생활보호 혹은 다른 법률적 이유로 인해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경우, 그 사유와 통제기간을 분명히 밝힐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적절한 법적 장치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 정책 조치 (제4조)

권고 제4조는 먼저 회원국들이 기록유산을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아날로그 형태 기록유산의 보존은 물론 디지털 기반시설 및 기술, 그리고 기록물 관리 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권고 제4조 6항은 모든 형태의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 문제와 관련, 해당 저작권법 코드와 납본법 제도가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제4조 8항은 디지털 기록유산 관리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기록물 목록화 기준 및 방법의 국제적 표준화와 회원국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국내 및 국제 협력 (제5조)

권고 제5조는 회원국들이 국내 관련 주체들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록유산의 보호·보존 및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 출판물, 연구 데이터의 공유는 물론 인적·물적 교류를 적극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권고 제5조 3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복수의 국가와 관련된 기록유산, 여러 나라에 걸쳐 흩어져 있는 기록유산, 혹은 원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소장된 기록유산과 관련하여 관련국들 간에 해당 유산 사본의 공유를 권고하고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제38차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 보존과 접근에 대한 권고’는 오늘날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기록매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록물’의 정의에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포함했고,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 유통되는 정보의 중장기적 보존·관리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적시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국내 관련 규범들의 정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기록유산의 등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등재 이후의 효과적 보존·관리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노력, 그리고 접근성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권고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권고의 제5조 3항이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기록유산과 해당 유산이 담고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데 있어 유용한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II. 교육 분야

1.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교육 2030 실행계획(The 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 채택

2015년도 교육 분야 국제 동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다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와 5월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준비되고, 11월 ‘교육 2030 실행계획에 관한 고위급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교육 2030 실행계획’을 꼽을 수 있다.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먼저, 17개의 기본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 영역에서 인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와 그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것은 네 번째 목표로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네스코의 대표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모두를 위한 교육사업(Education

for All: EFA)’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기존의 EFA 사업 이행과정에서 노정된 ‘교육 차별 문제’와 ‘교육의 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과 ‘양질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교육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¹³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단순한 선언적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10개의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통해 교육접근성 확대, 교육을 통한 형평성과 포용성 증진, 양성 평등 증진, 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평생학습기회 증진 등 여러 미결과제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다. 동 기본 목표의 10개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속가능개발목표 4의 세부목표]¹⁴

-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하고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

13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1항: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초 및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항: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성장을 지향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의식을 고양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과 우의를 증진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3항: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¹⁴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 pp.21-22.

- 술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한다.
-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의 성인남녀가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도록 한다.
-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4.a.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4.b.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늘린다.
-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의 교원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세부목표 4.1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보편적 초등교육의 증진을 목표로 삼았던 것에 비해 중등교육까지 보편적인 무상교육에 포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학습 성과 관리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영유아의 장기적 발전, 학습, 건강을 위해 조기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부목표 4.2를 통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접근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목표 4.3과 4.4는 모든 남녀가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직업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구를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기술진보의 결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대응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업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직업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도 그 이행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목표다.

세부목표 4.5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존재하는 교육 접근성의 차이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세부목표 4.6은 기존의 개발목표가 이미 강조해온 문해력 증진에 더해 수, 계좌, 측정, 비율과 양을 다룰 수 있는 수리력의 증진을 동일한 비중으로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

세부목표 4.7은 이번에 채택된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목표로서 세계화된 환경에 적합한 책임감 있고 현명한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세부목표 4.7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범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보편적 가치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국제사회 미래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세부목표 4.a는 차별 없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세부목표 4.b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개도국 및 최빈국을 대상으로 한 공여국의 장학금 지원 확대를, 세부목표 4.c는 개도국 및 최빈국 교사 역량강화 지원 강화를 각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 2030 실행계획

‘교육 2030 실행계획’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네 번째 목표인 교육 분야 기본목표와 세부목표들을 국가, 지역, 범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 교육 2030의 비전, 근거, 원칙, 제2장 - 교육목표와 이행방안 및 전략, 제3장 - 범지구적 교육협력의 거버넌스, 모니터링, 후속작업과 평가 등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 ‘교육 2030 실행계획’은 세부목표별로 측정지표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국별 현실, 역량, 발전수준,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교육 2030 실행계획은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과 교육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교육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양질의 교육과 교육 효과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 학습 성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과 직업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고려 ICT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정보·지식의 공유와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교육 2030 실행계획’은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주제별 지표 초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 43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이 지표 체계에는 국제적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 간 비교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11개의 범지구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11개의 범지구적 지표는 지난 2016년 3월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채택된 바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지표의 달성 여부를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 지표를 적용한 교육 분야 목표 달성 정도 측정에 필요한 국내 차원의 조치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개의 범지구적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 2030 범지구적 성과 지표]¹⁵

- 4.1.1. (i) 초등학교 2-3학년 (ii) 초등교육 말 (iii) 중등교육 말 (a) 읽기와 (b) 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기준을 달성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비
- 4.2.1.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 발달 정도가 정상인 5세 이하 아동의 성비
- 4.2.2. (정규 초등교육 입학 1년전) 보육 및 교육 참가 영유아의 성비
- 4.3.1. 최근 12개월 내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성인의 비율
- 4.4.1. 정보통신기술(ICT)을 지닌 청소년/성인의 기술유형별 비율
- 4.5.1. 세분화할 수 있는 목록의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한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 수, 분쟁 영향 여부 등)
- 4.6.1. 기능적 (a)문해 (b)수리 기술 능숙도가 적어도 일정 수준을 달성한 연령 집단 별, 성비
- 4.7.1. (i)세계시민교육과 (ii)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양성평등과 인권 교육의 (a)국가 교육 정책 (b)교육과정 (c)교사교육 (d)학생평가에서 주류화 정도
- 4.a.1. (a)전기 (b)교육 목적의 인터넷 접근 (c)교육 목적의 컴퓨터 (d)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기초 식수 (f)성별 기초 위생 시설 (g)기초 손 씻기 시설 (WASH 기준 부합)에 접근 가능한 학교 비율
- 4.b.1. 분야별 학업 유형별 장학금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유입량
- 4.c.1. (a)취학 전 (b)초등학교 (c)중학교 (d)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할 사람으로서 적절한 예비교사 연수 및 직무연수(예:교육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43개의 주제별 지표 중 11개의 범지구적 지표를 제외한 32개의 주제별 지표의 경우 2016년 8월 현재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인데, 추후 유네스코 통계국이 소집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4번의 지표에 관한 기술협력그룹’(Technical Cooperation Group on indicators for SDG4-Education 2030)에 의해 마무리 될 예정이다¹⁶.

¹⁵ Statistical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6, pp. 19-20.

¹⁶ UNESCO, Global Cooperation and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4-Education

범지구적 지표 11개를 포함한 43개의 주제별 지표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수집해야 할 주제별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미완의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별 지표는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여부를 국제적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세부목표와 그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환경을 평가해 본다면 수치상 많은 분야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9년간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취학 전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70퍼센트에 가까운 대학 진학률과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현대적 학교시설, 그리고 제도화된 교원임용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그 성과지표를 통해 비춰 본 우리의 교육 현실은 여러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2012년 2.3퍼센트까지 낮춰졌던 초·중·고교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15년 기준 3.9퍼센트로 증가하는 추세이고¹⁷, 주입식 교육과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대학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을 통틀어

2030 (200EX/7), UNESCO, 2016, p.1.

¹⁷ 통계청,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통계청, 접속일자 2016. 8. 19, www.index.go.kr

58.6퍼센트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0퍼센트를 하회하고 있고, 직업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0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¹⁸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보다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를 유발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것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사교육참여율은 지난 몇 년 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77퍼센트였던 사교육참여율이 2013년에는 68.8퍼센트까지 낮아졌다.¹⁹ 하지만 사교육비의 전체 규모는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교육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학교현장에서 종종 목격하고 있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대 등의 문제도 교육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에 필요한 우수한 교육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들 중에서 가장 새롭게 추가된 목표라 할 수 있는 세부 목표 4.7은 국제사회 미래 구성원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미래의 교육 방향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 학습자가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측면 모두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제간

18 통계청, 대학졸업자 취업률, 통계청, 접속일자 2016. 8. 19, www.index.go.kr

19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청, 접속일자 2016. 8. 19, www.index.go.kr

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의 성취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 세부목표들을 포함해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사회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이 다양한 교육공간에서 학습자들에 의해 학습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체질화하는 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2. 고등교육학위인증에 대한 국제협약 준비 관련 예비보고(Preliminary Report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a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국제적으로 고등교육분야 학생들의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각국은 국가 간 양자 혹은 다자 협정을 통해서 상호 학위 인정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해외 부실 학위 유입을 막기 위해 학위의 검증 체계를 표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국가 간 교육과 자격 체계가 상이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고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는 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의 인정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의 이행을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회원국 및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기존의 5개 지역협약들을 새로운 추세(지원자 우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절차, 탄력적인 자격 인정, 전문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우수 사례 및 가이드라인 개발, 법적 기반 구축 등)에 맞춰 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유럽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개정 2013년),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개정 2011년), 아프리카

지역 고등교육 학위 및 기타 학력 인정에 관한 협약(개정 2014년) 등 3개 지역 협약의 개정이 완료되었다.

[표 3 고등교육자격인정에 관한 지역협약 현황표]²⁰

지역 협약	내용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Certificates, Diplomas, Degrees and Other Academic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in <u>African State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개정 - 자격 인정 권한, 자격 평가 원칙, 전문 경험과 선행 학습의 확인, 이행 구조 및 메커니즘 관련 요소 등을 보강함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u>Arab State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체결, 14개국 비준,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이 분분함 - 지역 내 관련 국가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유네스코는 관련 정보 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유네스코는 지역 고등교육 정책안 및 자료집을 개발 중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u>Asia and the Pacific</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체결, 2011년 개정 - 호주와 중국이 개정 협약의 가입 기탁을 한 상태 - 한국은 1989년에 수락(Acceptance) - 지역협약 사무국: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u>the European Region</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개정 - 1997년 체결, 53개국 비준, 유네스코는 유럽의회와 함께 이 지역 협약 및 유럽 정보센터 네트워크(ENIC)의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지원 하에 ENIC가 이 지역 협약 비준국 간 정보 공유와 협약 이행에 기여하고 있음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u>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체결, 19개국 비준, 역내 국가들은 고등 교육 자격 인정과 관련 양자 협정을 선호함 - 중남미·캐러비안 고등교육기구(IESALC)가 지역 협약의 사무국을 맡아 정부 간 조정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지역 내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2015년 하반기에 교육 장관회의를 개최함

20 UNESCO, Application of the 1993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UNESCO(197EX/20, Part VI.), UNESCO, 2015, pp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들 지역 협약이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요구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유네스코로 하여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오늘날 학생 개인에게 주어지는 고등교육 기회와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학생과 교원의 국제적 이동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IT를 활용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 제3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제공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²¹ 노동시장의 수요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의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서 2013년 제37차 유네스코 총회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15년 11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고등교육학위 인증에 관한 국제협약의 실질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38차 총회에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새로운 협약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 준비 노력을 지지했다. 여러 회원국들은 고등교육학위 인증에 관한 기존의 지역 협약들과의 상보적 관계를 고려하여 동 협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동 협약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 국별, 지역별 다양한 교육시스템의 차이를 유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또한 동 협약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에 바탕을 두고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 협약은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지역협약에 기반을 두며, 투명성과 질을 보장하고, 지역협약과 글로벌 협약 간의 연계성과 상호 시너지를 증진하며, 지역협약과 글로벌 협약 간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수립하고, 학문분야 및 전문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그 동안의 경과

21 2000-2012년 기간 중 전 세계적으로 제3의 고등교육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는 9천7백만 명에서 1억 9천6백만 명으로 증가함. (UNESCO, Preliminary Report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a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38C/26), UNESCO, 2015, Annex p.1.

보고와 함께 동 협약의 예비초안을 2017년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 평가 및 시사점

2013년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동 협약의 제정 준비와 관련, 지역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국제협약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실효성 있는 지역협약을 정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국제협약 마련을 지지하는 국가들(노르웨이, 덴마크, 멕시코 등)도 다수 있었고, 이 두 의견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동 협약의 제정 준비를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 37차 유네스코 총회 때 동 협약의 제정 준비를 지지한 바 있다.

동 협약은 아직 준비 초기단계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안들이 있다. 여기에는 새롭게 제정될 협약과 기존의 지역 협약들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 고등교육 학위의 질적 수준 보장과 인증 문제, 고등교육 학위의 종류를 포함한 전반적 틀의 설정 문제, 형식 및 비형식 학습과정의 인정 문제 등이 포함된다. 현 시점에서 동 협약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국제규범으로 기능할지, 그리고 동 협약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실익을 제공할지 가늠하기에 이른 감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동 협약이 제정될 경우 각 국가의 고등교육국제화 전략은 물론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운영과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학, 의학, 경영학 등 일부 분야에서 국제적인 학위 인증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해오긴 했으나 고등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국제적 논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협약 제정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국제 학생/인력 이동성, 국가 간 학제 호환성, 고등교육 분야 학위 국제인증

시스템, 국가 고등교육 관리 체계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국내 고등교육분야 학위 및 자격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2001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개정 권고의 개정 제안(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2001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2015년 11월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구조, 기술 및 고용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보다 체계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포제 권고 개정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상황에 맞는 국내 입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포제 권고의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각국 직업기술교육 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권고의 내용을 널리 알릴 것을 촉구했다. 총7개조로 구성된 이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 권고의 범위 (제1조)

먼저 개념적 측면에서 이 개정안은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직업기술교육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 기존의 ‘직업기술교육’을 ‘직업기술교육훈련’으로 대체함으로써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일터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과 무형식 직업기술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참고로, 동 규범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직업분야, 생산, 서비스 및 생계와 관련된

²² UNESCO,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2001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38C/32), UNESCO, 2015, Annex II pp. 1-9.

기술개발, 교육, 훈련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비전과 목표 (제2조)

제2조는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비전으로 개인, 조직, 기업,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와 고용, 평생교육 촉진 등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목표로 개인의 역량강화와 고용, 양질의 일자리, 평생교육 증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 증진, 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 등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교육 2030 실행계획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념적 토대가 우리나라 관련 규범들에도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정책 및 거버넌스 (제3조)

제3조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 청년실업과 사회적 불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을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별 단위에서 다양한 부처 간 협력, 정부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이해관계자들 서로간의 협력이 모두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년 및 성인들로 하여금 직업 관련 지식, 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보다 나은 고용시장 창출과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원국 정부의 노력을 독려하고,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중등, 중고등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 실시할 것과 이들 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자격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3조는 모든 청년과 성인들이 공평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회원국 정부가 직업기술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있어 성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피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또한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교육 2030의 실행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무게감 있게 강조되고 있다.

한편, 동 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상황, 통치구조, 법률상의 규정 등을 고려하도록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 교육훈련의 질과 적절성 (제4조)

제4조는 도제제도, 인턴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일터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 방법과 무형식 직업기술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학습방법에 있어서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을 둔 온라인 교육과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4조는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트레이너, 관리자, 행정가를 포함한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이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일터기반학습과 무형식 직업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 교육훈련을 책임질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적절한 근무여건과 처우 등 일련의 양성·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4조는 또한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들이 끝없이 변화가는 국내, 지역, 국제 고용시장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용

시장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부
문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각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파악하고 이
를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제5조)

제5조는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인은 물론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제공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비용과 효과를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 직업기술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
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연구 및 지식관리 (제6조)

제6조는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도록 학제간 연구를 장려·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
한 체계적 지식 관리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의사 결정과정에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국제협력 (제7조)

끝으로 제7조는 회원국들 간의 지식과 경험 공유,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의 국
제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협력,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의 활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산하기구, 지역 기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들, 시민사회,
연구 네트워크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2016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늘날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로 인해 단순 반복에 의존하는 기존의 직업군들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 수요의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즉 현재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 산업군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교육 2030 실행계획의 전체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학교를 졸업한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간의 양적, 질적 미스매칭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설정 및 마에스터고 추진 등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이 단순히 고용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이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청년실업,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인구 노령화 등 사회 제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이를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의 개선 과정에서 요긴한 이념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맺음말

규범은 특정 시대,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앞서 살펴본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국제규범들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우리의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규범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국내규범과 정책을 정비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적 실익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지위, 발언권, 도덕적 우위와 같은 연성권력(軟性權力)의 확대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사회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성과 같이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들은 시간과 환경이 바뀌어도 불변하는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상황과 요구에 맞는 시의적절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법제도와 정책들이 얼마나 이러한 기본 가치에 충실한지도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V. 참고문헌

A. 문화 분야

- 1) UNESCO, Meeting of State Parties to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C70/15/3.MSP/11), UNESCO, 2015
- 2)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ESCO, 2015
- 3) UNESCO, Report on the measure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38C/29), UNESCO, 2015
- 4)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UNIDROIT, 1995
 - 5) UNESCO,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38C/24), UNESCO, 2015
 - 6)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 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7차 유네스코총회 참가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8차 유네스코총회 참가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 9) 주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대한민국대표부, 제3차 1970년 문화재불법거래 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전문), 2015,
 - 10) 문화재청, 문화유산디지털허브-문화유산 종목, 문화재청, 2016. 7. 25, <http://hub.cha.go.kr/main.do>

B. 교육 분야

- 1)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
- 2) U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A Resolution 217(III)A), UN, 1948

- 3) UN, Critical Milestones towards coherent, efficient and inclusive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 (UN General Assembly A/70/684), UN, 2016
- 4) Statistical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6
- 5) UNESCO, Global Cooperation and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4-Education 2030 (200EX/7), UNESCO, 2016
- 6) UNESCO,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ED-2016/WS/2), UNESCO, 2016
- 7) UNESCO, Application of the 1993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 in Higher Education(197EX/20), UNESCO, 2015
- 8) UNESCO, Preliminary Report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a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38C/26), UNESCO, 2015
- 9) UNESCO,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2001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38C/32), UNESCO, 2015
- 10) UNESCO, UNESCO'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2030 Agenda (38C/54), UNESCO, 2015
- 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7차 유네스코총회 참가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 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38차 유네스코총회 참가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 13) 기경석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15
- 14) 김진희 외, EFA National Report – Republic of Kor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15) 최정윤 외, 2015 세계교육회의를 위한 한국의 교육경험 – 의제 발굴 및 확산 지원 사업, 한국교육개발원, 2014
- 16) 김진희 외,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4,
- 17) 승용배 외, OECD 교육지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 18) 문도운 외,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2016
- 19) 통계청,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통계청, 접속일자 2016. 8. 19, www.index.go.kr
- 20) 통계청, 대학졸업자 취업률, 통계청, 접속일자 2016. 8. 19, www.index.go.kr
- 21)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청, 접속일자 2016. 8. 19, www.index.go.kr

VI. Annex

1.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2.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3. Safeguarding the Memory of the World –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4.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부록 1>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1970 Convention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ESCO, Paris, 1970)

TABLE OF CONTENTS

Chapter	Paragraph(s)
Introduction	1-7
Purpose of these Guidelines	8
Purpose of the Convention	9-10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ticle 1)	11-12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rticles 2; 3)	13-17
Link between heritage and State (Article 4)	18-19
Nation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s 5; 13(a, b); 14)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gislation (Article 5(a)) 	2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ntories, inalienability and State ownership (Article 5(b)) 	3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rt institutions (Article 5(c)) 	3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cheology and protected areas (Article 5(d)) 	4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les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rticle 5(e)) 	4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Articles 5(f); 10) 	5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izing the disappearance of cultural objects (Article 5(g)) 	54-55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rticles 6; 7(a, b(i)); 8; 10(a); 1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ort certificates (Article 6(a, b)) 	56-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hibition of importing stolen cultural property (Article 7(b)(i))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s 6(b), 7(b); 8)) 	64-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es on Internet 	6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es in auction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venting transfers of ownership likely to promote illicit import or export, controlling trade by registers, and establishment of rules in conformity with ethical principles (Articles 13(a); 10(a); 7(a); 5(e)) 	72-81

Cooperation on recovery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rticles 7(b)(ii); 13(b, c, d); 15)	82-85
• Request of State Party (article 7(b)(ii))	86
• Evidence to establish a claim (article 7(b)(ii))	87-92
• Just compensation and due diligence (Article 7(b)(ii))	93-94
• Cooperation for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Article 13(b))	95-98
• Admission of legal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cultural property (Article 13(c))	99
• Non-retroactivity of the 1970 Convention,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nd resolution of claims (Article 17)	100-103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	104-105
Pillage of archaeological and ethnological materials (Article 9)	106-110
Occupation (Article 11)	111-112
Special agreements (Article 15)	113-115
Reports by States Parties (Article 16)	116-120
Secretariat to the 1970 Convention and to the Subsidiary Committee (Article 17)	121-126
States Parties to the 1970 Convention (Articles 20; 24)	127-128
Reservations	129-130
Cooperating partners in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131-134
Convent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135-137
List of proposed annexes	

6.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6 of its Rules of Procedure, the functions of the Subsidiary Committee are:
- To promote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 To review national reports presented to the General Conference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 To exchange best practices, and prepare and submit to the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that ma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To identify problem area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 To initiate and maintain co-ordin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ICPRCP") in relation to capacity building measures combating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 To report to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on the activities it has carried out.
7. In accordance to its mandate, and with the commitment of fully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higher forms of understand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mbat the illicit traffic of cultural property, the Subsidiary Committee submitted thes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1970 Convention by States Parties, for their adoption at the Third Meeting of States Parties of the Convention in 2015. The present guidelines may be subsequently amended by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either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ubsidiary Committee or on its own initiativ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8.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UNESCO 1970 Conven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Operational Guidelines) aim to strengthen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minimize risks related to disput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o litigation, and thus to contribute toward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e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n 14 November 1970. Building upon improved shared understandings and experience, the Operational Guidelines are intended to assist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by learning from the best practices of States Parties geared to enhanc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also to identify ways and means to further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of the Convention through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urpose of the Convention

9. The reciprocal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greed in the Convention have the purpose of enabl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against damage, theft, clandestine excavations,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trafficking, to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and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thereof, to establish a moral and ethical code for the acquisition of cultural property to provide a platform among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facilitating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illicitly excavated or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10. The Preamble to the Convention proclaims that the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among nations for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s increases the knowledge of the civilization of humanity; enriches the cultural life of all peoples and inspires mutual respect and appreciation among nations; that cultural property constitutes one of the basic elements of civilization and national culture and that its true value can be appreciated only in relation to the fullest possible information regarding its origin, history and traditional setting; that it is incumbent upon every State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y existing within its territory against the dangers of damage, theft, clandestine excavation, and illicit export; that, to avert these dangers, it is essential for every State Party to become increasingly alive to the moral obligations to respect its own cultural heritage and that of all nations; that, as cultural institutions,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llections are built up in accordance with universally recognized moral principles; that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is an obstacle to that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which it is part of UNESCO's mission to promote by recommending to concerned States,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is end; and that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an be effective only if organiz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mong States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These agreed general principles should guide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rticle 1)

11. In drafting the 1970 Convention, UNESCO Member States concluded that it was desirable for all States Parties to apply a common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adequately address the issue of exports and imports of such property. Thus, Article 1 stat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the term "cultural property" means property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is specifically designated by each State as being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which belongs to the categories identified in the same Article.
12.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keep such designation up to date. Among the categories of cultural property, as enumerat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ree categories pose special challenges in terms of their specific designation, as follows:

Products of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clandestine excavations: Regarding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finds clandestinely excavated, States are unable to produce any specific inventories. To avoid the problem of specifically identifying an object of archaeological or paleontological significanc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one useful approach is to make a clear assertion of State ownership of undiscovered objects, so that the State Party can request its retur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1970 Convention and/or by recourse to any other relevant mean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case of an undisturbed archaeological site that has not yet been looted: every object in that site, still to be found, is important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e archaeological site's full meaning and context. Consequentl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follow best practice in designating the cultural property that is protected under their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se characteristics and all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cognize this sovereign assertion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Elements of artistic or historical monuments or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been dismembered: The specific designation of objects severed or torn from artistic or historical monuments or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not yet been

inventoried also pose a serious challenge. States Parties are invited to define these types of objects that are susceptible to pillage.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and items of indigenous communities: A special concern is posed by the increasing traffic of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that have special anthropological significance in festive or ritual customs and traditions, among others. State Parties are invited to draw and appropriately update lists by type of such significant objects in order to support the fight against their illicit traffic. Another important concern is the return of objects from indigenous communities whose absence has deprived them of significant cultural items necessary for the continuance of their cultur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respect for their traditions. Items of spiritual importance in all cultures have also been the subject of increased concern. For instance, while human remains are not necessarily covered under the 1970 Convention, many indigenous communities feel strongly about the return of human remains originating in their communities for traditional burial or other ceremonies in their home country. These returns are not regarded as taking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1970 Convention, since it uses the phrase "cultural property" and most indigenous communities do not accept that human remains can be regarded as "propert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take this into full account and thus to establish legislation, where necessary, that provides for the return of grave objects associated with burials, in view of the anthropological knowledge on the importance of burial practices to such communities and to conform with the wishes of those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and the Principles &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 (drafted 1993 and revised 2000).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rticles 2; 3)

13. Article 2 and 3 stat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The first principle is the recognition of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impover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ies of origin of such property an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titutes one of the most efficient means of protecting each country's cultural property" against these dangers. The second principle is a solemn undertaking by States Parties to fight these practices with the means at their disposal, and particularly by removing their causes, putting a stop to current practices and by helping to make necessary reparations.
14.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has many causes. Ignorance and poor ethics are at its very root and therefore the critical role of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must not be disregarded. Lack of capacity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s an important weakness in many countries, which also has to be remedied as much as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at in many instances it is materially impossible to adopt exhaustive measures of physical security and surveillance of all relevant cultural heritage, particularly regarding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sites. Moreover, the market has to be better regulated. Law enforcement and customs controls both at export and import points require to be strengthened with rigorous and efficient mechanisms, as well as educating and utilizing an active judiciary in order to confer effective protection to cultural heritage. Moreover, information on trade exchanges should be fully and readily available to States Parties concerned, to enabling them to better confront illicit trafficking. As long as demand remains high there will be an incentive to supply any goods. The trade of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objects not only trivializes the invaluable nature of such objects but also may create incentives for looting. In direct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it should be further noticed that objects of recent manufacture are regularly introduced into the market and sold at high prices as genuine archaeological artifacts. This circumstance may further incentivize pillaging and trafficking.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in these regards.

15. Clandestine excavations of archaeological sites are among the most pernicious practices within the cycle of illicit trafficking. The damage caused by clandestine excavations of archaeological sites goes well beyond the theft of important archaeological pieces, as it destroys the unity of meaning of the whole archaeological monument and archaeological context of the site, depriving the nations and peoples of the world of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learn from their irreplaceable cultural heritage. This pernicious practice should be fully stopped.
16.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illicitly excavated and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o countries of origin remains a top priority.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ceed with this required reparation in fairness to the affected nations and peoples of the world.
17. To advance on all these front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inforce the promotion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 and their full enforcement, as well as through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capacity building and a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Link between heritage and State (Article 4)

18. Article 4 (a) to (e) sets out categories of cultural property that can form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a State, either owned by the State itself or a private individua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re required to recognize a link between those categories and the relevant State where the object concerned has been created by an individual or by the "collective genius" of nationals, foreign nationals or stateless persons resident within its territory; found within its national territory; acquired by archaeological, ethnological or natural science missions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 the subject of a freely agreed exchange; or received as a gift or legally purchased with the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
19. The Convention does not attempt to establish priorities where more than one State may regard a cultural object as part of its cultural heritage. Competing claims to such items, if they cannot be settled by negotiations between the States or their relevant institutions or by special agreement (see paras. 113-115 below), they should be regulated by out of court resolution mechanisms, such as mediation (see para. 104 below) or good offices, or by arbitration. There is no strong tradition for the judicial settlement of such differences in cultural matters. State practice would suggest a preference for mechanisms that allow consideration for legal, as well as cultural, historical and other relevant factor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xhaust all options provided by the Convention before entering into arbitration or litigation.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cooperate to ensure that appropriate arrangements are established to allow the interested States to realize their interests in a compatible way through, *inter alia*, loans, temporary exchange of objects for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s, temporary exhibitions, joint activities of research and restoration.

Nation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5, 13(a; b), 14)

20.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rticle 5 requires that States Parties undertake,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to set up one or more nation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 sufficient staff and adequate budget to carry out the following functions:
- Contributing to the drafting of legislation (Art. 5(a); paras. 24-32 below);
 - Establishing and updating a list of cultural property whose export would constitute an impover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y (Art. 5(b); paras. 33-38 below);
 - Promoting the development or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ions required to ensure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at cultural property (Art. 5(c); paras. 39-41 below);
 - Organizing the supervision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ensuring the preservation *in situ*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Art. 5(d); paras. 42-48 below);
 - Establishing rules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and taking steps to ensure their observance (Art. 5(e), paras. 49-51);
 - Taking educational measures to develop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States and spreading knowledge of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rt. 5(f); paras. 52-53 below);
 - Arranging appropriate publicity for the disappearance of any item of cultural property (Art. 5(g) paras. 54-55 below);
21. States Parties should also ensure that their national services support adequately other functions entrusted to them, such as the ones stipulated in Article 13(a; b):
- Preventing transfers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likely to promote the illicit import or export of such property
 - Ensuring cooperation between their competent services to facilitate restitutio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o its rightful owner.
22. In this context, since previous experiences have proven their efficacy, States Parties are also encouraged to create "specialized police and customs units" or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a pool of prosecutors or experts specialized in art-crime investigations,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recovery of stolen cultural property under constant cooperation with all the relevant authorities from the different branches and levels of government of the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shoul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uch units created in different States, as well as with UNODC, INTERPOL and WCO, and are encouraged to exchange good practice and if possible technical support on all the relevant means and methods used for the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cultural propert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fight against clandestine excavations of archaeological site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nhance police activities to prevent illicit excavations or research in archaeological, paleontological and underwater sites, adopting for their surveillance, in accordance with the particular situations, the appropriate physical and technological measures. States Parties should also promote the exchanges of police and law enforcement experiences,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investigating experience by specialized units having multi-year practice in the specific sector.
23. Article 14 states that each State Party should, as far as it is able, provide the national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its cultural heritage with an adequate budget. If necessary a fund should be set up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nsure that their national services support adequately all of the functions given to them. States Parties are also encourag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upport of these national efforts.

Legislation (Article 5(a))

24. Article 5(a) requires States Parties to adopt appropriate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particularly prevention of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States Parties may seek assistance or advice for the making of such legislation from UNESCO.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view their legislation periodically to ensure that it integrat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best practice.
25. In fulfilling their duty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several States have enacted explicit laws on State ownership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even when it remains officially undiscovered or is otherwise unrecorded. State ownership laws constitute the first barrier against looting and should prevent laundering and international trade in undocumented cultural property.
26. State ownership laws cannot fulfill their protective purpose or facilitate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f the removal of the relevant cultural prope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concerned State without its express consent as rightful owner is not internationally regarded as theft of public property. Thus, when a State has declared ownership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States Parties are,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encouraged to consider the illicit removal of that cultural prope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dispossessed State as theft of public property, where such demonstration of ownership is necessary in order to allow for its return.
27.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recall that, following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56) and the ECOSOC Resolution 2008/23 on the need for States to assert State ownership of the archaeological subsoil, and as requested by the ICPRCP at its 16th session in 2010, the UNESCO and UNIDROIT Secretariats convened a group of experts from all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and mandated them to draft a text that would appropriately address the subject. The document was finalized and adopted at the ICPRCP at its 17th session in 2011.
28. These Model Provisions are intended to assist domestic legislative bodies in the establishment of a legislative framework for heritage protection, in States concerned, in order to adopt effective legislat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recognition of the State's ownership of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return in case of unlawful removal and to ensure that courts will have full knowledge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broad. The Model Provisions and their explanatory guidelines are included in Annex 1.
29. Consequently, States Parties may consider,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to apply in their legislation the six Model Provisions on State ownership drafted by the UNESCO/UNIDROIT Working Group and adopted by the UNESCO/ICPRCP in 2011.
30.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lso consider becoming Parties of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icit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Significant provisions which complement the 1970 Convention are among others a duty to return a stolen object, a clear test for due diligence in checking provenance and specific provisions for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31. It is important that all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be appropriately publicized so that collectors, dealers, museums and other concerned stakeholders with the movement of cultural objects are fully aware of the precise national provisions they should comply with. To ensure, as far as possible, this publicity and visibility of the laws/rul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UNESCO has established a Database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Laws, a source of information easily and freely accessibl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NESCO Database"). The development of this innovative tool was approved by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in 2003 and launched in 2005 by the 13th session of the ICPRCP.

32. The UNESCO database encompasses numerous types of national standard-setting instruments and related materials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nation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addresses of the official national websites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provide all relevant legislation, including their export and import laws and the legislation o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o the UNESCO Secretariat translated into English or French which are the working languages of UNESCO, for inclusion on the UNESCO Database and especially to keep it updated.

Inventories, inalienability and State ownership (Article 5(b))

33. A key step in the protection of States Parties' cultural property against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is establishing and keeping up to date, on the basis of a national inventory of protected cultural property, a list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cultural property whose export would constitute an impoverishment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34. These lists can include cultural property identified either by individual description or by category, considering that, in developing and recognizing inventories of such protected cultural property inventories, States Parties should bear in mi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Article 1, in particular regarding clandestinely excavated archaeological sites and other cultural property that poses special challenges in terms of their specific designation (see para. 12 above).
35. States Parties have the inalienable right to classify and declare certain cultural property as inalienable and, to enact State ownership laws on cultural property.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and unless evidence of the contrar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for restitution purpose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s appropriate, to consider cultural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a State as appertaining to the relevant official inventory of the owner Stat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ommon methodology based on existing methods and databases to ensure that such inventories are fully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procedures now available for tracking lost and stolen cultural objects in support of full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This common methodology may allow for the granting of a unique identity number not only to every object found in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sites and displayed or stored in museums but also to categories of types of cultural objects claimed by a State Party to be deriving from clandestine excavations, which may be categorized by region and epoch or any other suitable archaeological or paleontological reference.
36. Regarding movable cultural property in museums and religious or secular public monuments or similar institutions, including legally excavated archaeological sites and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the usage of the Object-ID Standard is recommended. The Object-ID Standard facilitates rapid transmission of basic information on lost and stolen cultural objects. The Standard provides for eight key identifying elements which, together with a photograph, make the identification of an object and its tracking much simpler. States Parties which do not have extensive inventories and need to elaborate them quickly to make use of the international procedures now available for tracking cultural objects are encouraged to use the Object-ID Standard. Other methods may be proposed, as appropriate,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of the international procedures now available for tracking lost and stolen cultural objects in support of full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which have communities which,

on religious or other grounds, are unwilling to photograph items used in sacred rituals are encouraged to discuss this issue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recovery of religious objects.

37. To facilitate the work of customs officers dealing with the import of cultural objects, it is imperative that they have precise information about protected cultural property and export bans in other States Parties. This can be done in two ways: either by means of an itemized list in case of documented protected cultural property or, in case of protected cultural property that cannot be itemized, by means of a list of categories with descriptive explanations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Such list(s) should be made readily available for the customs authorities of other States Partie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and entities.
38. The UNESCO database should be the first point of call for a customs service supervising imports because it will provide them with the legislation on the definition of what is a controlled export, what is an illegal export, and what needs to be discussed with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also have the legislation in an accessible language. National heritage services should be encouraged to publicize their protected cultural property nationally as well as to other States Parties so as to facilitate cooperation.

Expert institutions (Article 5(c))

39. In accordance to Article 5(c), States Parties have undertake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r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ions (museums, libraries, archives, laboratories, workshops, etc.) requir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property.
40.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national specialized institutions where circumstances permit or to make arrangements for access to specialist institutions outside their own country where necessary. Such institutions should be well staffed, well funded and well provisioned with appropriate infrastructure, including security infrastructure.
41. States Parties are also encouraged to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or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ions, including training workshops, capacity-building programs and infrastructure projects and share specialized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is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rough methods such as trainings, internships and publication researches.

Archaeology and protected areas (Article 5(d))

42.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protect by legislation and, if necessary, by other specific measures, sites of archaeological interest, including their movable items. Concerning the legislati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ection "Legislation" (see paras. 24-32 above) should be followed.
43. Specific activi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the archaeological herita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UNESCO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Principles Applicable to Archaeological Excavations (1956), as appropriate. The following principles of that Recommendation are relevant to efforts to prevent clandestine excavation:
 - The purpose of archaeological research lies in the public interest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y or art or science. Excavation should not take place for other purposes, except in the case of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described in th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1968) and subject to the preventive and corrective measures prescribed in para. 8 of that Recommendation.
- Protection should be extended to all objects belonging to a given period or of the minimum age fixed by law.
 - Each State Party should make archaeological explorations and excavation subject to prior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heritage authority.
 - Authority to carry out excavations should be granted only to institutions represented by qualified archaeologists or to persons offering unimpeachable scientific, moral and financial guarantees that the excavations will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 The contract should include provision for guarding, maintenanc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both the objects recovered and the site during and on completion of work.
 - An excavator or finder and the subsequent holders should be required to declare any object of archaeological character whether movable or immovable.
 - Objects recovered during the course of the work should be immediately photographed, registered and kept in a secure structure.
44. State Parties are encouraged, within the framework of applicable rules and existing mechanisms, to conduct archaeological surface surveys for different purposes, including for preventive purposes, and to enhance the inventory of national archaeological sites.
45. States Parties are also encouraged to establish provisions on the use of methods of ground-penetrating analysis such as the use of metal detectors. States are encouraged to prohibit, as appropriate, unauthorized use of such equipment for purposes of undertaking clandestine excavations on archaeological sites.
46. States directly affected are also encouraged to carefully guard archaeological sites and all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take sanctions against any person involved in theft and clandestine excavations of such sites.
47. States Parties should acknowledge that participation by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belonging to local communities in unauthorized excavations and looting of sites cannot be considered in isolation from the larger socio-economic conditions that those communities find themselves in. In protecting known archaeological sites from unauthorised excavation and pillage, States Parties are invited to encourage local communities, as appropriate,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State Parties are encouraged to raise awareness among local communities of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th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emphasizing to those communities the potential long-term economic benefits of such preservation – through such means as cultural tourism – over the short-term, limited economic benefits of participating in unauthorised excavation activities.
48.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specific means to protect underwater archaeological remains from looting and illicit traffic, including the reporting of discoveri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regulation of salvage and accidental find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cooperate in providing technical capacity in this regard.

Rules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rticle 5(e))

49. In accordance with Article 5(e), States Parties have undertaken to set up national services which have as a function establishing, for the benefit of those concerned (curators, collectors, antique dealers, etc.) rules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nd taking steps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ose rules.

50. Such rules may be developed on a national, regional, international, or professional level. Anthropologists, archaeologists, auctioneers, conservators, curators, dealers, restorers and all professional staff working with cultural objects are obliged to conform to these rules based on ethical principles which refuse service for cultural objects whose provenance appears faulty or dubious and should notify relevant authorities of this kind of artefacts when they have been asked to provide such service. The rules to be developed regarding acquisitions should be equally applied to collectors, dealers, curators, and others involved in the trade in cultural property so as not to disadvantage or exempt any single group. Also, such rules should be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to ensure maximum effectiveness.
51. In this regar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use codes of ethics develop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These include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Dealers in Cultural Property adopted by the ICPRCP in 1999. This Code incorporates the principles developed in the 1970 Convention and subsequently in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This Code also takes into account the experience of various national codes, the Code of the Con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Négociants d'Oeuvres d'Art (CINOA) as well as the Code of Professional Ethic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nsure that all dealers abide by this Code, both by imposing appropriate compulsory measures and by offering incentives to those dealers who do undertake to abide by its provisions, such as tax concession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monitor the success of such efforts and to continue developing, strengthening and enforcing appropriate rules for the benefit of curators, collectors, antique dealers, and others concerned, in conformity with the ethical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Education (Articles 5(f); 10)

52.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States Parties should use all appropriate means to prevent the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any State Party through education, awareness rising, information and vigilance. In particular, educational means and awareness rising and should be used to help local communities and the public in general to appreciate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threat to it from theft, clandestine excavations and illicit trafficking as well as its relation to the cultural identity and history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mankind.
53. In accordance with Article 5(f) the nation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should take educational measures to stimulate and develop respect for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States and should also spread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strengthen educational measures within their countries, with the cooperating services and with the public in other countries. This includes adequate coordina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t primary, secondary, tertiary level and lifelong learning programs to include teaching and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issues in their own curricula; through awareness-raising,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programs targeted at judges, prosecutors, customs officers, police, museums, dealers and others concerned; and through mass-media, museum, library, and other outreach programs.

Publicizing the disappearance of cultural objects (Article 5(g))

54. In accordance with Article 5(g), the nation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should see that appropriate publicity is given to the disappearance of cultural property. Publicity through mass communication can help investigation efforts, make an object untradeable, and can result directly in its recovery. Recognizing this situation, States Parties should publicize thefts and other forms of illegal conduct against cultural property and to make use of the mass media to publicize lost and stolen cultural objects.

55.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support and use databases and other mechanism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share information internationally about stolen works of art, including the INTERPOL Stolen Works of Art Database. States Parties are also encouraged to disseminate ICOM Red Lists to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especially police and customs services.

Prohibition and Prevention of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rticles 6, 7(a, b (i)), 8, 10(a); 13(a))

Export certificates (Article 6(a, b))

56. In accordance with Article 6(a), States Parties have undertaken to introduce an appropriate certificate in which the exporting State would specify that the export of an item of cultural property is authorized, which should accompany all items of cultural property expor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egislation. In accordance to Article 6(b), States Parties have also undertaken to prohibit the exportation of any cultural property from their territory unless accompanied by such a certificate. Customs authorities should check the export certificate both at the moment of export and import.
57. The certificate is an official document issued by the exporting country certifying that it has authorized the export of the cultural object. This document is essential for effective control, and implies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customs authorities of all countries involved in the movement of protected cultural property, including countries of transit. States Parties that apply import certificates should distribute such import certificates only for the cultural objects that have export certificates. Holding an import certificate without a corresponding export certificat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proof of good faith or title of ownership.
58. To ensure that such export certificates fulfill their intended purpose,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State Parties should prohibit the entering into their territory of cultural property,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that are not accompanied by such export certificate. Consequently, the prohibition of the export of cultural property without its corresponding export certificate should make illicit the import of that cultural property into another State Party, as the cultural property has not been exported legally from the country affected.
59. Export certificates should carry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name of the owner if appropriate; photographs of the item; a description of the item; its dimensions; its characteristics; the validity period of the export certificate; the State of destination; and the signature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es Parties issuing export certificates should maintain searchable records of such certificates, in the event that forgeries or unauthorized alterations are identified during import in a foreign State, and the issuing state is called upon to confirm whether the permit is genuine and accurate. In order to avoid forgerie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make available model forms of their export certificates to the relevant authorities of other states as well as to send, whenever feasible, copies of the issued export certificates to the relevant authorities of other States Parties. The States concerned are encouraged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channel of communication.
60. All cultural objects forming par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a State according to its legislation appearing in the art market of another State,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former and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latte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both States, have to have an export certificate issued by the State of

origin. In these cases, the exportation of said cultural objects without an export certificate will be considered illicit and as the basis for repor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of origin.

61. States Parties may als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for certificates for temporary export. Such temporary export certificates may be issued for exhibitions and return, for study by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or for any other reason such as conservation or restoration purposes. An export in violation of the conditions provided in a temporary export certificate should be considered as an illicit export.
62.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ssue, form and security of the export certificate and to ensure close liaison between the customs authorities, heritage managers and police officers for its control and reliability. The 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 developed jointly by the UNESCO and the WCO Secretariats, is a useful operational tool for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nex 2). It has been specially adapted to the growing phenomenon of cross-border movements of cultural objects and is useful to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customs services, enabling them to combat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more effectivel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use or adapt the model export certificate and to consider whether a temporary export certificate would suit their protective scheme. The Model Export Certificate may be improved if need be.

Prohibition of importing stolen cultural property (Article 7(b)(i))

63. In accordance with Article 7(b)(i), States Parties have undertaken to prohibit the import of cultural property stolen from a museum or a religious or secular public monument or similar institution in another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property is documented as appertaining to the inventory of that institution.

There are two important considerations to be made regarding this prohibition:

First, evidently,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hibition could be facilitated by making compulsory the requirement of an export certificate from the State of origin in order to make licit the import of any cultural property (see paras. 56-62 above). Moreover,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collaborate, especially via their customs authorities, as required and to diligently revise all their relevant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best practice to ensure effective import controls best practice at all entry point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tems and prevent smuggling. Furthermore, to assist State Parti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is prohibition, it is important that all known thefts and other forms of illegal conduct against cultural property are promptly publicized and reported to relevant law enforcement agencies as well as to INTERPOL.

Second, this prohibition should recall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perty, as defined in Article 1, especially in regard to clandestinely excavated archaeological sites and other cultural property that poses special challenges in terms of their specific designation (see para. 12 above). In these cases, States Parties' right to classify and declare certain cultural property inalienable which should therefore not be exported (as stated in Article 13(d)), should be fully respected.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s 6(b), 7(b); 8)

64.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States Parties undertake to impose penalties or administrative sanctions on any person responsible for infringing the prohibitions referred to under Articles 6(b) and 7(b) of the Convention. In any such case, if documentary proof of legal export cannot be provid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cultural property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such a cultural property should be retained by such

authorities and returned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ccording to the relevant national legal procedures.

65. As the Convention does not specify what sort of sanctions are to be applie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introduce in their national legislation, as appropriate, specific pe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all those who commit acts prohibited by the Convention. In addition,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penalize offences against cultural propert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by introducing penal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of such offences. The said national legislations should be included and timely updated in the UNESCO database.
66. States Parties to the 1970 Convention that are also States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are encouraged to make offences related to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a serious crim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UNTOC,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relevant penalties.
67. Due to their relevance for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strategies, legislation and cooperation mechanisms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and related offences in all situation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duly take into consideration, in implementing the 1970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s with Respect to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and Other Related Offences, as submitted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ollowing an intergovernmental process facilitat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and in close cooperation with UNESCO, UNIDROIT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ales on internet

68. At the time of the drafting of the 1970 Convention, Internet was not a channel for sales. The exponential growth of the use of the Internet to sell or traffic cultural objects which are stolen, clandestinely excavated from archaeological sites, or illegally exported or imported cultural objects,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and constitutes a major threat to cultural heritage.
69. Some States Parties are not sufficiently organized to supervise and quickly follow-up offers on the Internet that appear to be advertising protected cultural property. Most national cultural administrations do not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continually check offers on the Internet. Further, such websites advertise cultural property for a limited time, sometimes only a few hours, hence hindering the ability of the owner States to track such cultural property and to take the necessary actions. In addition, some websites play the role of intermediary in selling cultural property and consequently, they are not in possession of the cultural property offered for sale and cannot verify the validity of the documentation envisaged under the Convention for such cultural property. There is a n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to thoroughly screen all websites throughout the world to determine where offers of cultural property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1970 Convention are made and create an alert method of notifying the relevant State Parties on a daily basis. National authorities are encouraged to marshal the support of all Internet providers and promote the supervision by the public (specialists or other individuals interested in particular cultures) to be vigilant concerning Internet offers and to inform the administration when it appears that an object of national heritage not previously known is being offered on a website or when an object of foreign heritage origin is offered with a local address. Such notifications should be examined immediately by the cultural administration; if necessary, using experts (from universities, museums, libraries and other institutions) to verify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the item(s) being offered. In all the above-mentioned effort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screening of Internet auctions. When the evidence justifies it, the national

authorities should undertake prosecutions and enforce all appropriate provisions of the 1970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70. Following a recommendation adopted by the third annual meeting of the INTERPOL Expert Group on Stolen Cultural Property (7-8 March 2006,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INTERPOL, UNESCO and ICOM have developed a list of Basic Actions to counter the Increasing Illicit Sale of Cultural Objects through the Internet.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incorporate the Basic Actions as a tool within their national context. The Basic Actions currently developed are presented in Annex 3.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and means to keep improving the Basic Ac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coordination with the ICPRCP, or exploring other ways to contribute to countering the illicit sale of cultural property through the Internet.

Sales in auctions

71. Sales in auctions of cultural property claimed to have been subject to illicit trafficking have greatly affected the cultural heritage of many countries whose requests for return have not been met and have sometimes been used as a means to launder cultural property of illicit provenance. States where auctions are held are encouraged to give special attention to such sales, including by introducing national legislation, where appropriate, to ensure that the cultural property involved has been licitly imported, as documented by a legally issued export certificate, to inform the State of origin of the properties of any doubts in this regard, and to put in place the appropriate interim measures. In addition, on the petition of affected States, when an auction of protected cultural property is intended to take place, the Director General of UNESCO is invited to consider issuing a public statement concerning such commercial activity, highlighting the negative effects of such practices for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heritage.

Preventing transfers of ownership likely to promote illicit import or export, controlling trade by registers, and establishment of rules in conformity with ethical principles (Articles 13(a); 10(a); 7(a); 5(e))

72. Although this is a basic aim of the Convention described by the 1969 Preliminary Report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SCH/MD/3), there is no information in the Convention itself as to which such transfers are likely to promote illicit import or export of cultural property. However, it is illuminating to recall that the 1969 Report indicated that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of the item,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supplier, description and price of each item sold, as well as lack of information provided to the purchaser about an object's possible export prohibition, might well be a transaction likely to promot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a),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as appropriate for each country, to oblige antique dealers, subject to pe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to maintain a register recording such essential information. Control of such registers by the nation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ould make it possible to follow up an item of cultural property and perhaps retrace an item that has disappeared after being lost or stolen.
73. The drafters of the preliminary version of the Convention text in 1969 also pointed out: "It is essential that the new rules to be worked out for acquisitions shall place collectors and dealers on the same footing as curators; otherwise museums would be restrained for the sole benefit of illicit trade in cultural propert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nsure that equally constraining rules, whether legislative or ethical, include the same provisions for collectors and dealers as those being observed by museums or other similar institution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provenance of the cultural property.

74. In accordance with Article 7(a), States Parties undertake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to prevent museums and similar institutions within their territories from acquiring cultural property originating in another State Party which has been illegally ex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the States concerned and, whenever possible, to inform the State of origin Party to the Convention of an offer of such cultural property illegally removed from that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in both States.
75. States Parties establishing tax incentive regimes, benefits or government subsidies to encourage the acquisition of cultural property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such measures do not inadvertently facilitate the private collection, and subsequent acquisition by institutions, of material that has been the subject of illicit activity a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5(e), States Parties are also required to establish ethical rules and ensure their observance by curators, collectors, dealers and other similar actors.
77. Consequentl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the activities of dealers and museums through effective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o use all appropriate means to prevent illicit transactions.
78.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xplore further possible avenues for preventing transfers of ownership likely to promote illicit import or export. For instance, specific regulations can be enacted to ensure that cultural property such as archaeological objects that are claimed by the States of origin or that are subject to inalienability laws may not be transferred by purchase or assignment from public museums and institutions to private collectors, museums, institutions or businesses.
79. States Parties are also encouraged to undertake studies on the size and nature of illicit activities in the field of cultural property, and establish risk analysis with customs to prevent the illicit import and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s well as exchang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mong each other.
80. States are encouraged as well to make further use of all existing controls over markets and fairs where items of cultural property may be transferred and subsequently exported and to strengthen such controls as necessary to ensure the fulfilment of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81. The true value of cultural property remains to some degree unrecognized. This fact, added to dissociation from the caus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an ever-increasing demand for numerous types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trafficking, as well as lack of knowledge of the adverse effects of trafficking, hampers protective efforts. Therefore, different educational strategies may also be put in use to diminish the looting, trafficking and the demand for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objects, such as education in museums and exhibitions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damage done to the heritage by clandestine excavation, illicit trade and theft. With a view towards restitution, the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dopt appropriate national legal and policy frameworks to ensure that museums and other cultural institutions, whether public or private, do not exhibit or keep for other purposes imported cultural property that do not have a clear provenance and place of origin. The stylistic or aesthetic qualities of a cultural property can never compensate the loss of its context.

Cooperation on recovery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Articles 7(b)(ii); 13(b, c, d); 15)

82. In accordance with Article 7(b)(ii), the States Parties have undertaken,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of origin,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recover and return any stolen cultural property im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concerned, provided, however, that the requesting State shall pay just compensation to an innocent purchaser or to a person who has valid title to that property. Requests for recovery and return shall be made through diplomatic offices and shall be furnished, at the expense of the requesting Party, with the documentation and other evidence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rresponding claim.
83. Also,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b,c,d), the States Parties have undertaken, consistent with laws of each State, to ensure that their competent services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o its rightful owner; to admit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items of cultural property brought by or on behalf of the rightful owners; and to recognize the inalienable right of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to classify and declare certain cultural property as inalienable which should therefore not be exported, and to facilitate recovery of such property by the State concerned in cases where it has been exported.
84. Furthermore, Article 15 provides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States Parties thereto from concluding special agreements among themselves or from continuing to implement agreements already concluded regarding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removed, whatever the reason, from its territory of origin,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States concerned.
85. The above-referred provisions indicate the actions that States Parties should pursue for the restitution, recovery and return after an illicit import, export or transfer of ownership has taken place in spite of prohibition and prevention efforts. A number of issues should be clarified:
- Request of State Party
 - Evidence to establish a claim
 - Just compensation and due diligence
 - Cooperation for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 Admission of legal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cultural property
 - Non-retroactivity of the 1970 Convention,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nd resolution of claims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

Request of State Party (Article 7(b)(ii))

86. In accordance with Article 7(b)(ii), the request of a State Party to recover cultural property and have it return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1970 Convention shall be made through diplomatic offices.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ecourse that may contribute to the recovery or return under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or any other procedures for international legal assistance, which may be used in the course of criminal law proceedings. In this regard, States Parties should consider providing each other with the widest possible legal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cultural property offences, also in order to ensure effectiveness and speediness in the procedures. The provision of spontaneous inform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be encouraged.

Evidence to establish a claim (Article 7(b)(ii))

87. Also in accordance with Article 7(b)(ii), requests for recovery and return shall be furnished, at the expense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with the documentation and other evidence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rresponding claim. In this regard, States

Parties should bear in mi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perty protected by the requesting State, as defined in Article 1, in particular regarding clandestinely excavated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sites and other cultural property that poses special challenges in terms of their specific designation and their implications in terms of inventories (see paras. 12; 24-30; 33-35; 37; 100-103; 108).

88. The considerations made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importing stolen cultural property stipulated in Article 7(b)(i) and in the spirit of Article 2 are also fully relevant for the request of State Parties for recovery and return (see para. 63 above).
89. States Parties should bear in mind the implications of the prohibition of the export of a cultural property without its corresponding export certificate. The import of that object should be considered illicit, as it has not been exported legally from the country affected. Consequently, a State Party should be able to introduce a request for items of cultural property that have been clandestinely excavated from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sites or which pose special challenges in terms of their specific designation where the possessor or holder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export certificate of the cultural objects expor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both States concerned.
90. When a State has enacted laws on State ownership of certain cultural property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are, for recovery and restitution purposes, encouraged to duly take into account these laws.
91. States Parties may support their requests for the recovery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which is unlawfully excavated or lawfully excavated but unlawfully retained in another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with reasonable scientific reports, results of scientific analysis or experts' evaluations on provenance of the unlawfully excavated property.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conducting research for retrospective evidence, States Parties are strongly encouraged to consider accredited scientific studies and analysis as evidence.
92. Furthermore, States Parties sharing a particular culture with archaeological remains in more than one country are encouraged to consider joint actions for recovery. All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consider such cooperative efforts positively. Requesting States sharing a particular culture are encouraged to reach appropriate agreements on the cultural property recovered, considering solutions such as loans, exchanges of properties, etc.

Just compensation and due diligence (Article 7(b)(ii))

93.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is one area where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approaches. The 1970 Convention stipulates (Art. 7 (b) (ii)) "that the requesting State shall pay just compensation to an innocent purchaser or to a person who has valid title to that property." Developments since then have demonstrated that many States appreciate further the relevance of returning cultural property. They are also aware that States of origin very much resent requirements to pay for objects that they regard as owned by them and that many of them are unable to pay large sums for their return. In addition, States are now much mo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matters in their foreign relations. Recent practice suggests little use of the compensation provision of the Convention. Some States Parties have made reservations which, among others, exempt other States Parties from having to pay just compens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issue of compensation is not mentioned in Article 9 of the 1970 Convention and in many States it has not been raised in the context of illegally imported cultural objects.

94. In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ould use the criteria of due diligence in assessing purchaser innocence and validity of titles. In this regard, States Parties which seek compensation are encouraged to adopt recent best practice which can include the UNIDROIT standard of due diligence. Article 4.1 of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stipulates that the possessor of a stolen cultural object required to return it shall be entitled, at the time of its restitution, to payment of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possessor neither knew n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that the object was stolen and can prove that it exercised due diligence when acquiring the object.

Cooperation for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Article 13(b))

95.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b), States Parties have undertaken, consistent with laws of each State, to ensure that their competent services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earliest possible restitution of illicit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o its rightful owner.
96. In this context, and also considering the provision contained in Article 13(d), when a State Party, including those that have enacted laws on State ownership, is dispossessed of cultural property and seeks to recover it,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resort to and to exhaust all means at their disposal to provide the fullest cooperation. In order to expeditiously grant requests for the restitution of stolen public property to its rightful owner, such cooperation should include pondering, as appropriate, the requesting State's ownership laws. Moreover, due to the clandestine nature of the pillage of cultural property,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it may be materially impossible for dispossessed States to offer concrete data concerning thefts of State-owned cultural property. Therefore, State Parties are encouraged to attempt as far as possible to facilitate restitutions of State-owned cultural property even when the plundered sites remain unknown.
97. When it is impossible to furnish documentation and evidence concerning theft of State-owned cultural property,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considerations presented above, State Parties are encourag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n agreement by diplomatic channels concerning the expeditious admissibility and processing of the relevant restitution requests.
98. If the States concerned by the recovery have a specialized law enforcement unit in charge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his unit sh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National Central Bureaux of INTERPOL.

Admission of legal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cultural property (Article 13 (c))

99.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c), consistent with the laws of each State, the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admit actions for recovery of lost or stolen items of cultural property brought by or on behalf of the rightful owner(s). If no such action is available in a State Party, this Article requires it to create one. States Parties are therefore encouraged to check that there exists, in their national system, a legal proceeding available to an owner of lost or stolen items of cultural property, and, if there is none, to institute one.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 a timely manner and kept updated in the UNESCO database.

Non-retroactivity of the 1970 Convention,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nd resolution of claims (Article 21)

100. The general ru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Article 28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does not provide for retroactive application of

treaties. The provisions of the 1970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on 24 April 1972,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For the other Signatory States,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101.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1970 Convention, especially Article 7, a State Party can seek the recovery and return of any illegally exported, illegally removed or stolen cultural property imported into another State Party on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both States concerned.
102. However, the Convention does not in any way legitimize any illicit transaction of whatever nature which has taken pla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nor limit any right of a State or other person to make a claim under specific procedures or legal remedies available outside the framework of this Convention for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a cultural object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103. For items of illegally exported, illegally removed or stolen cultural property imported into another State Party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any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find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and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States Parties may also call on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Secretariat, particularly good offices, to help reaching a solution mutually acceptable by them.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

104. In cases where neither the 1970 UNESCO Convention no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can be applied and the bilateral discussions have failed or are suspended, UNESCO Member States may submit a request to the ICPRCP for the return or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of "fundamental signific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piritual values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people of a Member State or Associate Member of UNESCO and which has been lost as a result of colonial or foreign occupation or as a result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 Statute Article 3(2)), that they consider as having been wrongfully taken.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on cultural property, States may also use the Rules of Procedure for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cedure adopted by the ICPRCP at its 16th session in 2010.

Pillage of Archaeological and Ethnological materials (Article 9)

105.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ose cultural patrimony is in jeopardy from pillage of archaeological or ethnological materials may call upon other States Parties who are affected.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in these circumstances, to participate in a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to determine and to carry out the necessary concrete measures, including the control of exports and imports and international commerce in the specific materials concerned. Pending agreement each State concerned shall take provisional measures to the extent feasible to prevent irremediable injury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requesting State. UNESCO and all relevant cooperating partners may also contribute, upon same request, to such a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106.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is not required for a State Party to call upon another State Party for assistance. Such special

agreements are not in any way a precondition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the Convention but may be entered into following a request for assistance under Article 9. States Parties, UNESCO and all relevant cooperating partners are encouraged to respond expeditiously, with all possible means, to the call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whose cultural property is in jeopardy.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shall take provisional measures to the extent feasible to prevent irremediable injury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requesting State. This obligation should be adequately incorporated into national laws and best practices.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UNESCO database.

108. In applying Article 9, State Parties should consider, as appropriate, categorical lists as representing the protected cultural patrimony of another State Party. A categorical or representative list describes general types of cultural patrimony rather than specific objects. Categorical lists are particularly useful for describing types of objects that are typically found in clandestine excavation, trafficked, and therefore not document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109. As a complementary measure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abov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may be reached to stimulate more effective and broad collaborative responses based o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illaged States Parties' particular situation, as well as to enhance support and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improve capacity-building, training and protection on site. There is a n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9.
110.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make full use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9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clandestine excavations of their archaeological sites or in cases of natural disasters or conflict.

Occupation (Article 11)

111.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specifies that the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under compulsion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occupation of a country by a foreign power shall be regarded as illicit. States Parties must apply this principle when implement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if required under their respective system of national laws, States Parties should make this obligation clear in their legislation.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UNESCO Database.
112. As appropriate, synergies should be explored with the efforts undertaken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1954, its First and Second Protocols and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Second Protocol.

Special agreements (Article 15)

113.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nothing in the 1970 Convention prevents States from concluding special agreements among themselves on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removed, for whatever the reason, or from continuing implementing agreements already established before the Convention was adopted.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of offences that affect cultural heritage calls for a stronger and more systematic region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114.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incorporate into bilateral or regional agreements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developed in the 1970 UNESCO Convention,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the 200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and in the 2000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so as to ensure that such agreements embody the best protection for their cultural objects.
115. As indicated in para. 101 abov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may be reached to achieve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9.

Reports by States Parties (Article 16)

116.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submit reports to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o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they have adopted and other action they have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details of the experience acquired in this field.
117. Periodic reporting is valuable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the manner in which different national systems are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illicit traffic and can assist other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eriodic reporting also serves the important function of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18.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must be submitted every four years. To assist the national authorities, a simplified and practical questionnaire is at the disposal of the UNESCO Member States to ensure that their reports contain sufficiently precise information on the ratification process and legal and oper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119. In order to facilitate assessment of information, States Parties shall submit reports in English or French.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whenever possible, to submit their reports in both languages. These reports have to be sent in electronic as well as in printed form to:

Secretariat of the 1970 Convention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E-mail: convention1970@unesco.org

Secretariat to the 1970 Convention and to the Subsidiary Committee (Article 17)

120. The Secretariat of the 1970 Convention is appoin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and is provided by the Organization's Culture Sector. The Secretariat assists and collaborates with the States Parties,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and the Subsidiary Committee to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The Secretariat works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Sectors and Field Offices of UNESCO, as well as with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in the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 of cultural and archaeological property.

121.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seek advice and assistance from the Secretari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information and training; consultation and expert advice; coordination and good offices.
122. Among other contributions, the Secretariat may assist the State Parties by creating standard procedures to be followed when informed about clandestine excavations,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cultural property. These standard procedures may include the immediate publication of the incident and the cultural property involved on UNESCO's website. The Secretariat may also assist the State Parties by creating mechanisms of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art market in order to preven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e.g. auction houses, e-commerce). If necessary, States Parties may call for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Secretariat to support the presentation of requests for recovery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123. At the request of at least two States Parties that are engaged in a dispute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Secretariat may extend its good offices to reach a settlement between them. Such good offices may include technical assistance, negotiations, checking due diligence, etc. In the case in which it is only one of the States which asks for support, the Secretariat will offer its assistance to that State and may send a written request to the other State party to ask for its acquiescence or refusal for the Secretariat to exercise good offices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The good offices of the Secretariat also may be brought to bear in disputes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th auction houses and e-commerce sponsors. It may also seek to enhance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the art market in the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 of all kinds of cultural property, with special concern for objects of archaeological and ethnological significance.
124. The Secretariat's main tasks are:
- Organizing of the statutory meetings;
 - Providing leg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s Par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 Promoting the 1970 Convention through advocacy and good offices, the organization of policy and prospective dialogues and forums,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States Parties, the specialized public and the general public, an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regional or national);
 - Cooperating with partner Organizations; and,
 - Assisting in the preservation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s caused by natural disaster or conflict, upon the request of the concerned State(s).
125. The Secretariat may, on its own initiative or on the initiative of the Committee:
- Conduct research and publish studies on matters relevant to the illicit traffic of cultural property;
 - Call on the cooperation of any competent, and recognized by UNESCO and State Par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 Make proposals to States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to the 1970 Convention (Articles 20 and 24)

126. UNESCO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become Parties to the Convention. Model instruments for ratification/acceptance and accession are included as Annex 4. The

original signed version of the instrument shall be deposited with to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127. The Director General is invited to highlight the information about new ratifications/acceptances and accessions and to actively promote the broadest participation in the Convention.

Reservations

128. A "reservation" means a unilateral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made by a State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whereby it purports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 in their application to that Stat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69 (Art. 2 (d)).
129. States Parties which have lodged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are encouraged to withdraw any kind of reservations.

Cooperating partners in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130. Partners for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may be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ve an interest, involvement and appropriate competence and expertis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objects and are formally recognized by UNESCO as having specialized appropriate skills and proven track records. These partners include INTERPOL, UNIDROIT, UNODC, WCO and ICOM. Relevant information on each of these five cooperating partners and its specific links to the 1970 Convention is provided in Annex 5.
131. States Parties are invited to make use of the tools offered by all international partners, as possib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in the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 of cultural and archaeological property and against the clandestine excavations of archaeological sites.
134. Other partners may include local,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OMOS, ICCROM, Europol and national specialized police and customs bodies.

Convent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135. The 1970 Convention has important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other UNESCO Culture Conventions, as well as to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Relevant information on each of these Conventions and its specific links to the 1970 Convention is provided in Annex 6.
136.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ctively strengthen the synergies of these instruments in support of the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 of cultural property and against the clandestine excavations of archaeological and paleontological sites.

List of proposed annexes

- Annex 1 Model Provisions on State Ownership of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
- Annex 2 UNESCO/WCO 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
- Annex 3 Basic Actions concerning Cultural Objects being offered for Sale over the Internet
- Annex 4 Model instruments for ratification/acceptance and accession to the Convention
- Annex 5 Cooperating partners for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Annex 6 Links to other Conventions related to the 1970 Conven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a Educación,
la Ciencia y la Cultura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образования,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منظمة الأمم المتحدة
للتربية والعلم والثقافة

联合国教育、
科学及文化组织

ANNEX 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Institut international pour l'unification du droit privé

Model Provisions on State Ownership of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¹

Provision 1 – General Duty

The State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 and to preserve them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ision 2 – Definition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 include objects that, consistently with national law, are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are located in the soil or underwater.

Provision 3 – State Ownership

Undiscovered cultural objects are owned by the State, provided there is no prior existing ownership.

Provision 4 – Illicit excavation or retention

Cultural objects excavated contrary to the law or licitly excavated but illicitly retained are deemed to be stolen objects.

Provision 5 – Inalienability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a cultural object deemed to be stolen under Provision 4 is null and void, unless it can be established that the transferor had a valid title to the object at the time of the transfer.

Provision 6 – International enfor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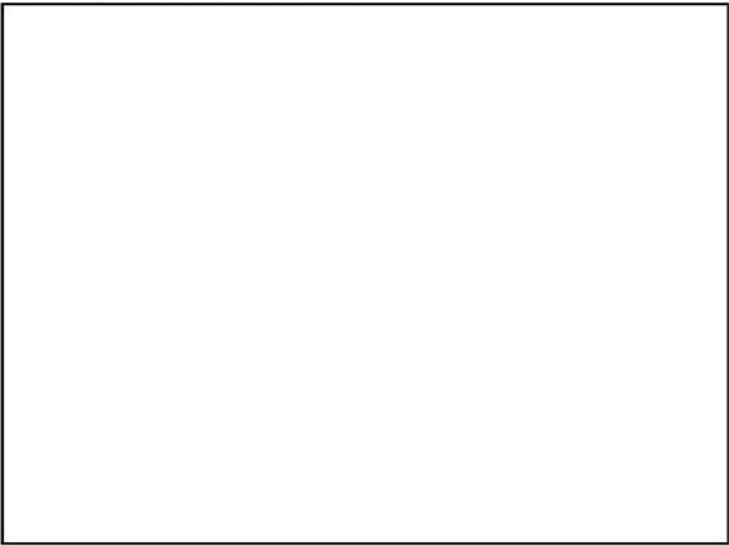
For the purposes of ensuring the return or the restitution to the enacting State of cultural objects excavated contrary to the law or licitly excavated but illicitly retained, such objects shall be deemed stolen objects.

¹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refer to: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CLT/pdf/UNESCO-UNIDROIT_Model_Provisions_en.pdf

ANNEX 2

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

Each heading must be completed, except headings 2, 12 and 18 if they do not apply

Application	1. Beneficiary applicant requesting the exportation (name and address)	2. Beneficiary applicant's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3. Issuing authority (name and address)	4. Export authorization No. _____ Duration: _____ From : ___ / ___ / ___ Country of destination :
	5. Initial consignee (and subsequent consignee(s)) if known (name and address)	6. Type of export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export <input type="checkbox"/> Temporary export Time limit for re-importation : ___ / ___ / ___
	7. Owner of the cultural object (name and address)	
8. Photograph of the cultural object : 9 x 12 centimeters minimum		
		
(Continue on supplementary pages if necessary. Validate with the issuing authority's signature and stamp)		

<p>9. Dimensions and net weight of the cultural object (possibly with its stand)</p>	<p>10. Inventory number or other identification</p> <p><input type="checkbox"/> Inventory : No.</p> <p><input type="checkbox"/> No existing inventory</p> <p><input type="checkbox"/> Other classification : No.</p> <p><input type="checkbox"/> No other existing classification</p>
<p>11. Description of the cultural object</p> <p>(a) Type : (e) Geographical origin :</p> <p>(b) Author /co-author: (f) Dating :</p> <p>(c) Title or, failing that, subject matter : (g) Other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purposes:</p> <p>(d) Scientific name if there is one:</p>	
<p>12. Number of cultural objects in the collection</p> <p>Presented :</p> <p>Not presented :</p>	<p>13. Copy, attribution, period, studio and/or style</p>
<p>14. Material(s) and Technique(s)</p>	
<p>15. Actual value of the cultural object or, failing that, estimated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in the country of exportation :</p>	
<p>16. Legal status and use of the cultural object</p> <p>Status: <input type="checkbox"/> Sold <input type="checkbox"/> Loaned <input type="checkbox"/> Exchanged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Exported for: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Appraisal <input type="checkbox"/> Research <input type="checkbox"/> Repair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17. Attached documents /special identification methods</p> <p><input type="checkbox"/> Photograph (colour) <input type="checkbox"/> Bibliography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input type="checkbox"/> List <input type="checkbox"/> Catalogue</p> <p><input type="checkbox"/> Seals <input type="checkbox"/> Valuation documents</p>	
<p>18. Supplementary pages : number of supplementary pages if applicable (in figures and letters)</p>	
<p>19. Application</p> <p>I hereby apply for an export authorization for the cultural object described above and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is true.</p> <p>Place and date : Signature :</p> <p>(Position and name of signatory)</p>	<p>20.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p> <p>Place and date :</p>

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

Each heading must be completed, except headings 2, 12 and 18 if they do not apply

Applicant's copy	2. 1. Beneficiary applicant requesting the exportation (name and address)	2. Beneficiary applicant's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3. Issuing authority (name and address)	4. Export authorization No. _____ Duration: _____ From : ___ / ___ / ___ Country of destination :
	5. Initial consignee (and subsequent consignee(s)) if known (name and address)	6. Type of export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export <input type="checkbox"/> Temporary export Time limit for re-importation : ___ / ___ / ___
	7. Owner of the cultural object (name and address)	
8. Photograph of the cultural object: 9 x 12 centimeters minimu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height: 200px;"></div>		
(Continue on supplementary pages if necessary. Validate with the issuing authority's signature and stamp)		

<p>9. Dimensions and net weight of the cultural object (possibly with its stand)</p>	<p>10. Inventory number or other identification</p> <p><input type="checkbox"/> Inventory : No.</p> <p><input type="checkbox"/> No existing inventory</p> <p><input type="checkbox"/> Other classification : No.</p> <p><input type="checkbox"/> No other existing classification</p>
<p>11. Description of the cultural object</p> <p>(a) Type : (e) Geographical origin :</p> <p>(b) Author /co-author: (f) Dating :</p> <p>(c) Title or, failing that, subject matter : (g) Other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purposes:</p> <p>(d) Scientific name (if there is one):</p>	
<p>12. Number of cultural objects in the collection</p> <p>Presented :</p> <p>Not presented :</p>	<p>13. Copy, attribution, period, studio and/or style</p>
<p>14. Material(s) and Technique(s)</p>	
<p>15. Actual value of the cultural object or, failing that, estimated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in the country of exportation :</p>	
<p>16. Legal status and use of the cultural object</p> <p>Status: <input type="checkbox"/> Sold <input type="checkbox"/> Loaned <input type="checkbox"/> Exchanged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Exported for: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Appraisal <input type="checkbox"/> Research <input type="checkbox"/> Repair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17. Attached documents /special identification methods</p> <p><input type="checkbox"/> Photograph (colour) <input type="checkbox"/> Bibliography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input type="checkbox"/> List <input type="checkbox"/> Catalogue</p> <p><input type="checkbox"/> Seals <input type="checkbox"/> Valuation documents</p>	
<p>18. Supplementary pages : number of supplementary pages if applicable (in figures and letters)</p>	
<p>19. Endorsement by Customs Export Office</p> <p style="text-align: center;">Signature and stamp :</p> <p>Customs office :</p> <p>Country :</p> <p>Export document No. :</p> <p>Dated:</p>	<p>20.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p> <p style="text-align: center;">Place and date :</p>

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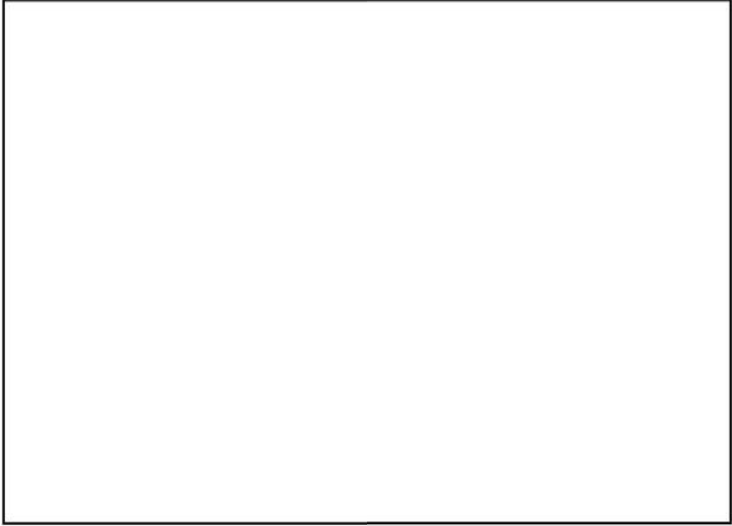
Each heading must be completed, except headings 2, 12 and 18 if they do not apply

3	1. Beneficiary applicant requesting the exportation (name and address)	2. Beneficiary applicant's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3. Issuing authority (name and address)	4. Export authorization No. _____ Duration: _____ From : ___ / ___ / ___ Country of destination :
	5. Initial consignee (and subsequent consignee(s)) if known (name and address)	6. Type of export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export <input type="checkbox"/> Temporary export Time limit for re-importation : ___ / ___ / ___
	7. Owner of the cultural object (name and address)	
8. Photograph of the cultural object: 9 x 12 centimeters minimu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height: 200px;"></div>		
(Continue on supplementary pages if necessary. Validate with the issuing authority's signature and stamp).		

<p>9. Dimensions and net weight of the cultural object (possibly with its stand)</p>	<p>10. Inventory number or other identification</p> <p><input type="checkbox"/> Inventory : No.</p> <p><input type="checkbox"/> No existing inventory</p> <p><input type="checkbox"/> Other classification : No.</p> <p><input type="checkbox"/> No other existing classification</p>
<p>11. Description of the cultural object</p> <p>(a) Type : (e) Geographical origin :</p> <p>(b) Author /co-author: (f) Dating :</p> <p>(c) Title or, failing that, subject matter : (g) Other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purposes:</p> <p>(d) Scientific name (if there is one):</p>	
<p>12. Number of cultural objects in the collection</p> <p>Presented :</p> <p>Not presented :</p>	<p>13. Copy, attribution, period, studio and/or style</p>
<p>14. Material(s) and Technique(s)</p>	
<p>15. Actual value of the cultural object or, failing that, estimated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in the country of exportation :</p>	
<p>16. Legal status and use of the cultural object</p> <p>Status: <input type="checkbox"/> Sold <input type="checkbox"/> Loaned <input type="checkbox"/> Exchanged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Exported for: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Appraisal <input type="checkbox"/> Research <input type="checkbox"/> Repair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17. Attached documents /special identification methods</p> <p><input type="checkbox"/> Photograph (colour) <input type="checkbox"/> Bibliography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input type="checkbox"/> List <input type="checkbox"/> Catalogue</p> <p><input type="checkbox"/> Seals <input type="checkbox"/> Valuation documents</p>	
<p>18. Supplementary pages : number of supplementary pages if applicable (in figures and letters)</p>	
<p>19. Endorsement by Customs Export Office</p> <p style="text-align: center;">Signature and stamp</p> <p>Customs office : Country : Export document No.: Dated:</p>	<p>20.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p> <p>Place and date :</p>
<p>21. Customs exit office</p> <p>Stamp and date :</p>	

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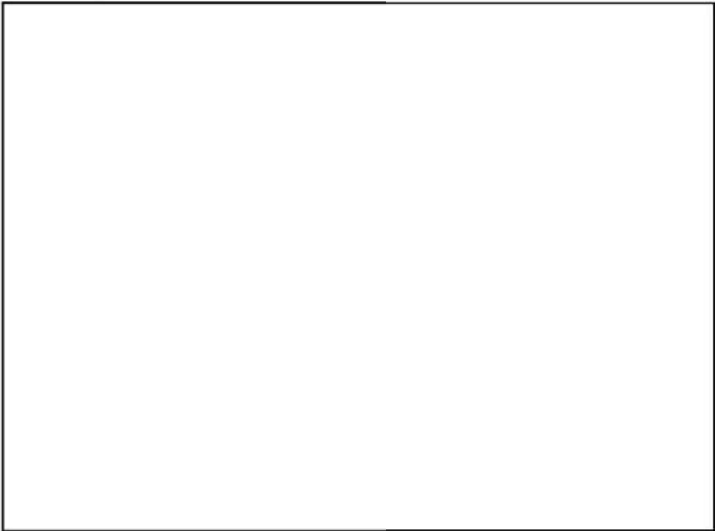
Each heading must be completed, except headings 2, 12 and 18 if they do not apply

4 Copy for Customs authorities at exportation	1. Beneficiary applicant requesting the exportation (name and address)	2. Beneficiary applicant's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3. Issuing authority (name and address)	4. Export authorization No. Duration: _____ From : ___ / ___ / ___ Country of destination :
	5. Initial consignee (and subsequent consignee(s) if known) (name and address)	6. Type of export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export <input type="checkbox"/> Temporary export Time limit for re-importation : ___ / ___ / ___
	7. Owner of the cultural object (name and address)	
8. Photograph of the cultural object : 9 x 12 centimeters minimum		
		
(Continue on supplementary pages if necessary. Validate with the issuing authority's signature and stamp).		

<p>9. Dimensions and net weight of the cultural object (possibly with its stand)</p>	<p>10. Inventory number or other identification</p> <p><input type="checkbox"/> Inventory : No.</p> <p><input type="checkbox"/> No existing inventory</p> <p><input type="checkbox"/> Other classification : No.</p> <p><input type="checkbox"/> No other existing classification</p>
<p>11. Description of the cultural object</p> <p>(a) Type : (e) Geographical origin :</p> <p>(b) Author /co-author: (f) Dating :</p> <p>(c) Title or, failing that, subject matter : (g) Other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purposes:</p> <p>(d) Scientific name (if there is one):</p>	
<p>12. Number of cultural objects in the collection</p> <p>Presented :</p> <p>Not presented :</p>	<p>13. Copy, attribution, period, studio and/or style</p>
<p>14. Material(s) and Technique(s)</p>	
<p>15. Actual value of the cultural object or, failing that, estimated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in the country of exportation :</p>	
<p>16. Legal status and use of the cultural object</p> <p>Status: <input type="checkbox"/> Sold <input type="checkbox"/> Loaned <input type="checkbox"/> Exchanged <input type="checkbox"/> Other (to be specified) :</p> <p>Exported for: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Appraisal <input type="checkbox"/> Research <input type="checkbox"/> Repair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17. Attached documents /special identification methods</p> <p><input type="checkbox"/> Photograph (colour) <input type="checkbox"/> Bibliography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input type="checkbox"/> List <input type="checkbox"/> Catalogue</p> <p><input type="checkbox"/> Seals <input type="checkbox"/> Valuation documents</p>	
<p>18. Supplementary pages : number of supplementary pages if applicable (in figures and letters)</p>	
<p>19. Endorsement by Customs Export Office</p> <p style="text-align: center;">Signature and stamp</p> <p>Customs office : Country : Export document No. : Dated:</p>	<p>20.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p> <p>Place and date :</p>
<p>21. Customs exit office</p> <p>Stamp and date :</p>	

Model Export Certificate For Cultural Objects

Each heading must be completed, except headings 2, 12 and 18 if they do not apply

5 Copy for authorities at importation	1. Beneficiary applicant requesting the exportation (name and address)	2. Beneficiary applicant's representative (name and address)
	3. Issuing authority (name and address)	4. Export authorization No. _____ Duration: _____ From : ___ / ___ / ___ Country of destination :
	5. Initial consignee (and subsequent consignee(s) if known) (name and address)	6. Type of export <input type="checkbox"/> Permanent export <input type="checkbox"/> Temporary export Time limit for re-importation : ___ / ___ / ___
	7. Owner of the cultural object (name and address)	
8. Photograph of the cultural object : 9 x 12 centimeters minimum		
		
(Continue on supplementary pages if necessary. Validate with the issuing authority's signature and stamp).		

<p>9. Dimensions and net weight of the cultural object (possibly with its stand)</p>	<p>10. Inventory number or other identification</p> <p><input type="checkbox"/> Inventory : No.</p> <p><input type="checkbox"/> No existing inventory</p> <p><input type="checkbox"/> Other classification : No.</p> <p><input type="checkbox"/> No other existing classification</p>
<p>11. Description of the cultural object</p> <p>(a) Type : (e) Geographical origin :</p> <p>(b) Author /co-author: (f) Dating :</p> <p>(c) Title or, failing that, subject matter : (g) Other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purposes:</p> <p>(d) Scientific name (if there is one):</p>	
<p>12. Number of cultural objects in the collection</p> <p>Presented :</p> <p>Not presented :</p>	<p>13. Copy, attribution, period, studio and/or style</p>
<p>14. Material(s) and Technique(s)</p>	
<p>15. Actual value of the cultural object or, failing that, estimated value based on reasonable criteria in the country of exportation :</p>	
<p>16. Legal status and use of the cultural object</p> <p>Status: <input type="checkbox"/> Sold <input type="checkbox"/> Loaned <input type="checkbox"/> Exchanged <input type="checkbox"/> Other (to be specified) :</p> <p>Exported for: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Appraisal <input type="checkbox"/> Research <input type="checkbox"/> Repair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17. Attached documents /special identification methods</p> <p><input type="checkbox"/> Photograph (colour) <input type="checkbox"/> Bibliography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p> <p><input type="checkbox"/> List <input type="checkbox"/> Catalogue</p> <p><input type="checkbox"/> Seals <input type="checkbox"/> Valuation documents</p>	
<p>18. Supplementary pages : number of supplementary pages if applicable (in figures and letters)</p>	
<p>19. Endorsement by Customs Export Office</p> <p style="text-align: center;">Signature and stamp</p> <p>Customs office : Country : Export document No. : Dated:</p>	<p>20.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p> <p>Place and date :</p>
<p>21. Customs exit office</p> <p>Stamp and date :</p>	

ANNEX 3

Basic Actions concerning Cultural Objects being offered for Sale over the Internet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7 place Fontenoy
75732 Paris Cedex 15
France

Tél. : +33 (0)1 45 68 44 04
Télécopie : +33 (0)1 45 68 55 96
Courriel : e.planche@unesco.org

ICPO-INTERPOL
200, Quai Charles de Gaulle
69006 Lyon
France

Tél. : +33 (0)4 72 44 7000
Télécopie : +33 (0)4 72 44 7632
Courriel : woa@interpol.int

Conseil international des musées
Maison de l'UNESCO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Tél. : +33 (0)1 47 34 05 00
Télécopie : +33 (0)4 43 06 78 62
Courriel : secretariat@icom.museum

As cultural property is a unique testimony to the culture and identity of a people and an irreplaceable asset for its future, INTERPOL, UNESCO and ICOM are concerned by the ongoing increase of illicit trafficking in such property. In particular, as recently confirmed by an INTERPOL survey carried out in 56 Member States, it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at the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via the Internet is a very serious and growing problem, both for countries of "origin" (where the theft has occurred) and destination countries.

It is well known that the significance, provenance and authenticity of the cultural objects offered for sale on the Internet vary considerably. Some have historical, artistic or cultural value, others do not; their origin can be legal or illicit, and some are genuine, while others are forgeries. Most countries do not have the means to review all Internet sales nor to investigate all offers of a suspicious nature. However, all countries should attempt to respond to the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via the Internet by taking the appropriate measures.

These issues were discussed at the third annual meeting of the *INTERPOL Expert Group on Stolen Cultural Property* held at the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on 7 and 8 March 2006.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monitoring the Internet poses a number of challenges due to:

- (a) the sheer volume and diversity of items offered for sale;
- (b) the variety of venues or platforms for the sale of cultural objects on the Internet;
- (c) missing information that hinders proper identification of objects;
- (d) the limited reaction time available owing to short bidding periods during a sale;
- (e) the legal position of the companies, entities or individuals serving as platforms for the trade in cultural objects over the Internet;
- (f) the complex issues related to jurisdiction concerning these sales; and
- (g) the fact that the objects sold are often located in a count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ternet platform.

Following a recommendation adopted by this meeting, INTERPOL, UNESCO and ICOM have therefore developed the subsequent list of **Basic Actions to counter the Increasing Illicit Sale of Cultural Objects through the Internet**¹.

The Member States of INTERPOL and UNESCO and the States with ICOM National Committees are invited to:

1. Strongly encourage Internet sales platforms to post the following disclaimer on all their cultural objects sales pages:

"With regard to cultural objects proposed for sale, and before buying them, buyers are advised to: i) check and request a verification of the licit provenance of the object, including documents providing evidence of legal export (and possibly import) of the object likely to have been imported; ii) request evidence of the seller's legal title. In case of doubt, check primarily with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INTERPOL, and possibly with UNESCO or ICOM"
2. Request Internet platforms to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o cooperate with them on investigations of suspicious sales offers of cultural objects;
3. Establish a central authority (within national police forces or other), which is also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charge of permanently checking and monitoring sales of cultural objects via the Internet;

¹ The above-mentioned Basic Actions are neither "Recommendations", nor "Declarations, Charters and similar standard-setting instrument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nor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Interpol.

4. Cooperate with national and foreign police forces and INTERPOL as well as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f other States concerned, in order to:
 - (a) Insure that any theft and/or any illegal appropriation of cultural objects be reported to INTERPOL National Central Bureau, in order to enable relevant information to be posted on the INTERPOL Stolen Works of Art Database;
 - (b) Make information available about theft and/or any illegal appropriation of cultural objects, as well as about any subsequent sale of such cultural objects, from or to national territories, using the Internet;
 - (c) Facilitate rapid identification of cultural objects by:
 - i) ensuring updated inventories with photographs of cultural objects, or at least their description, for example through the Object ID standard²;
 - ii) maintaining a list of recommended experts;
 - (d) Use all the tools at their disposal to conduct checks of suspicious cultural property, in particular the INTERPOL Stolen Works of Art Database and the corresponding INTERPOL DVD;
 - (e) Track and prosecute criminal activities related to the sale of cultural objects on the Internet and inform the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of major investigations involving several countries.
5. Maintain statistics and register information on the checks conducted concerning the sale of cultural objects via the Internet, the vendors in question and the results obtained;
6. Establish legal measures to immediately seize cultural objects in case of a reasonable doubt concerning their licit provenance;
7. Assure the return of seized objects of illicit provenance to their rightful owners.

² The Object ID,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art, antiques, and antiquities, as well as a version with supplementary information (endorsed by ICCM, Getty and UNESCO), are available on the ICOM website (<http://icom.museum/object-id>).

ANNEX 4

Model instruments for ratification/acceptance and accession to the Convention

INSTRUMENT OF RATIFICATION

Whereas the ... (*title of the Convention*) ... is open to ratification by ... (*name of the country*) ..., under the terms of its Article ... (*number of applicable Article*),

Now therefore the Government of ... (*name of the country*) ... having considered the aforesaid Convention hereby ratify the said Convention and undertake faithfully to carry out the stipulations therein contained.

IN WITNESS THEREOF, I have signed and sealed this instrument.

Done at ... (*place*) ..., this day of ... (*date*) ...

(*Signature*)

Head of State or Head of Government o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al*)

ANNEX 5

Cooperating partners for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UNESCO constantly strengthen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with its partners. All have a crucial role in prevention by providing information, education, training, but also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ools to facilitate the return and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assistance in these objectives.



Therefore, UNESCO works regularly and closely with its partners, in particular when dealing with matters of theft and illicit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cross the world, as well as the modalities for such property's return. This cooperation is also reflected by regular technical and practical meetings and produces tangible results, such as the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improvements to the legal and operational framework in the fight against looting and the illicit transfer of cultural property.



Partners for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 in cultural property may be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have an interest, involvement, and relevant competence and expertise in the protection of cultural objects and are recognized by UNESCO as having appropriate specialized skills and proven track records. They are particularly invited to participate in expert studies and regional meetings and workshops organized by UNESCO.

These partners include principally UNIDROIT, INTERPOL, UNODC, WCO, and ICOM, with which the 1970 Secretariat works on a daily basis. Other partners may include local,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OMOS, ICCROM, Europol and national specialized police and customs bodies, or other partners for ad hoc projects.

With the support of the Subsidiary Committee,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explore ways and means of contributing to this cooperative network. They are also invited to make use of the tools offered by all international partners, as possib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0 Convention in the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 of cultural and archaeological property and particularly against the clandestine excavations of archaeological sites

	<p>INTERPOL I.C.P.O. –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Works of Art Unit Drugs and Criminal Organizations Sub-directorate 200, quai Charles de Gaulle 69006 Lyon France woa@interpol.int</p> <p>Concerning stolen works of art, INTERPOL provides a number of tools that facilitate the global exchange of information on criminal actions involving works of art, the details of the stolen artworks and the individuals involved. In this area, INTERPOL serves as a central repository for this data, providing analysis to</p>
---	--

	<p>identify trends in art thefts such as the proliferation of counterfeit, faked or forged works; or the use of the Internet for selling works of dubious background. Among the most important tools and services available to law enforcement, cultural agencies and the public are: website alerts and media releases, posters of the most wanted works of art, as well as the Stolen Works of Art Database. The specific role of INTERPOL in relation to the 1970 Convention is described in th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UNESCO and INTERPOL signed in 1999. This Cooperation Agreement contains provisions on mutual consultations, exchange of information, reciprocal represent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addition, in 2003,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is Cooperation Agreement, UNESCO and INTERPOL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raqi cultural property.</p>
	<p>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28, Via Panisperna 00184 Roma Italy info@unidroit.org</p> <p>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is an independ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ts purpose is to study needs and methods for modernising, harmonising and co-ordinating private law as between States and groups of States and to formulate uniform law instruments, principles and rules to achieve those objectives.</p> <p>The specific role of UNIDROIT in relation to the 1970 Convention includes: working on the private law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 in cultural objects (on the basis of an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UNESCO and UNIDROIT in 1954 containing provisions specifically on mutual consultations, exchange of information, reciprocal represent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monitoring and promoting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NIDROIT Convention"), participating in expert studies and co-organizing with UNESCO regional meetings or workshops for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p>
	<p>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Vienna International Centre PO Box 500 A 1400 Vienna Austria http://www.unodc.org</p> <p>UNODC is mandated to assist Member States in their struggle against drug trafficking, crime and terrorism. In the Millennium Declaration, Member States also resolved to intensify efforts to fight transnational crime in all its dimensions, to redouble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commitment to counter the world drug problem and to take concerted action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in its resolutions 2010/19 and 2011/42, and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66/180, requested UNODC, within its mandate,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and in close cooperation, as appropriate, with UNESCO, INTERPOL and other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nclude in its work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specific guidelines for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s with respect to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The specific role of UNODC in relation to the 1970 Convention</p>

	<p>includes: working on the criminal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strengthen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p>
	<p>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Rue du marché, 30 B-1210 Brussels Belgium information@wcoomd.org communication@wcoomd.org</p> <p>WCO provides leadership in Customs matter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advises customs administrations worldwide on management practices, tools and techniques to enhance their capacity to implement efficient and effective cross-border controls along with standardized and harmonized procedures to facilitate legitimate trade and travel and to interdict illicit transactions and activities. The specific role of WCO in relation to the 1970 Convention includes: being a partner of UNESCO in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s border control is the front line defence against illicit traffic of arms, drugs, currency but also cultural property. Indeed, alert customs officials play a key role in identifying and holding cultural objects which are falsely declared or identifiable as a result of looting.</p>
	<p>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General Secretariat UNESCO House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http://icom.museum/</p> <p>ICOM is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resenting museums and museum professionals. ICOM assists members of the museum community in their mission to preserve, conserve and share cultural heritage. The specific role of ICOM in relation to the 1970 Convention includes: providing advice to UNESCO on museum matters, training museum staff to protect the cultural objects by offering tools to make inventories of the collections and publishing international guidelines of security, publicizing endangered heritage (particularly by means of the Red Lists, see paragraphs 133-134) or stolen works of art (particularly by means of the One Hundred Missing Objects collection).</p>



ANNEX 6

Links to other Conventions related to the 1970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Convention) has important complementary relationships with other UNESCO Culture Conventions, as well as to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Convention also interacts with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jor interac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One interaction of the 1970 Conven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s with the other UNESCO culture conventions. One of these, the **195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Hague Convention) and its First Protocol (1954) and Second Protocol (1999)**, lay out rule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during times of war. The Hague Convention essentially attempts to safeguard cultural heritage on the front end while the 1970 Convention establishes procedures for the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once they have been removed from the possession of their rightful owner. Another UNESCO cultural convention that the 1970 Convention is linked to is the **2001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 Convention)**. The 2001 Convention complements the 1970 Convention by expanding the area of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to underwater heritage, as well. Additionally, by encouraging member States to integrate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nto regional planning programmes, setting up staff and services at their sites, undertaking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ervation research, the **1972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contributes to assert the preventive measures enshrined in the 1970 Convention.
- The second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inks of the 1970 Convention to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is with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e 1995 Convention)**. UNESCO asked UNIDROIT to draft the 1995 Convention to compliment the 1970 Convention and provide a model for uniform treatment of restitution for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objects. Convention covers all stolen cultural objects, not just inventoried and declared ones. The 1995 Convention strengthens the provisions of the 1970 Convention of by formulating common minimum rule and standards on restitution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hese minimum standards help ensure the fulfillment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1970 Convention.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illicit-trafficking-of-cultural-property/1995-unidroit-convention/>). The UNIDROIT Convention represents a middle road between diametrically opposed positions: one favouring maximum freedom of trade and the other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The aim of the UNIDROIT Convention is twofold: first, it seeks to deal with the technical problems resulting from differences among national rules and to draw upon the progress that has been permitted by the evolution of ideas; second,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fight against the increase of the illicit traffic in cultural objects and to show how the national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may be adapted to, or accompanied by, enhancing solidarity between States.

This UNIDROIT Convention also settles serious difficulties that could not be dealt with in the 1970 Convention. The main principles are the following; Undiscovered antiquities should be treated as stolen where the State of origin has claimed ownership in its legislation;

A clear test of 'due diligence' is given, which establishes a standard test for 'good faith'; some special provisions on time limitations for claims are settled. The States Parties to the 1970 Convention, convinced of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cultural heritage and willing to further develop its protection are encouraged to become Parties to the UNIDROIT Convention.

- Third, the 1970 Convention interacts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C Convention)**, which is the main international instrument in the fight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TOC Convention obligates States that ratify it to commit themselves to taking a series of measures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cluding the creation of domestic criminal offences; the adoption of new and sweeping frameworks for extraditi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law enforcement cooperation; and the promotion of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building or upgrading the necessary capacity of national authorities. These efforts overlap with the 1970 Convention when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volves the theft or illegal export of cultural property.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TOC/>)

Interac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While not explicitly linked, the **1970 Convention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GATT)** are connected due to the former's use of import restrictions to combat the illicit traffic of cultural property. Generally, non-tariff trade barriers or restrictions are prohibited within the GATT regime. However, Article XX of the GATT allows for various exceptions to this ban on non-tariff barriers. Subsection (f) of the Article allows for restrictions that are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so long as they do not violate the *chapeau* of the Article. Even if an action fits within an exception of Article XX, it still violates the GATT if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such action is]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The 1970 Convention and the subsequent national legislation implementing the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generally fall within the subsection (f) exception of Article XX. It should be noted, though, that if any aspect of the 1970 convention or related national implementing legislation were deemed to be international trade restrictions under the guise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the implementing country could be subject to a dispute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possible retaliation or cross-retaliation under the WTO regime.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gatt47_02_e.htm#articleXX)
- Similar interplay is also possible with various free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f all parties involved are member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 The 1970 Convention is interpreted by the methods laid out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codifi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부록 2>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INSTITUT INTERNATIONALE POUR L'UNIFICATION DU DROIT PRIV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Rome, 24 June 1995)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SSEMBLED in Rome at the invi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from 7 to 24 June 1995 for a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the draft UNIDROIT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CONVINCED of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of cultural exchanges for promoting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and the dissemination of culture for the well-being of humanity and the progress of civilisation,

DEEPLY CONCERNED by the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and the irreparable damage frequently caused by it, both to these objects themselves and to the cultural heritage of national, tribal, indigenous or other communities, and also to the heritage of all peoples, and in particular by the pillage of archaeological sites and the resulting loss of irreplaceable archaeological, historic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DETERMINED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fight against illicit trade in cultural objects by taking the important step of establishing common, minimal legal rules for the restitution and return of cultural objects between Contracting State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 the interest of all,

EMPHASISING that this Convention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restitution and return of cultural objects, and that the provision of any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needed to effect restitution and return in some States, does not imply that such remedies should be adopted in other States,

AFFIRMING that the adop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the future in no way confers any approval or legitimacy upon illegal transactions of whatever kind which may have taken pla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CONSCIOUS that this Convention will not by itself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s raised by illicit trade, but that it initiates a process that will enhance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and maintain a proper role for legal trading and inter-State agreements for cultural exchanges,

ACKNOWLEDGING that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other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ng cultural object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gisters, the physical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sites and technical co-operation,

RECOGNISING the work of various bodie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particularly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illicit traffic and the development of codes of conduct in the private sector,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 SCOP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

Article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laims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for:

- (a) the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 (b)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removed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contrary to its law regulating the export of cultural objec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ultural objects are those which, on religious or secular grounds, are of importance for archaeology, prehistory, history, literature, art or science and belong to one of the categories listed in the Annex to this Convention.

CHAPTER II -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Article 3

- (1) The possessor of a cultural object which has been stolen shall return it.
-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cultural object which has been unlawfully excavated or lawfully excavated but unlawfully retained shall be considered stolen, when 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excavation took place.
- (3) Any claim for restitution shall be brought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claimant knew the location of the cultural object and the identity of its possessor, and in any case within a period of fifty years from the time of the theft.
- (4) However, a claim for restitution of a cultural object forming an integral part of an identified monument or archaeological site, or belonging to a public collection, shall not be subject to time limitations other tha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claimant knew the location of the cultural object and the identity of its possessor.
-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y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that a claim is subject to a time limitation of 75 years or such longer period as is provided in its law. A claim made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restitution of a cultural object displaced from a monument, archaeological site or public collection in a Contracting State making such a declaration shall also be subject to that time limitation.

(6) A declar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made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7)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public collection" consists of a group of inventoried or otherwise identified cultural objects owned by:

- (a) a Contracting State
- (b) a regional or local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 (c) a religious institution in a Contracting State; or
- (d) an institution that is established for an essentially cultural, educational or scientific purpose in a Contracting State and is recognised in that State a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8) In addition, a claim for restitution of a sacred or communally important cultural object belonging to and used by a tribal or indigenous community in a Contracting State as part of that community's traditional or ritual use, shall be subject to the time limitation applicable to public collections.

Article 4

(1) The possessor of a stolen cultural object required to return it shall be entitled, at the time of its restitution, to payment of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possessor neither knew n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that the object was stolen and can prove that it exercised due diligence when acquiring the object.

(2)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possessor to compens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reasonable efforts shall be made to have the person who transferred the cultural object to the possessor, or any prior transferor, pay the compensation where to do so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claim is brought.

(3) Payment of compensation to the possessor by the claimant, when this is required,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claimant to recover it from any other person.

(4) In determining whether the possessor exercised due diligence, regard shall be ha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including the character of the parties, the price paid, whether the possessor consulted any reasonably accessible register of stolen cultural objects,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which it could reasonably have obtained, and whether the possessor consulted accessible agencies or took any other step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taken in the circumstances.

(5) The possessor shall not be in a more favourable position than the person from whom it acquired the cultural object by inheritance or otherwise gratuitously.

4.

CHAPTER III -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rticle 5

(1) A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o order the return of a cultural object illegal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2) A cultural object which has been temporarily export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for purposes such as exhibition, research or restoration, under a permit issued according to its law regulating its expor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cultural heritage and not return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at perm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llegally exported.

(3)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addressed shall order the return of an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 if the requesting State establishes that the removal of the object from its territory significantly impair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nterests:

- (a) the physical preservation of the object or of its context;
- (b) the integrity of a complex object;
- (c) the preservation of information of, for example, a scientific or historical character;
- (d) the traditional or ritual use of the object by a tribal or indigenous community,

or establishes that the object is of significant cultural importance for the requesting State.

(4) Any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ontain or be accompanied by such information of a factual or legal nature as may assist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address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to 3 have been met.

(5) Any request for return shall be brought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requesting State knew the location of the cultural object and the identity of its possessor, and in any case within a period of fifty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port or from the date on which the object should have been returned under a permi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rticle 6

(1) The possessor of a cultural object who acquired the object after it was illegally exported shall be entitled, at the time of its return, to payment by the requesting State of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possessor neither knew n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at the time of acquisition that the object had been illegally exported.

(2) In determining whether the possessor knew 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that the cultural object had been illegally exported, regard shall be ha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including the absence of an export certificate requir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ing State.

(3) Instead of compensation, and in agreement with the requesting State, the possessor required to return the cultural object to that State, may decide:

- (a) to retain ownership of the object; or
- (b) to transfer ownership against payment or gratuitously to a person of its choice residing in the requesting State who provides the necessary guarantees.

(4) The cost of returning the cultural objec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Stat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at State to recover costs from any other person.

(5) The possessor shall not be in a more favourable position than the person from whom it acquired the cultural object by inheritance or otherwise gratuitously.

Article 7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where:

- (a) the export of a cultural object is no longer illegal at the time at which the return is requested; or
- (b) the object was exported during the lifetime of the person who created it or within a period of fifty years following the death of that person.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where a cultural object was made by a member or members of a tribal or indigenous community for traditional or ritual use by that community and the object will be returned to that community.

CHAPTER IV - GENERAL PROVISIONS

Article 8

(1) A claim under Chapter II and a request under Chapter III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cultural object is located, in addition to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therwise having jurisdiction under the rules in force in Contracting States.

(2) The parties may agree to submit the dispute to any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r to arbitration.

(3) Resort may be had to the provisional, including protective, measures available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even when the claim for restitution or request for return of the object is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9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ntracting State from applying any rules more favourable to the restitution or the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an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2) This article shall not be interpreted as creating an obligation to recognise or enforce a decision of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at departs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0

(1) The provisions of Chapter II shall apply only in respect of a cultural object that is stolen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e State where the claim is brought, provided that:

- (a) the object was stolen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or
- (b) the object is located in a Contracting Stat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shall apply only in respect of a cultural object that is illegally exported after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requesting State as well as the State where the request is brought.

(3) This Convention does not in any way legitimise any illegal transaction of whatever nature which has taken pla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or which is excluded under paragraphs (1) or (2) of this article, nor limit any right of a State or other person to make a claim under remedies available outside the framework of this Convention for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a cultural object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CHAPTER V - FINAL PROVISIONS

Article 11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at the concluding meeting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the draft UNIDROIT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will remain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t Rome until 30 June 1996.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which have signed it.

(3) This Convention is open for accession by all States which are not signatory States as from the date it is open for signature.

(4)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s subject to the deposit of a formal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epositary.

Article 12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that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rticle 13

(1) This Convention does not affect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by which any Contracting State is legally bound and which contains provisions on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unless a contrary declaration is made by the States bound by such instrument.

(2) Any Contracting State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one or more Contracting State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in their mutual relations. The States which have concluded such an agreement shall transmit a copy to the depositary.

(3) In their relations with each other, Contracting States which are Members of organisations of economic integration or regional bodies may declare that they will apply the internal rules of these organisations or bodies and will not therefore apply as between these States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which coincides with that of those rules.

Article 14

(1) If a Contracting State has two or more territorial units, whether or not possessing different systems of law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is Convention, it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its territorial units or only to one or more of them, and may substitute for its declaration another declaration at any time.

(2) These declarations are to be notified to the depositary and are to state expressly the territorial units to which the Convention extends.

(3) If, by virtue of a declaration under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extends to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territorial units of a Contracting State, the reference to:

- (a)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n Article 1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territory of a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 (b)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r of the State addressed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a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 (c)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cultural object is located in Article 8 (1)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8.

- (d)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in Article 8 (3)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the law of the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where the object is located; and
- (e) a Contracting State in Article 9 shall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a territorial unit of that State.

(4) If a Contracting State makes no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is Convention is to extend to all territorial units of that State.

Article 15

(1) Declarations made under this Convention at the time of signature are subject to confirmation upon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2) Declarations and confirmations of declarations are to be in writing and to be formally notified to the depositary.

(3) A declaration shall take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tate concerned. However, a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formal notific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its deposit with the depositary.

(4) Any State which makes a declaration under this Convention may withdraw it at any time by a formal notif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depositary.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16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claims for the restitution, or requests for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brought by a State under Article 8 may be submitted to it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 (a) directly to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declaring State;
- (b) through an authority or authorities designated by that State to receive such claims or requests and to forward them to the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State;
- (c) through diplomatic or consular channels.

(2) Each Contracting State may also designate the courts or other authorities competent to order the restitution or return of cultural objects under the provisions of Chapters II and III.

(3) Declarations made under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may be modified at any time by a new declaration.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o 3 of this article do not affect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n judicial assistance in respect of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that may exist between Contracting States.

Article 17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no later than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provide the depositary with written information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export of its cultural objects. This information shall be updated from time to time as appropriate.

Article 18

No reservations are permitted except those expressly authorised in this Convention.

Article 19

(1) This Convention may be denounced by any State Party, at any time after the date on which it enters into force for that State,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to that effect with the depositary.

(2) A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sixth month following the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with the depositary. Where a longer period for the denunciation to take effect is specified in the instrument of denunciation it shall take effect upon the expiration of such longer period after its deposit with the depositary.

(3) Notwithstanding such a denunciation, this Convention shall nevertheless apply to a claim for restitution or a request for return of a cultural object submitte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Article 20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may at regular intervals, or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five Contracting States, convene a special committee in order to review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21

- (1) This Conven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 (2)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shall:
 - (a)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or acceded to this Convention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of:
 - (i) each new signature or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ogether with the date thereof;
 - (ii) each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10.

- (iii) the withdrawal of any declaration;
 - (iv)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 (v) the agreements referred to in Article 13;
 - (vi)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together with the date of its deposit and the date on which it takes effect;
- (b) transmit certified true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ignatory States, to all States acceding to the Convention and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 (c)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customary for depositar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s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Rome, this twenty-fourth day of June,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five, in a single original,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 (a) Rare collections and specimens of fauna, flora, minerals and anatomy, and objects of palaeontological interest;
- (b) property relating to history, including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litary and social history, to the life of national leaders, thinkers, scientists and artists and to events of national importance;
- (c) produc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cluding regular and clandestine) or of archaeological discoveries;
- (d) elements of artistic or historical monuments or archaeological sites which have been dismembered;
- (e) antiquities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such as inscriptions, coins and engraved seals;
- (f) objects of ethnological interest;
- (g) property of artistic interest, such as:
 - (i) pictures, paintings and drawings produced entirely by hand on any support and in any material (excluding industrial designs and manufactured articles decorated by hand);
 - (ii) original works of statuary art and sculpture in any material;
 - (iii)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 (iv) original artistic assemblages and montages in any material;
- (h) rare manuscripts and incunabula, old books, documents and publications of special interest (historical, artistic, scientific, literary, etc.) singly or in collections;
- (i) postage, revenue and similar stamps, singly or in collections;
- (j) archives, including sound,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archives;
- (k) articles of furniture more than one hundred years old and old musical instruments.

< 부록 3 >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38 C/24
Annex

ANNEX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AFEGUARDING THE MEMORY OF THE WORLD –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PREAMBL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eting in Paris from 2015, at its 38th session,

Considering that documents produced and preserved over time, in all their analogue and digital forms through time and space, constitute the primary means of knowledge creation and expression, having an impact on all areas of humanity's civilization and its further progress,

Also considering that documentary heritage records the unfolding of human thought and events, the evolution of languages, cultures, people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ld,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documentary heritage to promote the sharing of knowledge for greater understanding and dialogue,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respect for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dignity,

Noting that the evolution of documentary heritage enables intercultural education and personal enrichm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nd is a crucial resource for development,

Considering at the same time that the preservation of, and long-term accessibility to documentary heritage underpins fundamental freedoms of opinion, expression and information as human rights,

Also considering that universal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must respect both the legitimate interests of rights-holders and the public interest in its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Recognizing that aspects of the history and culture which exist in the form of documentary heritage may not be conveniently accessible,

Recognizing also that over time considerable parts of documentary heritage have disappeared due to natural or human disasters or are becoming inaccessible through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underlining** that lack of legislation impedes memory institutions to counter irreversible loss and impoverishment of that heritage,

Recalling that, in response to this challenge, UNESCO established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in 1992 to increase awareness and protection of the world's documentary heritage, and to provide for its universal and permanent accessibility,

Taking into account the rapid evolution of technology, and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models and processes for preserving digital heritage objects including complex ones, such as multi-media works, interactive hypermedia, online dialogues and dynamic data objects from complex systems, mobile content and future emerging formats,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instruments and other relevant treaties and statements, as listed in the Appendix,

Bearing in mind the need for States,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protection, preservation, accessibility and enhancement of the value of documentary heritage,

Having decided at its 37th session that this question should be the subject of a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Adopts, the day of 2015, the present Recommendation: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a **document** is an object comprising analogue or digital informational *content* and the *carrier* on which it resides. It is preservable and usually moveable. The content may comprise signs or codes (such as text), images (still or moving) and sounds, which can be copied or migrated. The carrier may have important aesthetic, cultural or technical qual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 and carrier may range from incidental to integral.

Documentary heritage comprises those single documents – or groups of documents – of significant and enduring value to a community, a culture, a country or to humanity generally, and whose deterioration or loss would be a harmful impoverishment. Significance of this heritage may become clear only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world's documentary heritage is of global importance and responsibility to all, and should be fully preserved and protected for all, with due respect to and recognition of cultural mores and practicalities. It should be permanently accessible and re-usable by all without hindrance. It provides the means for understanding social, political, collective as well as personal history. It can help to underpin good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ach State, its documentary heritage reflects its memory and identity, and thus contributes to determine its place in the global community.

Memory institution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rchives, libraries, museums and other educational, cultural and research organizations.

1. IDENTIFIC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 1.1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support their memory institutions in establishing selecti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policies by research and consultation, guided by internationally established and defined standards regarding documentary heritage in their territories. The documents, fonds and collections should be managed in a way that ensures their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ver time, and assigns means of discovery, including cataloguing and metadata.
- 1.2 Policies, mechanisms and criteria for selecting, acquiring and de-selecting documentary heritage should be developed by memory institutions in coordination with civil society,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key documents but also their contextual material, including social media. Selection criteria must be non-discriminatory and clearly defined. Selection must also be neutrally balanced with respect to knowledge fields, artistic expressions and historic eras. Because of their inherently temporary nature, decision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digital documents may need to be made at or before the time of creation.
- 1.3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identify specific documentary heritage the survival of which is at potential or imminent risk, and draw it to the attention of competent bodies able to take appropriate preservation measures. They should support and strengthen their relevant

memory institutions and, where practical and appropriate, encourage research communities and private owners to care for their own documentary heritage in the public interest. Similarl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should ensure professional care for the documents which they themselves create.

- 1.4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identification and nomination of significant documentary heritage to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Memory of the World Registers as a means of raising awareness.
- 1.5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develop 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schemes as appropriate to ensure the identification, preservation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2. PRESERV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 2.1 Preserv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means encompassing techniques, treatments, procedures and technologies of any nature, preventive and remedial, aiming at the preservation of the documents and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 2.2 Preservation is an ongoing process requiring the management of both analogue and digital objects and can be enhanced by scholarship, technology and science. Analogue carriers should be retained where they have continuing value as authentic originals, artefacts or information bearing objects. In the case of digital documents, action and intervention are desirable from before the point of creation and acquisition, in order to optimize further management, minimize costs and to properly manage the risks involved.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encouraged among governments, memory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 2.3 In pursuing measures of preservation, integrity,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should be the guiding principles. Concrete measures and actions should follow the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the recommendations, guidelines, best practices and standards developed or supported by memory institutions.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should provide a platform to promote standards and share best practices.
- 2.4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develop awareness-raising and capacity-building measures and policies as a key component of preservation, including promoting research as well as training for documentary heritage professionals and providing facilities for such. These should embrace curatorial best practices, current and emerging technologies, forensic skills and core competencies in relevant scholarship,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thereby raising awareness of the urgency of timely preservation action in a constantly changing environment.
- 2.5 The existence of possibly legitimate access restrictions on any part of the documentary heritage should not inhibit or limit the ability of memory institutions to take preservation action.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take this consideration into account while implementing this recommendation and through updating their relevant domestic legislation.
- 2.6 Member States that hold collections originating in, or of relevance to, other States in their memory institutions are encouraged to share digital programmes and copies of such heritage with the Parties concerned.
- 2.7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consistency of best practice and preservation standards across memory institutions, including risk management, such as the degradation and theft of documents, and investment in appropriate technical infrastructure. This may include nationwide coordination and sharing of tasks among memory institutions, based on their existing roles, strengths and responsibilities.

- 2.8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support memory institution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eservation. Member States are further invited to encourage memory institutions to link with the appropriate professional associations to both enhance and share their technical knowledge, and contribute to the ongoing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 2.9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cademic curricula for digital preservation, as well as networking activities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the promotion of exchanges of experiences among UNESCO Member States based on best practice models.

3.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 3.1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provide appropriate legislative frameworks for memory institutions and ensure their necessary independence in preserving and providing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so as to sustain public trust in the scope of material selected, and the way in which it is preserved. The provision of access is visible evidence and justification of public expenditure on preservation.
- 3.2 Member States are urged to promote and facilitate maximum inclusive access to, and use of, documentary heritage by empowering memory institutions to provide accurate and up-to-date catalogues and finding aids, equitable person-to-person access services to the original documents, if necessary for research, Internet and web-based publications and portals, electronic and digitized content, using international best practice standards. Member States are further encouraged to support memory institution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cess and use, using recognized standards that support interoperability. Whenever possible, content should be structured, machine-readable and linkable.
- 3.3 The avenues for providing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are multiplying through the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networks among memory institutions and their partners.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outreach programmes, including exhibitions, travelling presentations, radio and television programmes, publications, consumer products, online streaming, social media, lectures, educational programmes, special events and the digitization of content for downloading.
- 3.4 Programmes for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may be facilitated by partnerships, including public-private ones.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encourage such arrangements if they are responsible and equitable.
- 3.5 Where restrictions to accessing documentary heritage are necessary to protect privacy, human safety, security, confidentiality or for other legitimate reasons, they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stated and be of limited duration. They should be underpinned by appropriate national legislation or regulation by including an appeals mechanism against such decisions.
- 3.6 When updating or enacting new legislation which impacts on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the need to maximize such access while respect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s-holders.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extend this public access to countries with which they have shared a historical documentary heritage.
- 3.7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enhance the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ir documentary heritage through the outreach activities and publications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s appropriate, with investment in digitization of content for access purposes now being one of its key components. Member States should support and promote public

domain access, and wherever possible, encourage the use of public licensing and open access solutions.

4. POLICY MEASURES

- 4.1 Member States are urged to consider their documentary heritage as an invaluable asset and to apply this perspective in national legisla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agendas. They are further encouraged to recognize the long-term need for new investment in the preservation of different types of originals in analogue format, in digital infrastructure and skills, and to adequately endow memory institutions.
- 4.2 At the same time, in the context of their national heritage policies,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take a global view of the needs of memory institutions, beyond the practicalities of infrastructure, and encourage logical partnerships and cost sharing with other entities in setting up shared facilities, processes and services.
- 4.3 Private and lo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holding valuable collections need public encouragement and support as well as adequate visibility in national directories.
- 4.4 Member States should improve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and tools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documentary heritage and their presence in the public domain.
- 4.5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y,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create in a participatory approach a stable, enabling environment that will give incentives to sponsors, foundations and other external parties to support memory institutions and, with them, to invest in the preservation, accessibility and use of documentary heritage in the public interest.
- 4.6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periodically review copyright codes and legal deposit regimes to ensure they are fully effective, with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preserving and accessing documentary heritage in all its forms. Effectiveness would also profit from the strengthening and harmonization of legislation and alignment of policies among Member States.
- 4.7 Where preserving and accessing documentary heritage requires the use of software or other proprietary technology not covered by copyright exceptions,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facilitate access to proprietary codes, keys and unlocked versions of technology on a non-profit basis.
- 4.8 In order to facilitate optimal exchange of data,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open source software and standardized interfaces for managing digital documentary heritage, and seek the cooperation of software and hardware developers in extracting data and content from proprietary technologies. Likewise, their memory institutions should aim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interchangeability of cataloguing methods and standards.
- 4.9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support and develop policies and initiatives affecting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monitoring the status of documentary heritage inscribed o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s.
- 4.10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contribute building synergies between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and other heritage programmes in order to assure further coherence of actions.

5.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5.1 In view of the need to intensify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particular through the pooling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assist research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Member States should support the exchange of research data,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the training and exchange of specialist personnel and equipment. They should promote the organization of meetings, study courses and working groups on particular subjects, such as cataloguing, risk management, identification of endangered documentary heritage and modern research.
- 5.2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professional association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documentary heritage preservation and access, with a view to implement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research projects and publishing guidelines, policies and best practice models.
- 5.3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facilitate the exchange between countries of copies of documentary heritage that relate to their own culture, shared history or heritage, and of other identified documentary heritage, in particular due to their shared and entangled historical nature or in the framework of the reconstitution of dispersed original documents, as appropriate, which has been the object of preservation work in another country. The exchange of copies will have no implications on the ownership of originals.
- 5.4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Member States shoul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afeguard their documentary heritage against all human and natural dangers to which it is exposed, including the risks deriving from armed conflicts. Likewise, they should refrain from acts likely to damage documentary heritage or diminish its value or impede its dissemination or use, whether it is to be found o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State or o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 5.5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engag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afeguard endangered documentary heritage through digitization or other means following a request made by another Member State.
- 5.6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with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through their memory institutions by establishing national Memory of the World committees and registers, when deemed appropriate.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apply the above provision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by taking whatever legislative or policy measures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actice of each State, to give effect,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measures and norms set forth in this Recommendation.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and bodies.

The General Conference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should report to it, by the dates and in a manner to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is Recommendation.

<부록 4>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8 C/32
Annex II

ANNEX II

DRAFT TEXT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Preambl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meeting in Paris, (...), at its 38th session,

Recalling the principles set forth in Articles 23 and 26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and in Articles 6(2) and 1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guaranteeing the right of everyone to work and to education, and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the Conven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989),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Conscious that TVET is understood as being part of both the universal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work,

Recognizing that TVET meets the "aim of developing both individuals and societies" a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989),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ations adopted by UNESCO, notably the Recommend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74), the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1993),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1997) and the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2015),

Recalling also the relevant instrumen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ncluding the 1975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Guidance and Vocational Training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No. 142) and the 2004 Recommendation concern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ducation, 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No. 195),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2011,

Recognizing that TVET contributes towards the promotion of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nclusion and equity; gender equality, cultural diversity; and to the fostering of a desire and capacity for lifelong learning and learning to live together, all of which are essential to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and to the realization of lasting peace, responsible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aring in mind the key role of TVET in supporting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for a world that is just, equitable and inclusive, and noting the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promotion of sustained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o benefit all,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Bonn Declaration on Learning for Work,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2004), the recommendation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n

TVET, "Transforming TVET: Building skills for work and life", known as the Shanghai Consensus (2012) and the Aichi-Nagoya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Having decided by 37 C/Resolution 17 that the 2001 Revised Recommendation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new trends and issues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nsidering that this Recommendation sets out general principles, goals and guidelines that each Member State should apply according to its socio-economic context, governing structures and available resources in a changing world, with a view also to transforming, expanding and enhancing TVET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Having examined document 38 C/... and the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nexed thereto,

1. Adopts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supersedes the 2001 Revised Recommendation, on this day of November 2015;
2.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pply the following provisions by taking appropriate steps, including whatever legislative or other steps may be requir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practice and governing structures of each State, to give effect within their territories to the principles of this Recommendation;
3. Also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bring this Recommendation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and bodies responsible for TVET, and also other stakeholders concerned with TVET;
4. Further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report to the General Conference, at such dates and in such manner as shall be determined by it, on the action taken by them in pursuance of this Recommendation.

I. SCOPE OF THIS RECOMMENDA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Recommendati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s understood as comprising education,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relating to a wide range of occupational fields, production, services and livelihoods.
2. TVET, as part of lifelong learning, can take place at secondary, post-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and includes work-based learning and continuing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which may lead to qualifications. TVET also includes a wide range of skills development opportunities attuned to national and local contexts. Learning to learn, the development of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transversal skills and citizenship skills are integral components of TVET.
3.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Recommendation will depend upon the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structures,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existing in a given country.

II. VISION AND AIMS

Vision

4. TVE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by empowering individuals, organizations, enterprises and communities and fostering employment, decent work and lifelong learning so as to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ims

5. *To empower individuals and promote employment, decent work and lifelong learning.* TVET contributes to develop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of individuals for their employment, careers, livelihoods and lifelong learning. TVET helps individuals to make transitions between education and the world of work, to combine learning and working, to sustain their employability, to make informed choices and to fulfil their aspirations. TVET contributes to social cohesion by enabling individuals to access labour market, livelihood and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6. *To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VET contributes to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s,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TVET is labour market oriented, anticipates and facilitates changes in the nature and organization of work, including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nd occupation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Through promoting entrepreneurship TVET supports self-employment and the growth of enterprises.

7. *To promote social equity.* TVET contributes to the equality of learning opportunities and socio-economic outcomes including gender equality. TVET creates attractive and relevant learning opportunities for populations of al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s. TVET is inclusive and does not tolerate any form of discrimination. TVET contributes to develop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that promote responsible citizenship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8. *To promo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VET integrates principle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foster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promotion of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betwee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so a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TVE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for green occupations, economies and societies. TVE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s and technological solutions needed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to preserve environmental integrity.

III. POLICIES AND GOVERNANCE

Policy development

9. Member States shoul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structures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develop policies relating to TVET that are consistent with a broad range of policy fields, including education, employment and the overall strategic objectives of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i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10. Member States should guide, recognize and promote TVET in all forms and settings through an overall lifelong learning framework that should be oriented to equipping all youth and adults with relevant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for work and life and producing better labour market and social outcomes.

11. Member States should raise the public profile and attractiveness of TVET among learners, families and all other stakeholders and inform them on the possibilities for progression, work, lifelong learning and self-fulfilment. Member States should address,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the multidimensional issues influencing the attractiveness of TVET and promote 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permeability and diversity of pathways and programmes, providing incentives and improving information and guidance.

12. Member States expanding TVET at secondary, post-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as appropriate to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authorities should ensure that there i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gage labour market stakeholders, that qualifications and curricula are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that programmes and qualifications are transparent and quality assured.

13.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pathways and facilitate transitions between secondary, post-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flexible admission procedures and guidance, credit accumulation and transfer, bridging programmes and equivalency schemes that are recognised and accredited by relevant authorities. TVET institutions, and ot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should collabor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14. Member States, according to their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structures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support continuing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by promoting access and broadening participation by adult learners, including by encouraging enterprise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invest in their workers.

Governance and regulatory framework

15. Member States, assum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public policies, should consider defining or strengthen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TVET to define the roles, rights, obligations and accountabilities of its public and private actors, and to encourage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s.

16. Member States should facilitate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and strengthen th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for the governance, management and financing of TVET.

17. Member States, according to their governance structures,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governance models for TVET institutions involving relevant local stakeholders and cooperating, when relevant, with business associations in supporting work-based learning.

Social dialogue, private sector and other stakeholders' involvement

18. Member States should, as appropriate, foster social partners' participation in TVET according to agreed labour market, education, training and other regulations.

19. Increase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VET should be guided by key principles including alignment with public policies, support to social dialogue,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When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TVET policies should recognize its diversity, including large, medium, small, micro and household enterprises engaged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20. To enhance policy development and governance Member States should also, as appropriate, engage with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learners, TVET providers, staff, parents, youth, traditional leaders, indigenous people and others.

Financing

21. Member States should set up measures aiming at diversifying sources of funding and involving all stakeholders through a variety of partnerships, inclu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Divers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engaging enterprises, local authorities and individuals while respecting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inclusion. In addition to existing frameworks for public financing, innovative funding mechanisms such as partnerships and cost sharing, tax deduction and loans, can be explored to increas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and to stimulate demand for TVET.

22. Various forms of incentives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aiming at raising awareness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TVET by a broad range of actors and shifting the traditional input-based models of allocation and use of resources to more performance-based financing models.

23. TVET institutions, including at the secondary, post-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should have adequate funding for their operations, including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their maintenance. TVET institutions should have appropriate levels of operational and financial autonomy to enable them to engage with their local contexts, to build new partnerships for improving the quality and relevance of TVET programmes, and to generate revenues.

Equity and access

24. Member States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youth and adults have equal opportunities to learn, develop and enhance their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by transforming and expanding TVET in all its forms to address the great diversity of learning and training nee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means to widen access and participation, according to context.

25. Member States, according to their governing structures, should ensure a quality basic education for all, and address the needs of out-of-school youth and low-skilled adults by developing basic literacy, numeracy and transversal skills, as a foundation for meaningful participation in TVET. Education and other stakeholders should create the conditions for TVET for all, so that it may be freely chosen.

26.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gender-based discrimination.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equal access and participation of females and males in quality TVET. All forms of TVET institutions, programmes, curricula, materials and work-based learning should avoid gender-based and other stereotyping, and should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Member States should adopt innovative mechanisms to promote equity and access, such as financial incentives to influence admissions practices.

27. Member States should make TVET more accessible to all disadvantaged and vulnerable groups, including marginalized rural and remote populations, by providing targeted support to reduce the cost burden and to remove other obstacles. According to national contexts, Member States should give attention to learner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 nomadic populations, ethnic minority groups, socially-excluded groups, migrants, refugees, stateless people and populations affected by conflict or disaster, as well as to unemployed people and vulnerable workers.

IV. QUALITY AND RELEVANCE

Learning processes

28. Member States shoul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structures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encourage a variety of learning opportunities, whether in public and private TVET institutions, workplaces, homes, or other settings. Informal learning, whether self-directed, peer-to-peer or through other forms of social learning, should be encouraged and, if appropriate, made visible through recognition and validation mechanisms.

29. In addition to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relating to occupational fields, learning processes should build on foundation skills and further deepen understandings of the scientific, technological, social, cultur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other aspects of societies. TVET should be holistic and develop transversal and entrepreneurial skills, skills for health and work safety, cultural development, responsible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knowledge of labour rights.

30. Work-based learning in its various forms, including in-service training, attachments, apprenticeships and internships, should be promoted. The quality of work-based learning should be enhanced and when relevant be complemented by institution-based or other forms of learning.

31. Public policies should foster and facilitate quality apprenticeships composed of work and institution-based learning through social dialogu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help youth to develop their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and gain work experience.

32. TVET in the informal economy should be promoted, including through quality traditional apprenticeships in small, micro and household enterprises by engaging stakeholders in rural and urban areas.

33. The potenti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hould be fully exploited in TVET. The internet, mobile technologies and social media should be utilized to promote distance and online delivery, including through blended models and the development and use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

34. Effective and appropriate assessment systems for generating and using information on learners' achievements should be established. Evalu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es, including formative assessment, should be undertaken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notably teachers and trainers, representatives of the occupational fields concerned, supervisors and learners. Learners' overall performance should be assessed using diversified methods of assessment, including self and peer assessment as appropriate.

TVET staff

35. Policies and framework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qualified and high-quality TVET staff, including teachers, instructors, trainers, tutors, managers, administrators, extension agents, guidance staff and others.

36.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 are applicable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n preparation for the profession; further education for teachers; employment and career;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eachers; conditions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teachers' salaries and social security.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1997) is also applicable.

37. Given the growing consideration of work-based learning and TVET in other settings including community-based, distance and online, Member States need to more systematically support and acknowledge the emerging roles and learning needs of trainers, tutors and other facilitators, b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r strengthening of policies and frameworks concerning their status, recruit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VET staff should have decent working conditions and adequate remuneration, as well as career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38. TVET staff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workplace should have the capacities required to make TVET responsive to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of the communities and societies they serve and to contribute to the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of TVET. In particular, TVET staff require initial preparation, as well as continuing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cluding experience working in enterprises, and support to enable them to reflect on their practices and to adapt to change. The initial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VET staff should include training on guidance and gender equality.

Qualifications systems and learning pathways

39. Well-articulated outcome-based qualifications frameworks or systems based on learning outcomes and relating to a set of agreed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based on identified needs including occupational standards.

40. Policy or regulatory mechanisms supporting horizontal and vertical progress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nclude flexible learning pathways, modularization,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accumulation and credit transf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encouraging low-skilled and unskilled individuals to gain certification for access to further learning and decent work.

41. Systems for the 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of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ies acquired through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should be promoted with the tripartite involvement, when relevant, of workers' representatives, employers' representatives and public authorities. Reliable assessment procedures and quality assured cert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42.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the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relation to the mobility of learners and workers.

Quality and quality assurance

43. Member States should foster an environment for high quality TVET, according to their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structures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building the necessary capacities for quality enhancement.

44.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a system for quality assurance in TVET based on participation by all relevant stakeholders. Quality assurance systems should include clear and measurable objectives and standards,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nd feedback mechanisms and widely accessible evaluation results. Quality assurance should include both external and self-assessment, through which system performance and outcomes can be continuously monitored and improved.

45. Member States should seek to improve the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TVET institutions. Quality and quality assurance in TVET should engage the entire staff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46.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according to their constitutional provisions, an appropriate legal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registration and monitoring of private TVET providers with the protection of learners as a core guiding principle.

Relevance to labour markets and the world of work

47. Member States, in line with their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structures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support and facilitate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the world of work, employment and/or self-employment. Linkages between TVET institutions, employment agencies and employ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support should be given to entrepreneurship and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for example by integrating entrepreneurial skills in curricula, by organiz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by setting up business incubators and partnerships with business and technology transfer centres.

48.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TVET and labour market information systems, using open data when relevant, and build institutional capacities in order to ensure the relevance of TVET to current and evolving needs in the world of work, nationally,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those implied by the transitions to green occupations, economies and societies.

49.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rangements could be used to identify and anticipate skills needed, for example through prospective studies, observatories or sector skills councils. Furthermore, data collection and analyses of changing contexts and the systematic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and results should inform efforts to enhance the relevance of TVET.

Information and guidance

50. Member States should facilitate,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and guidance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up-to-date and reliable support in relation to education, continuing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work opportunities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51. Information and guidance should be offered continuously and directed towards aiding and supporting all individuals in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careers and working lives, giving particular attention to promot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all its dimensions, including gender equality, so as to address social inequalities in education, the world of work and wider society.

52. Information and guidance services should support learners in their decision-making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cluding mobile technologies, social networks and multimedia platforms and tools.

V. MONITORING AND EVALUATION

53. Member States shoul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conditions, governing structures and constitutional provisions, evaluate TVET policies and programmes. Evaluations could include studies of the impacts and outcomes of TVET policies and programmes and investigation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TVET for a broad range of public and private actors including individuals, enterprises and communities.

54. Appropriate tools and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VET policies against agreed standards, priorities and targets, including specific targets for disadvantaged and vulnerable groups. This could involve evaluations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roviders and programmes, including self-evaluations, as well as tracer studies and the development of sets of indicators including on access, completion rates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graduates.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on data protection.

55. Institutional capacities for data collection and the use of information from monitoring and evaluation to inform TVET strategies and programmes, standards and curricula, or to adjust learning methods, should be strengthened. Coherence between national data collection on TVET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itiatives should be enhanced.

56. Processes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TVET should ensure broad particip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with a view to improving learning processes and strengthening the connections between findings, decision-mak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results.

VI. RESEARCH AND KNOWLEDGE MANAGEMENT

57. Member States should deepen the knowledge base for TVET through sustained investment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so as to develop new methodologies and understandings of TVET in its broad context and to inform TVET policies and decision-making.

58. Stakeholders, as appropriate, should be involved in commissioning, using and evaluating research, as well as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and systems for knowledge management. The research capacities of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TVET providers, social partner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should be utiliz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contexts. Research findings should be widely disseminated through publications and electronic means.

VII. INTERNATIONAL COOPERATION

59.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sharing knowledge, experiences and promising practices, reinforce international TVET data collection and make us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networks, conferences, and other fora. The UNEVOC Network is a strategic resource available to Member States for mutual learning and adv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VET.

60. Member States should associate ent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regional bodies, including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levant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research networks in promoting cooperation, increasing mutual and cooperative assistance and building capacitie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2

국제보건법 분야

“재난구호/질병관리”

부록 ▶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장 원 경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장원경 교수는 2009년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과대학 및 행정환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기초법학 및 공공정책학으로 법의식 및 법문화, 공공갈등관리,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구호/질병관리

장 원 경*

Abstract

2015년도에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진 재난 구호와 관련된 논의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구호 현장에 필요한 물류의 공급 및 자금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 현장에 필요한 제품의 수량 및 특성으로 인하여 물류의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금 마련에 직접 연결하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아직 그 적용의 초기 단계에 있으나 최근 관련 기술의 발달 및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가파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재난 구호와 관련된 물류의 공급 및 자금의 확보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공중 보건 및 질병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2015년도에 논의된 정책 중 가장 주의 깊게 볼만 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이다. WHO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대응 방법을 제안하고, 비상사태에서 WHO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에서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WHO는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에서 WHO의 중점 기능 및 관련 정책을 분명히 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인지 및 평가 단계에서부터 실행 및 종료 단계까지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I. 재난구호

1. 개요

재난 구호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이루어진 논의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구호 현장에 필요한 물류의 공급 및 자금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은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개인 모바일 기기의 보급에 기초한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Office for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및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자금 마련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 3D프린터를 활용한 물류의 공급 방안¹

(1) 논의의 배경

화재, 지진, 홍수, 허리케인 등의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물류를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재난 현장에 대

¹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Shrinking the Supply Chain: Hyperlocal Manufacturing and 3D Printing in Humanitarian Response, OCHA Policy and Studies Series 014 (July 2015)의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이다.

한 지원에서 물류의 공급은 구호 활동에 핵심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매 년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60-80%(100억-150억불(미국달러))가 물류의 공급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는 대체로 선진국에서 조달되어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① 많은 양의 물건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고, ②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③ 공급된 물건이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1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서 표준적인 물류 공급망〉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적인 물류 공급망에 따르면, 생산된 제품은 구호 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운반 과정을 거쳐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물류의 공급은 물류 조달 시설의 위치, 제품의 비축량, 분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제품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는 대부분 예측하지 못하였던 제품이 상당한 운반 거리를 거쳐 대량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량 부족, 파손 및 손상, 재고 파악의 어려움, 잘못된 제품의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물류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필요한 물류의 공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여러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그림 1〉의 앞의 세 단계에 해당하는 계획, 조달 및 운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보관 및 분배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적인 위기 상황에서 물류 공급망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물류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물류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고, 재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구호 활동에 필요한 제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표준적인 물류 공급망을 통하여 제공된 제품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다를 수 있다. 그 결과, 국제적인 물류의 공급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난 현장에 물류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여 필요한 제품을 지역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제품을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특정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역 시장이 물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UN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된 물류 공급망의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3D 프린터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최근 전산 기술의 발달 및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가파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한 물류의 공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3D프린터의 활용

(가) 3D프린터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 중 가장 발달한 것이 3D 프린팅으로 알려져 있는 첨가하는 방식의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이다. 이 용어는 미리 준비된 틀 없이 원료를 층으로 겹쳐 쌓아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 및 과정을 의미한다. 3D 프린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융합된 침적 모델링(fused deposition modelling)으로, 플라스틱 필라멘트 등에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3D 프린팅 기술로 금속, 세라믹, 탄소









섬유, 나무, 실리콘,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가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3D 프린터는 1980년대 중반에 처음 발명되었으나 2005년에 이르러서야 상업적 또는 개인적 사용이 가능하여졌고, 폭넓게 보급되기까지는 추가적으로 6년이 더 소요되었다.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과 오픈소스 운동(open source movement)을 통하여 처음 인기를 얻기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모델의 3D 프린터의 사용이 가능하며 3D 프린팅 기술도 점점 더 정교화 되어가고 있다. 3D 프린팅은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접성 및 시제품 생산 후 미세 조정 가능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에 있어서 융통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나) 재난 현장에서 3D프린터의 활용

3D 프린팅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필요한 물류의 공급 비용을 줄이고 융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3D 프린터 사용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과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필요한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운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제품을 운반하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의 원료인 필라멘트 등의 운반은 완제품보다 포장도 쉽고 공간도 덜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모양의 나사나 파이프 등의 작은 부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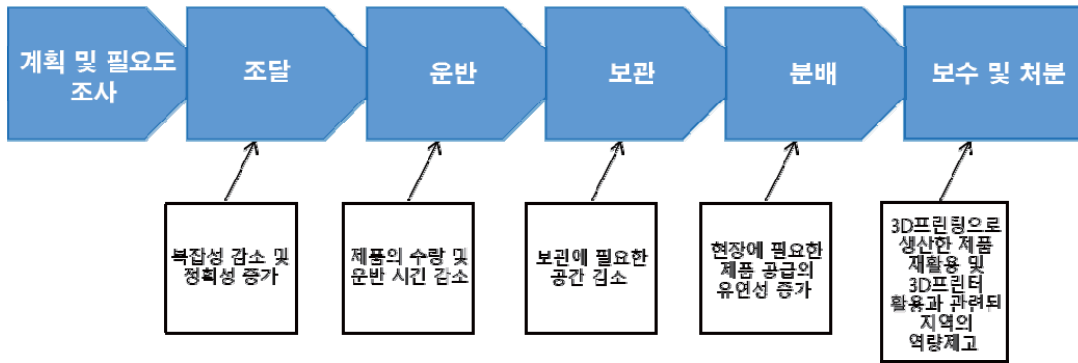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비정부 단체인 필드레디(Field Ready)는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생산 가능한 제품의 목록을 <그림 2>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

〈그림 2 3D프린팅으로 생산 가능한 제품의 목록〉

항목	인쇄된 항목
 세면	파이프/호스 연결 부품, 수도꼭지, 비누 거치대, 물비누 용기, 변기 뚜껑 및 경첩
 보건	일회용 의료용품(정맥주사액 고리, 탯줄 클램프), 빗, 의료 폐기물 용기, 보철용 팔다리
 캠프 운영	내구성이 있는 표지판, 클립보드, 통제용 안전 밧줄
 대피소	텐트 지지대, 울타리, 공구, 밧줄 클램프
 식사 제공	계량컵, 식기, 조리용 주방기구
 보호	알약용 용기, 안경 수리 도구, 가족사진, 장난감, 잠금장치, 호루라기, 문설주
 교육	학습에 필요한 도구, 악기
 물류 지원	예비 부품(플라스틱 및 고무), 사무용품, 세울 수 있는 메모판, 교체용 키보드 키
 통신	연결 장치, 와이어 랙, 케이블 묶는 끈, 장비 거치대
 복귀	플라스틱 상품권, 재택 업무에 필요한 장비, 농업에 필요한 장비

이제까지 대부분의 3D 프린터는 간단한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사용 가능한 원료의 범위가 나일론, 탄소 강화 필라멘트, 메모리폼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여지고 있다. 금속 등을 원료로 하는 3D 프린터는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3D 프린터의 크기 및 사용 방법, 가격의 측면에서 아직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난 현장에서 3D 프린터는 펌프 또는 변기 교체에 필요한 부품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제품의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크기는 작지만 재난 현장에 공급되는 물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방수포 등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다른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수적이다.

〈그림 3 3D프린팅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표준적인 물류 공급망의 변화〉



〈그림 3〉은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그림 1〉에 제시한 표준적인 물류 공급망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3D 프린팅은 물류 공급에 소요되었던 시간 및 공간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물류 공급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3D 프린터 활용과 관련된 역량을 제고하면서, 물류의 공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노동, 안전 및 경제 관련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은 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새로운 생각을 쉽게 시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고, 제품의 설계에 관한 디지털 파일을 재난 현장으로 전송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한 물류의 제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재난 현장에서 3D프린터 활용 시 고려 사항

현재 상용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도입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 ① 첫 번째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비용으로, 기본적인 융합된 침적 모델링 프린터의 가격은 1,000-3,000불(미국달러) 정도이고, 3D 프린터의 원료로 쓰이는 필라멘트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kg 당 25-80불(미국달러) 정도이다. 필라멘트의 사용에는 환경 파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플라스틱 병으로 필라멘트

를 생산하는 기계가 300불(미국달러) 정도의 가격에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으로 발생한 잔해와 쓰레기를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 필라멘트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및 환경적 이득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② 두 번째는 지속성으로, 일반적으로 저렴한 컴퓨터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깨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전력의 공급이 고르지 못한 재난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견고하고 최악의 먼지, 습도, 온도에 내구력이 있는 컴퓨터 및 3D 프린터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건전지, 태양력 또는 기타 대안적인 에너지원의 공급을 받아 가동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세 번째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하여 보급된 3D 프린터가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비금속으로 된 무기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폭탄이나 총의 부품 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3D 프린터 활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 방안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④ 네 번째는 3D 프린팅 기술 자체의 한계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많은 수의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현재의 3D 프린팅 기술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3D 프린팅은 교체에 필요한 부품 또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던 특수한 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표준적인 물류 공급망을 통하여 보급하였던 제품의 수량만큼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⑤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3D 프린터를 통하여 생산할 제품에 대한 적절한 설계의 중요성이다.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제품의 유용성 및 안전성이 고려되지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정책 방향

UN은 재난 현장에서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접근이 비효율적이고 유연성이 없으며 지역 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3D 프린팅을 활용한 지역 생산이 물류의 공급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3D 프린팅과 관련된 기술은 현재 급속히 발달하여, 3D 프린터의 사용이 편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3D 프린터가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3D 프린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UN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필요한 제품의 지역 생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를 장려한다. 표준적인 물류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지역 생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제품의 설계 및 시제품 생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제품의 대량 생산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 ②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기술로 제품을 생산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민간 부문의 전문가의 참여 및 민간 부문의 관련 기관의 지원을 독려한다. 또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설계 내용 및 생산 방법을 널리 공유한다.
- ③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지역 생산 및 관련 자원봉사 집단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의 경험은 이러한

혁신의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3D 프린팅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금의 확보 방안²

(1) 논의의 배경

재난 현장에서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언제나 주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지원 및 개인적인 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입과 비교하여 구호 활동에 필요한 지출이 항상 더 많으며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기부자들의 기부 금액이 2011년에 56억불(미국달러)에서 2014년에 104억불(미국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2011년에 37퍼센트(33억불(미국달러))에서 2014년에 40퍼센트(69억불(미국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UN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한 자금 마련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가)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적은 액수의 돈을 모아 프로젝트 또는 벤처의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에는 ① 자금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 생각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발기

²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Crowdfunding for Emergencies, OCHA Policy and Studies Series 016 (August 2015)의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이다.

인, ②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이러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중간 기관(즉,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기관)의 세 가지 주체가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①, 발기인)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②, 기부자) 사이의 자금 모집과 관련된 복잡한 조직을 매우 단순화시켜(③,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발기인이 기부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모집 방식은 어떻게 자금의 효과적인 분배를 보장할 것인지와 이러한 분배 방식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 크라우드펀딩 모델

크라우드펀딩 모델은 기부자가 어떻게 발기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기부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모델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 ① 기부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donation-based crowdfunding): 가장 직접적인 자금 모집 방식으로, 기부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이 특정한 단체 또는 프로젝트에 직접 제공된다. 자금을 제공받은 단체 또는 프로젝트는 기부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② 보상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reward-based crowdfunding): 특전(perk)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부자들이 자신의 지지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실제 제품이 생산되었을 때 다른 고객들보다 먼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 ③ 채무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debt-based crowdfunding): 기부자들이 발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발기인이 고정된 이율로 채무를 상환하기를 기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보다는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경우에 이 모델을 활용하게 된다.

- ④ 자기 자본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equity-based crowdfunding): 기부자들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일정한 투자를 하게 하는 모델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 소유권의 일부를 팔고,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기부자들이 그 기업의 다수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네 가지 모델 중 재난 상황에서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적합한 모델로 보상에 기초한 방식과 기부에 기초한 방식을 절충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모델(hybrid reward-based and donation-based crowdfunding model)이 언급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무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과 자기 자본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을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두 모델을 제외하고, 보상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과 기부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상에 기초한 모델의 경우에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기부자들이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리적인 애정을 고려할 때, 작은 선물로도 자금 마련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마련된 자금에서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선물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물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순수하게 기부에 기초한 모델의 경우에는 기부자들에게 대한 선물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금 사용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기부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기부한 이후에 자신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절충하여, 물리적인 보상이 아닌 사회적인 칭찬이나 공동체에서의 인정 등의 보상을 도입하는 방안이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모델로 이해되고 있다.

(다)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자금 마련 및 효과적인 배분을 위하여 적절한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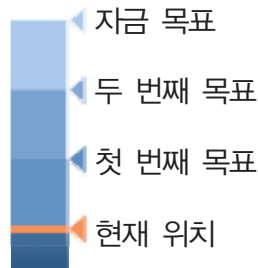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인 방식의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화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변형한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 ① 한 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single-goal framework):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은 <그림 4>와 같이, 한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주로 ‘전부 또는 전무 방식(all or nothing)’과 ‘모집된 액수의 돈을 제공하는 방식(get what you reach)’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액수의 자금이라도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한 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그림 5
 단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 ② 단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multistage goals framework): 한 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발기인에게 필요한 활동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즉, <그림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마련된 자금의 액수에 따라 프로젝트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집된 자금의 액수가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하면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용품을 구입하고, 두 번째 목표

에 도달하면 임시 학교를 짓고, 세 번째 목표에 도달하면 학교를 재건축하는 것이다.

- ③ 광범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distributed-goals framework): 여러 개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의 변형으로, 관련 기관에 프로젝트 전체를 배정하여 그 기관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대중의 관심이 부족한 프로젝트의 운영에 적합한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의 활동을 통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 및 기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어느 정도 액수의 자금 모집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6 광범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발생한 재난의 종류 및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유형이 달라질 것이고, 이러한 구호 활동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의 선택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용료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플랫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고를 유치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의 발기인 등에게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사용자 수수료는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이 자금 마련에 성공적이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금 모집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5%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8-9%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를 결정하는 경우에, 플랫폼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신뢰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프로젝트 발기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부자들, 그리고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재난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시작하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서 발기인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목적 및 자금의 분배 방식 등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성공적인 자금 마련 및 실질적인 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프로젝트 발기인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그리고 기부자들 사이에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대화에 참여시키고, 크라우드펀딩의 혜택과 한계에 대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발기인은 처음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무해의 원칙('do no harm' principle)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로 인하여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 공동체에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착수 및 진행의 모든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및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발기인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된 원칙을 지지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잠재적인 기부자들의 신뢰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잠재적인 기부자들은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이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마련된 자금의 분배 방식이 명확히 제

시된 경우에 프로젝트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프로젝트의 목표 및 가치, 자금의 분배 방식 등에 대한 잠재적인 기부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처음 계획하였던 자금 마련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및 마련된 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기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계획하였던 액수의 자금 마련에 실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발기인이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높여, 그 이후에 진행되는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 사용에 대한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본래의 목표 및 가치에 따라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관련 정책 방향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도입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은 보상에 기초한 방식과 기부에 기초한 방식을 절충한 모델(donation-based/reward-based hybrid crowdfunding model)에 모집된 액수의 돈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운영비용이 적게 소요되는(get-what-you-reach fundraising goals and low moderating owner charges) 광범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a distributed-goal framework)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에 이러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플랫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UN은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에 적절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은 대부분 개인적인 기부자들을 통한 자금 모집보다는 국가 또는 기업의 기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는 기관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협력을 체결하여,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돕고 싶어 하는 개인이 쉽게 프로젝트 발기인이 되거나 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② 크라우드펀딩 프레임워크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발기인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광범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distributed-goals framework)를 지지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이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 및 모집된 자금의 액수에 따라 확대되어 가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기 때문이다.
- ③ 현재 UN OCHA 는 OCHA 가 관여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OCHA 에 의하여 승인되었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신뢰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OCHA 가 너무 많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하거나 지역 공동체가 OCHA 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다른 국제 단체 및 비정부 기구에서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인 기부자들 및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자금 모집과 관련한 보고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감을 제고한다.

4. 시사점

2015년도에 UN OCHA 는 재난 현장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금 마련에 직접 연결하는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재 UN OCHA 에서의 논의는 3D 프린팅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디지털 기술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아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팅 및 크

라우드펀딩 관련 법적 규제가 시작되었는데, 3D 프린팅과 관련하여서 <삼차원프린팅 산업 진흥법>이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015년 7월 24일 개정에 신설되어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러한 법률은 관련 산업 육성 및 금융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까지 확대하려는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3D 프린팅 및 크라우드펀딩이 현행 우리나라의 법규정 상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질병관리

1. 개요

국제연합(UN) 산하의 공중 보건 및 질병 관리와 관련한 전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5년도에 자연 재해, 무장 충돌, 질병 발생, 식품 오염, 화학 물질 또는 핵폐기물 유출 등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Emergency Response Framework)를 발표하였다. WHO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 방법을 제안하고, 비상사태에서의 WHO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WHO는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에서 WHO의 중점 기능 및 관련 정책을 분명히 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인지 및 평가 단계에서부터 실행 및 종료 단계까지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2.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³

(1) 특정한 사건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WHO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그러한 사건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응급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사건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sudden-onset event)으로는 지진, 쓰나미, 화학 물질의 유출 등이 있다. 더디게 발생하는 사건(slow-onset event)은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다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장기간의 무장 충돌, 질병의 점진적인 증가, 가뭄, 식품 오염 등이 있다.

(나) 사건의 인지 및 위험 평가 착수의 계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 사건을 보고하고 감지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인지 및 위험 평가가 시작된다. 반면에 더디게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위험 평가의 계기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입수, ㉡ 상황에 새롭게 나타난 변화, ㉢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통하여 위험 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다) 사건의 인지 및 위험 평가

일단 사건이 인지되고 위험 평가가 시작되면, WHO는 회원국이 사건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건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도록 지지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³ World Health Organization, ERF: Emergency Response Framework (2015)의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이다.

에는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WHO의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 ① (사건의) 규모: 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건강 상태, 취약한 인구 집단이 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피난이 요구되는 등 사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구의 비율, 영향을 받은 지역의 크기, 공중 보건 관련 체계가 파괴된 정도, 사건 이후 보건과 관련된 국가의 역량, 영향을 받은 국가의 숫자, 국제적으로 질병이 확산된 정도, 국제적인 무역 및 이동 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매 년 발생하는 홍수 또는 가뭄 등의 사건의 경우에 통상 발생하였던 사건의 규모와의 차이 등.
- ② (대응의) 응급도: 실제 치사율 및 질병 발생률, 치사율 및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정도, 영양실조 상태 및 영양실조 상태가 증가하는 정도, 병원균의 전달 정도, 국제적인 확산 속도, 치명적인 사례의 비율, 환경 또는 음식 오염의 정도, 피난 등으로 인한 인구 이동의 속도와 추가적인 이동의 필요성, 무장 충돌의 강도 및 추가적인 충돌의 가능성, 자연 재해의 강도 및 장기적인 영향 등.

(라) 위험 평가 결과의 활용

사건에 대한 위험 평가의 결과에 따라 WHO는 다음의 조치 중 한 가지를 취한다.

- ① 사건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사건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국가적인 차원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WHO의 대응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 위험 평가가 끝난 직후에 회원국과 기타 관련된 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 사건을 종결한다.
- ② 사건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사건이 장래에 공중 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WHO는 ㉢ 사건을 등급 없음(ungraded)로 분류하고 ㉣ 회원국에 최소한 30일에 한 번씩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추가적인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③ WHO는 회원국이 위험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건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준비 조치를 취하고, ㉤ 회원국이 부문별로 비상사태

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㉔ 위험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즉시 WHO는 WHO의 국가사무소 업무 연속성 계획을 세우고, 회원국과 기타 관련된 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 ③ 사건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사건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국가적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WHO의 대응을 요구하는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 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 평가가 종료된 직후에, 더디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위험 평가를 실시한 WHO 직원은 지역 담당관(Regional Adviser)에게 보고하고, 지역 담당관은 WHO의 세계적인 비상사태 관리 팀(Global Emergency Management Team, GEMT)의 구성원인 지역사무소와 본부에 있는 책임자(Director)에게 보고한다. ㉒ GEMT의 구성원인 본부에 있는 책임자는 위험 평가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GEMT의 구성원들과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grading)이 필요한 상황인지 결정한다. 등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 평가 후 24시간 이내에, 더디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을 결정한다. ㉓ WHO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 평가가 종료된 직후에, 더디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회원국과 기타 관련된 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마) 사건의 기록

WHO는 사건이 현재 공중 보건에 미친 영향 및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에는 위험 평가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WHO의 사건 관리 시스템(Ev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위험 평가가 종료된 직후에 작성되어야 한다.

(바) 사건의 종결

GEMT의 담당자가 WHO의 대응이 ㉠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 더 이상 필요 없어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을 제거하여도 좋다고 판단한 경우에 사건을 종결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WHO의 내부적인 등급 부여 절차

(가) 등급의 목표 및 고려 사항

등급 부여는 WHO의 내부적인 절차로 ㉠ 필요한 지원의 정도, 복잡성, 기간에 관하여 WHO 전체에 알리고, ㉡ WHO 사무소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회원국, 관련 기관, WHO 국가사무소의 대응을 지지하면서, WHO가 긴급성을 적절히 판단하여 적절한 자원을 동원하였는지 확인한다. ㉣ WHO의 비상사태 대응 절차(Emergency Response Procedures)와 비상사태와 관련한 정책을 작동시키고, ㉤ WHO 국가사무소의 책임자에게 WHO의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적용할 것을 상기시키고, ㉥ WHO 내부 및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정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린다.

등급의 부여에 있어서 ㉠ 회원국과의 상담, ㉡ 국제적인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 ㉢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또는 국제구호단체 조정기관(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다른 국제적인 분류 기준에 따른 사건의 등급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에만 의존하여 등급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요소도 고려한다.

(나) 등급의 정의



- ① 등급 없음: 사건을 평가하고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였으나, WHO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 ② 등급 1: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도로 판단되어, WHO 국가사무소 또는 국제적인 WHO의 최소한의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 등급 1의 경우에 WHO 국가사무소에서 사건을 지원하며, 국가사무소에서 필요한 자원은 지역사무소가 조정한다.



- ③ 등급 2: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중 보건에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WHO 국가사무소 또는 국제적인 WHO의 중간 정도의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 등급 2의 경우에 WHO 국가사무소가 요구하는 지원은 중간 정도이며, 지역사무소에서 파견된 비상사태 지원 팀(Emergency Support Team)이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조정한다.



- ④ 등급 3: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중 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WHO 국가사무소 또는 국제적인 WHO의 상당한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 등급 3의 경우에 WHO 국가사무소가 요구하는 지원은 상당한 정도이며, 지역사무소에서 파견된 비상사태 지원 팀(Emergency Support Team)이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조정한다.

〈표 1 등급별 지원의 정도〉

지원의 유형	등급 1	등급 2	등급 3
기술적인 지원	국제적인 차원에서 원격으로 기술적인 보조 제공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하여 원격으로 조언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비상사태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보조 제공, 발생한 위험 및 지역에 특화된 지침 발행
재정적인 지원	최소한도의 지원 또는 지원 없음(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대처)	WHO의 지역적인 재정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재정 자원을 동원	WHO의 지역적인 재정 자원 및 국제적인 재정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 필요한 경우에 기부금 모집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최소한도의 지원 또는 지원 없음(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대처)	필요한 경우에 비상사태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가 파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no-regret basis)에 따라 전문가 팀 파견

(다) 등급 부여의 과정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 평가 후 24시간 이내에, 더디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 1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비상사태 관리 팀(Global Emergency Management Team, GEMT)이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WHO 국가사무소의 책임자에 의하여 결정되나,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GEMT에 사건을 회부한다. GEMT의 구성원은 누구나 비상사태에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GEMT의 구성원인 WHO 본부에 있는 책임자(Director)에게 화상 회의 소집의 의무가 있다. 사건에 등급 3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WHO 사무총장(Director General)과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WHO 지역사무소의 책임자가 GEMT의 화상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GEMT는 사건의 규모 및 대응의 응급도에 관한 위험 평가 결과와 다음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에 등급을 부여한다.

- ㉠ 사건의 복잡성: 공중 보건을 저해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 비상사태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알려지지 않은 병원균 또는 화학적 독성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대응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국가가 아닌 조직 또는 반정부 기관 등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인도주의적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직원들 안전의 문제, 관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등.
- ㉡ 사건의 전후 사정: 보건 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정도, 영향을 받은 인구의 취약성, 공공의 인식, 알려져 있는 위협의 정도, 비상사태와 관련한 공포의 정도, 관련 국가의 준비 및 역량의 수준, 비상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의 수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 등.

비상사태에 관한 WHO의 등급은 GEMT의 등급에 관한 화상 회의가 끝난 직후에 효력이 발휘되고, 비상사태 대응 절차(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및 WHO의 실행 기준(Performance Standards)이 시작된다. 더디게 발생한 사건에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 GEMT는 문제가 된 비상사태에 적합한 실행 기준을 시작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상의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GEMT는 등급 2의 경우에는 지역사무소의 책임자에게, 등급 3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 부여와 관련한 결정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사태의 등급은 등급 2의 경우에는 지역사무소의 책임자가, 등급 3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등급 부여가 있는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통하여 WHO 전체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등급 부여가 있는 후에도 GEMT와 WHO 국가사무소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등급을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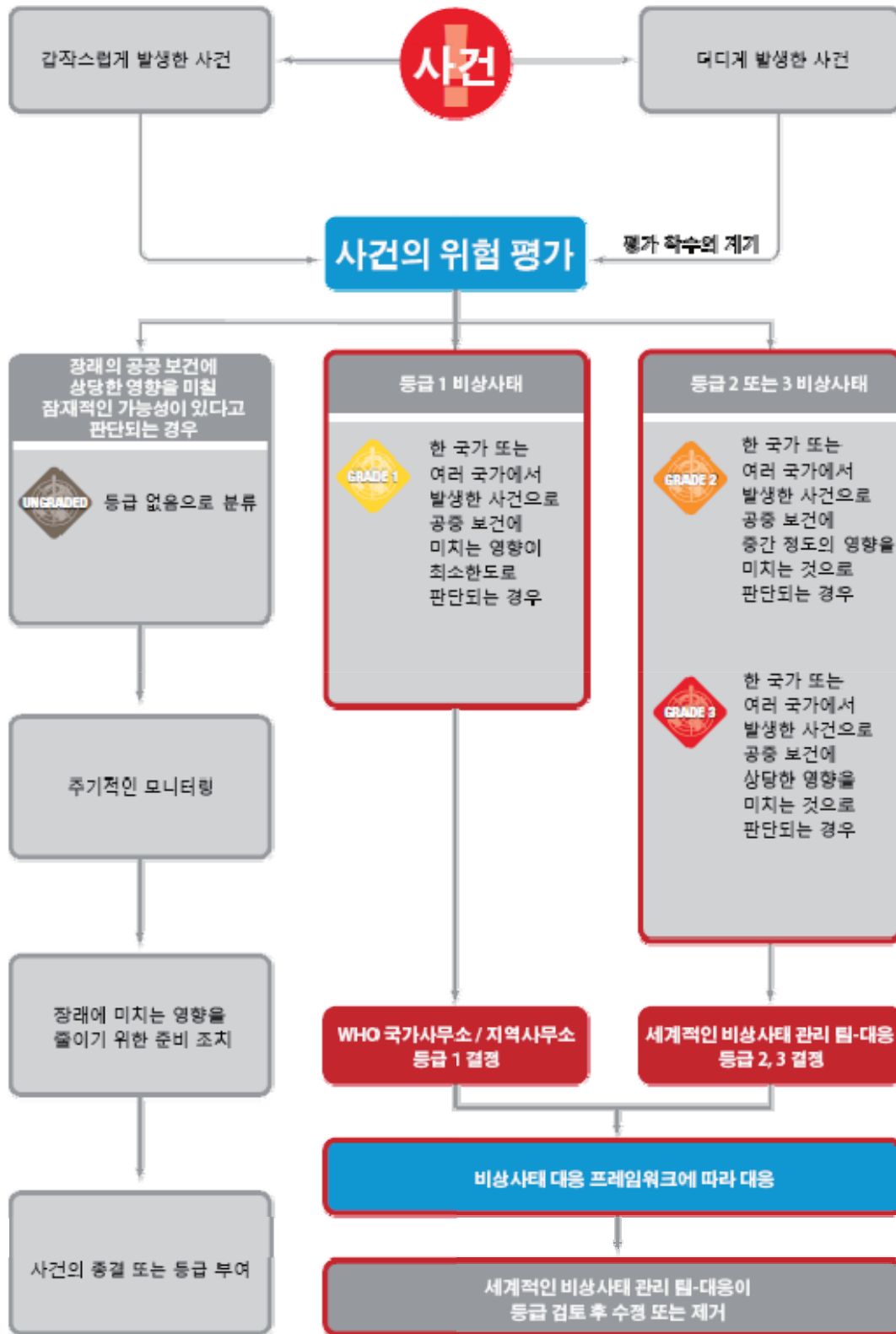
(라) 등급의 제거

GEMT가 비상사태의 극심한 단계가 종료되고 더 이상 등급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등급의 제거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부여되고 3달 이내에 등급이 제거된다. 이러한 등급의 제거는 GEMT의 구성원인 WHO 본부에 있는

책임자(Director)가 이메일로 발표하게 된다. 비상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GEMT는 비상사태를 다시 ‘지연됨(protracted)’으로 정의하고 WHO의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GEMT는 3개월 단위로 상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비상사태에 대하여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WHO가 등급을 제거하는 경우에, WHO 국가사무소의 책임자는 다른 관련 기관에 WHO의 직원 지원 및 활동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또한 WHO 국가사무소의 책임자는 회원국 및 다른 관련 기관과 현장에서 철수하는 적절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공중 보건 기관을 활용한 추가적인 조치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한다.

〈그림 7〉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 절차도



(3)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WHO 실행 기준

(가) WHO 실행 기준

시간적으로 적절한 대응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치사율, 질병 발생률, 장애 발생률을 줄이고,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고, 회원국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행 기준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응한다.

■ 12시간 이내

- ① 비상사태에 관한 WHO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WHO 내의 관련 직원들 사이에 연락처를 공유한다.
- ② WHO 국가사무소 및 관련 사무소를 재정비하여 비상사태 대응 팀(Emergency Response Team, ERT)을 구성한다. ERT는 등급이 제거되거나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four critical functions)을 충실히 수행하고 첫 번째 실행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48시간 이내

- ③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처음 연락을 시도한다.
- ④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역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 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보건 업무와 관련한 기초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 ⑥ 표준화된 서식을 이용하여 첫 번째 상황 보고서, 보도 자료, 그리고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연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72시간 이내

- ⑦ ERT가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WHO 국가사무소의 직원을 보강하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파견한다. 등급 3인 경우에, 또는 가능하면 등급 2인 경우에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no-regret basis)에 따라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를 파견하여 ERT를 이끌도록 한다.
- ⑧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행정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지원 및 물류의 제공을 시작한다.
- ⑨ 다른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조직을 만들고,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한다.
- ⑩ UN과 관련한 회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한 회의, 위생이나 영양, 물류의 공급 등 공중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다루는 회의에서 WHO와 보건 부문을 대표하여 참석한다.
- ⑪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중 보건의 악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위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처음 3개월 동안의 보건 부문의 목표 및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⑤에 언급한 기초적인 분석 자료를 활용한다.
- ⑫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과정의 한 가지로, 아래 ㉑에 제시된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합동 평가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건 부문의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 5일 이내

- ⑬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의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단기간의 대응 전략 및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처음 3개월 동안 취할 적절한 예방 및 통제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 7일 이내

- ⑭ 필요한 경우에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⑮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수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예방 및 통제 방법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물류의 공급도 포함된다.
- ⑯ 재난 등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공중 보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바로 경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매 주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한다.
- ⑰ 국가적인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프로토콜, 보건 기준, 방법론, 수단, 모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모니터링한다.
- ⑱ 두 번째 상황 보고서, 보도 자료, 그리고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연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러한 서류를 일주일에 2회 작성한다.
- ⑲ 적절하게 측정된 보건 지표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한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매 주 이러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한다.
- ⑳ 다른 보건 관련 기관의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및 통제 방법의 이행과 서비스의 제공 사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 15일 이내

- ㉑ 위 ⑫에 언급한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합동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 60일 이내

- ㉒ (15일 이후 60일 이전에) 보건 부문에 특화된 철저하고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 부분의 합동 조직을 이끈다.

- ㉓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에서 복구로 전환하는 복지 부분의 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나) WHO 실행 기준의 적용

WHO 실행 기준은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 부여와 함께 효력이 발생되고, 모든 등급이 부여된 비상사태에 적용된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 WHO가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 순간부터 WHO는 시간 순서에 따라 위에 제시된 실행 기준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더디게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 WHO가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 순간부터 GEMT가 지정한 시간 순서에 따라 실행 기준에 맞추어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에 WHO 국가사무소가 없거나, 여러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WHO의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지역사무소와 본부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여 사건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정보 관리를 진행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국제적인 통제 전략을 개발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상황 보고서와 보도 자료 등을 작성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은 등급이 부여된 모든 비상사태에 적용되고, WHO 실행 기준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

(다) 실행 기준에 대한 보고

WHO는 실행 기준에 대하여 매 년 보고한다.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무소는 등급이 부여된 비상사태에서 실행 기준에 따른 이행을 추적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특정한 비상사태에서 특정한 실행 기준을 따르는 것이 불필요하였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제구호단체 조정기관(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의 등급 3 비상사태의 경우에, WHO는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실행 기준에 따른 성과를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조정자(Humanitarian Coordinato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

(가)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

WHO가 비상사태에서 실행 기준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하기 위하여서 WHO는 다음의 네 가지 중점 기능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 ① 리더십: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의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을 지지하면서, 보건 부문에서의 대응과 관련하여 리더십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② 정보: 보건과 관련된 위험 및 수요, 보건 부분의 대응 등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및 보도와 관련된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비상사태에 요구되는 보건과 관련된 수요에 적합한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건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침, 기준 및 프로토콜 사용을 권장하며, 질병 감시 및 초기 경고 시스템 구축 등을 돕는다. WHO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보건 부문 관련 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WHO의 직접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최후의 경우에는 순회병원 등을 마련하여 보건과 관련된 수요에 직접 대응한다.
- ④ 핵심 서비스: 사무실 마련, 필요한 물류의 획득 및 공급, 비상사태 대응 전문가 및 인적 자원의 관리, 재정적인 관리 등을 제공한다.

(나) 네 가지 중점 기능의 제공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에 WHO 국가사무소는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을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동원하여 이러한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중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상사태 대응 팀

(Emergency Response Team, ERT)은 상황에 따라 국가사무소와 국가 내 여러 지소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ERT는 일반적으로 국가사무소의 책임자가 지휘하지만, 등급 3인 경우 또는 등급 2에 해당되나 필요한 경우에 비상사태 대응의 경험이 많은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가 파견되어 ERT를 지휘하기도 한다. ERT는 국가사무소 소속의 직원을 재배치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네 가지 중점 기능에 관하여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파견되기도 한다.

(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네 가지 중점 기능에 대한 지지

등급 2 또는 등급 3이 부여된 비상사태의 경우에, WHO는 ERT가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지원 팀(Emergency Support Team, EST)을 구성한다. WHO 국가사무소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EST가 바로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ST는 ㉠ 네 가지 중점 기능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를 동원하여 파견하고, ㉢ 관련 보건 기관 및 언론 기관 사이에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조정하고, ㉣ 비상사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국제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 지역사무소 또는 본부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금을 관리한다. 한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EST는 지역사무소에 위치하게 되고, 지역사무소에 있는 직급이 높은 비상사태 지원 팀 전문가(Emergency Support Team Leader, ESTL)가 EST를 지휘한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EST는 본부에 위치하게 되고, 본부에 있는 ESTL이 EST를 지휘한다.

(5) WHO의 세계적인 비상사태 관리 팀

(가) 세계적인 비상사태 관리 팀의 목적 및 구성

세계적인 비상사태 관리 팀(Global Emergency Management Team, GEMT)은 2011년도 후반에 설치되었는데,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응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 기관 수준에서의 준비, 비상사태에서의 대응에 관한 WHO의 계획, 관리,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EMT는 모든 위험 물질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위험의 관리(all-hazards emergency risk management)에 책임이 있는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책임자들(Directors)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 관리에는 예방 및 감시, 경고 및 대응이 포함되고, GEMT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환, 자연 재해, 무장 충돌, 인축 공통 전염병, 식품 안전, 화학 성분 및 방사능 물질과 관련한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정한 위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부, 지역사무소, 국가사무소의 대표가 GEMT의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세계적인 비상사태 관리 팀의 역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GEMT의 일부 구성원들은 GEMT-대응(GEMT-Response, GEMT-R)을 구성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관리하게 된다. GEMT-R은 본부 및 지역사무소의 책임자로 구성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사무소의 책임자와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도 참여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비상사태에서, GEMT-R은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사무소, 지역사무소, 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직원과 자원을 재배치하고,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할 책임이 있다. 또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장소에 배치된 비상사태 대응 팀(Emergency Response Team, ERT)과 비상사태 지원 팀(Emergency Support Team, EST)의 인적 구성이 적절한지 및 필요한 전문 지식 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 또한 GEMT-R은 WHO의 자원을 비상사태의 정도, 기간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잘 배분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결정에는 현재 발생한 비상사태 이외에 다른 비상사태의 지원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고려도 반영되어야 한다.

GEMT-R은 ㉠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WHO의 실행 기준, ㉡ 비상사태에서의 표준적인 운영 절차, ㉢ 전문가 관련 정책, 비상사태 전문가 관련 정책,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 ㉔ 비상사태 대응 절차, ㉕ 내부 및 외부와의 신속한 의사소통 방식을 적용하고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GEMT-R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공중 보건에 위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정보를 재빨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외부에 알려 적절한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사건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정보에 기초한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EMT는 등급이 부여된 모든 비상사태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는 등급 부여의 과정, 등급 부여의 근거, 비상사태에 적용되었던 절차, 실행 기준에 따른 실제 실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비상사태에 대한 WHO의 대응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

(가) 전문가 관련 정책

WHO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대응 팀(Emergency Response Team, ERT)의 일원으로 WHO 국가사무소에 합류할 경험이 많은 전문가(surge)를 동원하고 급속히 파견한다. 전문가는 WHO 조직 전체에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망을 통하여 동원된다.

WHO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3개월 동안 두 단계의 전문가 동원 절차를 따른다. 먼저 전문가 파견 이전에 WHO 국가사무소는 ERT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재배치하고, ERT의 구성에 추가적인 전문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㉔ 단계 1(착수, 전문가 팀 1):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 부여 후 72시간 안에 WHO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에 따라 WHO 전체에서 이미 확인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동원한다. 단계 1에서 동원된 전문가 팀 1은 비상사태 현장에 파견된 WHO 국가사무소 직원과 협력하거나 교체를 하게 된

다. 파견된 전문가 팀 1과 재배치된 국가사무소 직원들은 ERT 를 구성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WHO 의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가 팀 1의 구성원들은 최소한 3주, 최대한 4주 동안 ERT 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등급 3 및 등급 2에 해당되거나 필요한 경우에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 HER)가 ERT 를 지휘하기 위하여 파견되는데, HER 은 최소한 8주 동안 ERT 에서 활동하게 된다.

- ⑥ 단계 2(강화 및 교체, 전문가 팀 2):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 부여 후 2주 이내에 조직되는데, WHO 는 WHO 내부, 보건 부문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동원하고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 팀 2는 WHO 국가사무소 및 비상사태 현장에 있는 ERT 를 강화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팀 2의 구성원들은 최소한 6주, 최대한 8주 동안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 팀 2의 구성원이 전문가 팀 1의 구성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전문가 팀 1과 2의 구성원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 부여 후 12주가 종료되는 시점에, 국가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전문가 팀에 대한 추가적인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WHO 지역사무소의 특별한 준비 과정이 없는 한, 모든 전문가 팀은 해산하고, 국가사무소는 그 이전의 일상적인 업무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귀하는 국가사무소 직원 및 전문가 팀과 새로 파견된 전문가가 1주일 동안 함께 활동하게 된다.

전문가 팀에 파견된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숙소 및 의사소통, 이동이 보장되고, 비상사태 대응 절차 및 표준적인 운영 절차, 서로 동의한 업무 내용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파견 전에 일정한 훈련 및 간단한 장비가 제공되며, 전문가 팀에 자원한 직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WHO 는 비상사태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직원들이 2년에 최소한 한 번은 전문가 팀의 구성원으로 대기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나)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 정책

등급 1과 대부분의 등급 2 비상사태에서, WHO 국가사무소의 책임자가 ERT 를 지휘하게 된다. 그러나 등급 3과 등급 2 중 일부의 경우에 경험이 많은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 HER)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에 따라 ERT 를 지휘하기 위하여 72시간 이내에 파견된다. HER 은 비상사태 대응 절차(Emergency Response Procedures)에 제시된 리더십 및 관리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미리 마련된 HER 목록 중에서 선발된다.

HER 은 비상사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직원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게 되는데,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배치된 WHO 국가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팀으로 파견된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도 지니게 된다. HER 은 WHO 의 실행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ERT 의 활동을 감독하고, 비상사태와 관련된 자금의 지출에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HER 는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WHO 를 대표하게 된다.

(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

모든 비상사태의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WHO 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인적 자원과 자금을 충분히 제공하여 WHO 국가사무소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 제공된 인적 자원과 자금이 필요한 수준 이상이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아무런 비난 없이 완전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no-regrets policy)은 비상사태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및 자금을 적게 배정하여 발생하게 되는 위험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이러한 자원을 많이 배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인적 자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은 전문가 관련 정책 및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촉진한다.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은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

HER)에게 WHO의 일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0,000불(미국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비상사태에서의 표준적인 운영 절차에 따라 사후에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다.

(7) WHO의 비상사태 대응 절차

(가) 리더십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12시간 이내	<p>① 비상사태에 관한 WHO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WHO 내의 관련 직원들 사이에 연락처를 공유한다.</p> <p>② WHO 국가사무소 및 관련 사무소를 재정비하여 비상사태 대응 팀(Emergency Response Team, ERT)을 구성한다. ERT는 등급이 제거되거나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four critical functions)을 충실히 수행하고 첫 번째 실행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p>	<p>지역사무소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WHO 전체에 연락처를 공유한다.</p> <p>등급 2와 등급 3의 경우에, 지역사무소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비상사태 지원 팀(Emergency Support Team, EST)을 구성하고, 책임자 등을 임명한다.</p> <p>WHO 국가사무소에 ERT에 관한 표준적인 운영 도표 및 국가사무소 재배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p>	<p>(등급 2와 등급 3의 경우에) 본부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WHO 전체에 연락처를 공유한다.</p> <p>등급 2와 등급3의 경우에, 네 가지 중점 기능에 기초하여 EST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본부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EST에 관한 본부의 지원을 조정할 본부 책임자 등을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에 EST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직원을 지역사무소에 파견한다.</p>
	<p>ERT에 관한 표준적인 운영 도표에 기초하여, ERT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전문가 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지역사무소에 요청한다.</p>	<p>국가사무소의 지원 요청에 응하고, 지원과 관련하여 본부와 연락을 취한다. 전문가 팀을 파견하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p>	<p>지원에 관한 지역사무소의 요청에 응한다.</p> <p>본부의 직원을 EST의 일원으로 지역사무소에 파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시작한다.</p> <p>본부 전문가를 ERT의 일원으로 국가사무소에 파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시작한다.</p>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48시간 이내	(국가사무소의 보고, 언론 보도 사항, 다른 지역 기관의 정보, 기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상황, 보건 부문 전체의 대응, WHO의 대응을 모니터링한다.	지원을 돕는다. 국제적인 기구, 기관, 언론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대응을 모니터링 한다.
③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관찰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처음 연락을 시도한다.	④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역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 및 기관, 대사관과 함께 지지한다. 비상사태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는 국제 구호단체 조정기관(ASC) 회의에서 WHO와 보건 부문을 대표한다.
④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역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가사무소의 책임자는 관련 정책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UN 국가 팀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ERT를 강화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경합이 있는 전문가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에 도착하였는지 확인한다. 등급 3인 경우에, 또는 가능하면 등급 2인 경우에도 ERT를 지휘할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에 도착하였는지 확인한다.
72시간 이내	⑦ ERT가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WHO 국가사무소의 직원을 보강하거나 경합이 있는 전문가를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파견한다. 등급 3인 경우에, 또는 가능하면 등급 2인 경우에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no-regret basis)에 따라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를 파견하여 ERT를 이끌도록 한다.	등급 2와 등급 3의 경우에, 세계적인 보건 부문 협력 기관과 회상을 주도한다. ERT에 보건 부문 지침 및 기타 관련 지침의 사본을 제공한다.
⑧ 다른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조직을 만들고,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한다.	⑩ UN과 관련한 회의,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한 회의, 위생이나 영양, 물류의 공급 등 공중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다루는 회의에서 WHO와 보건 부문을 대표하	지원을 돕는다.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p>여 참석한다. 중앙 비상사태 대응 기금(CERT,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와 관련하여 보건 부분의 예산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의 조정자(Humanitarian Coordinator)에게 알린다.</p>	<p>분석, 우선순위 선정 및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p>	
<p>5일 이내</p> <p>⑬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의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단기간의 대응 전략 및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처음 3개월 동안 취할 적절한 예방 및 통제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p>	<p>조치 방안에 대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및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방안의 실제 작성 및 편집을 돕고, 예산 편성을 지원한다. 또한 WHO의 규칙 및 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p>	<p>지원을 돕는다.</p>
<p>7일 이내</p> <p>⑭ 필요한 경우에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p>	<p>WHO의 규칙 및 규정, 기부금 관련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p>	<p>지원을 돕는다. 기부금 관련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관련 문서에 대한 최종 편집을 한다.</p>
<p>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기부자들에게 보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마련을 시도하고, 마련된 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보고한다.</p>	<p>지역적인 단위에서 자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등급 2와 등급 3의 경우에, 기부자들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조치 계획 등을 알리는 회의를 개최한다.</p>	<p>국제적인 단위에서 자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등급 2와 등급 3의 경우에, 기부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다. 등급 3의 경우에, 기부자들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조치 계획 등을 알리는 회의를 개최한다. 기부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한다.</p>
<p>⑮ 다른 보건 관련 기관의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및 통제 방법의 이행과 서비스의 제공 사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p>	<p>필요한 경우에 모니터링하는 도구, 기술적인 지원 및 분석을 제공한다.</p>	<p>지원을 돕는다.</p>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60일 이내		
21일 이내에 전문가 팀 2의 구성원들의 도착을 위하여 교통편, 숙소, 사무실 등을 준비한다.	전문가 팀 1의 구성원들을 지원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전문가 팀 2의 구성원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에 도착하였는지 확인한다.	지원을 돕는다.
30일 이내에 자금 마련과 관련한 서류를 보건 부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수정한다.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을 돕는다.
필요한 경우에 장기간 체류할 직원의 도착을 준비한다.	장기간 체류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㉔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에서 복구로 전환하는 복지 부분의 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에 대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및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방인의 실제 작성 및 편집을 돕고, 예산 편성을 지원한다.	지원을 돕는다.
등급 제거 이후		
WHO 국가사무소의 직원 및 활동 변화에 관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하는 다른 기관 및 보건 부문에 알린다.	평가 작업을 한다.	평가 작업을 지원한다.

(나) 정보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p>24시간 이내</p> <p>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는지 확인한다.</p>	<p>국가사무소, 지역사무소, 본부 사이의 모든 의사소통을 이클라우드, 인터넷 웹사이트, 공유 지점 이메일, 연락망 등을 활용하여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내부 회의의 회의 내용을 제공한다. 내부 및 외부와 의사소통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한다.</p>	<p>등급 3의 경우에 WHO의 의사소통 전담 부서(Department of Communications)가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담당한다.</p>
<p>48시간 이내</p> <p>비상사태가 발생한 현장에서 첫 번째 언론 인터뷰를 한다.</p> <p>WHO의 사건 관리 시스템(Event Management System)에 모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한다.</p> <p>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보건 업무와 관련한 기초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p> <p>⑥ 표준화된 서식을 이용하여 첫 번째 상황 보고서, 보도 자료, 그리고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연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p>	<p>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p>	<p>지원을 돕는다.</p>
<p>72시간 이내</p> <p>⑨ 다른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조직을 만들고,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한다.</p>	<p>도구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p>	<p>지원을 돕는다.</p>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p>⑫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과정의 한 가지로, 아래 ⑭에 제시된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합동 평가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건 부문의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p>	<p>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의 협력 기관 및 관련된 지역사무소 직원들에게 결과를 알린다.</p>	<p>국제적인 기부자들, 협력 기관, 관련된 본 부 직원들에게 결과를 알린다.</p>
<p>7일 이내</p> <p>⑬ 두 번째 상황 보고서, 보도 자료, 그리고 비상상태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연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러한 서류를 일주일에 2회 작성한다.</p> <p>⑭ 적절하게 측정된 보건 지표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한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매 주 이러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한다.</p>	<p>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편집을 돕는다. 지역의 협력 기관 및 관련된 지역사무소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p>	<p>국제적인 기부자들, 협력 기관, 관련된 본 부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p>
<p>15일 이내</p> <p>⑮ 위 ⑫에 언급한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합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p>	<p>지역적으로 배포한다.</p>	<p>국제적으로 배포한다.</p>
<p>60일 이내</p> <p>⑯ (15일 이후 60일 이전에) 보건 부문에 특화된 철저하고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 부문의 합동 조직을 이끈다.</p>	<p>방법론, 도구 및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p>	<p>지원을 돕는다.</p>

(다)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72시간 이내		
①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중 보건에 악화 가능성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위험,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처음 3개월 동안의 보건 부문의 목표 및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⑤에 언급한 기초적인 분석 자료를 활용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5일 이내		
③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의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단기간의 대응 전략 및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처음 3개월 동안 취할 적절한 예방 및 통제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7일 이내		
⑤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수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예방 및 통제 방법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물류의 공급도 포함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⑩ 재난 등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공중 보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바로 경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매 주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시판을 마련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⑪ 국가적인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국제적인 프로토콜, 보건 기준, 방법론, 수단, 모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모니터링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60일 이내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관련된 부서로부터 입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등급 2 또는 등급 3의 경우에 EST를 통하여 제공한다.)
③ 보건부 및 기타 보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응에서 복구로 전환하는 복지 부분의 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라) 핵심 서비스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72일 이내	계약 및 파견과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전문가 팀을 파견한다. 물류의 공급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지역사무소에 비축되어 있던 물류를 제공한다. 지역사무소의 비상사태 대응 자금을 제공하고, 국가사무소의 비상사태 대응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조언한다. 표준 운영 지침의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본부와 국제적인 협력 기관으로부터 파견되는 전문가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돕는다. 국제적인 협력 기관과 함께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비축되어 있던 물류의 제공을 지원한다. 본부의 비상사태 대응 자금의 사용을 지원한다. 표준 운영 지침 상의 지원을 돕는다.
⑦ ERT가 WHO의 네 가지 중점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WHO 국가사무소의 직원을 보강하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파견한다. 등급 3인 경우에, 또는 가능하면 등급 2인 경우에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정책(no-regret basis)에 따라 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를 파견하여 ERT를 이끌도록 한다.		
⑧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행정적, 재정적, 인적 지원의 지원 및 물류의 제공을 시작한다.		

WHO 국가사무소	WHO 지역사무소	본부
<p>보건 비상사태 전문가(Health Emergency Leader)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필요한 경우에 500,000불(미국달러)까지 당장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p>	<p>지역사무소를 통하여 모집된 자금을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 내용을 보고한다.</p> <p>EST 구성원들과의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고, 비용을 상환하는 등의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협상한다. 자금을 재분배하고, 마련된 자금을 추적하고, 기부자들에게 대한 보상을 마련하고, 재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부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보고서를 전달한다.</p>	<p>본부를 통하여 모집된 자금을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 내용을 보고한다.</p> <p>지원을 돕는다.</p>
<p>지역사무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본부의 긴급 대응 계획에서 비상사태 전문가에게 500,000불(미국달러)까지 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p>	<p>지역사무소의 긴급 대응 계획에서 비상사태 전문가에게 500,000불(미국달러)까지 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p>	<p>지역사무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본부의 긴급 대응 계획에서 비상사태 전문가에게 500,000불(미국달러)까지 할당하는 것을 승인한다.</p>



3. 시사점

자연 재해, 무장 충돌, 질병 발생, 식품 오염, 화학 물질 또는 핵폐기물 유출 등으로 공중 보건 상 대규모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영향력이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WHO는 전염성 질병의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태풍, 허리케인, 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의 공중 보건 상의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다. 2015년도에 발생한 메르스 집단 감염 사태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중 보건 상 대규모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WHO의 비상사태 대응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질병 발생뿐만 아니라 지진, 폭우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1. UN OCHA

- ▶ An End in Sight: Multi-Year Planning to Meet and Reduce Humanitarian Needs in Protracted Crises, OCHA Policy and Studies Series (July 2015).
- ▶ Collateral: The Human Cost of Explosive Violence in Ukraine, OCHA-PAX (2015).
- ▶ Crowdfunding for Emergencies, OCHA Policy and Studies Series (August 2015).
- ▶ Interoperability: Humanitarian Action in a Shared Space, OCHA Policy and Studies Series (July 2015).
- ▶ Shattered Lives: Civilians Suffer from the Use of Explosive Weapons in Libya, OCHA-PAX (2015).
- ▶ Shrinking the Supply Chain: Hyperlocal Manufacturing and 3D Printing in Humanitarian Response, OCHA Policy and Studies Series (July 2015).
- ▶ State of Crisis: Explosive Weapons in Yemen, OCHA-AOAV (2015).
- ▶ UN-CMCoord Field Handbook (v1.0), 101 Series (2015).
- ▶ World Humanitarian Data and Trends 2015 (2015).

2. WHO

<Ageing and Life-Course>

- ▶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2015).

<Antimicrobial Resistance>

- ▶ Worldwide Country Situation Analysis: Response to Antimicrobial Resistance (2015).

<Coronavirus Infections>

- ▶ Clinical Managemen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Whe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s Suspected (2015).
- ▶ MERS-CoV: Investigating of Cases of Human Infection (2015).
- ▶ MERS-CoV: Management of Asymptomatic Patients (2015).
- ▶ MERS-CoV: Surveillance for Human Infection (2015).

<Emergencies Preparedness, Response>

- ▶ Consolidated Ebola Virus Disease Preparedness Checklist (2015).
- ▶ Ebola: Ending the Current Outbreak, Strengthening Global Preparedness (2015).
- ▶ Ebola at End-2014: Getting to Zero, Executive Board Special Session on Ebola (2015).

- ▶ Ebola Response Phase 3: Framework for Achieving and Sustaining a Resilient Zero (2015).
- ▶ Fact Sheet on Ebola Virus Disease (2015).
- ▶ Health Worker Ebola Infections in Guinea, Liberia and Sierra Leone: Preliminary Report (2015).
- ▶ Rapid Guidance on the Decommissioning of Ebola Care Facilities (2015).
- ▶ Report of the Ebola Interim Assessment Panel—July 2015 (2015).
- ▶ Surveillance Strategy During Phase 3 of the Ebola Response (2015).
- ▶ WHO Strategic Response Plan 2015: West Africa Ebola Outbreak (2015).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 ▶ Meeting of the Sub-Network of Developing Countries Held December 2015 (2015).

<Maternal, Newbor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 ▶ Caring for the Newborn at Home (2015).
- ▶ Caring for the Newborns and Child in the Community: Package of Resources (2015).
- ▶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Health Care Services for Adolescents (2015).
- ▶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 2015 (2015).
- ▶ Managing Possible Serious Bacterial Infection in Young Infants When Referral Is Not Feasible: Guidelines (2015).

- ▶ Pregnancy, Childbirth, Postpartum and Newborn Care: A Guide for Essential Practice (3rd Edition) (2015).
- ▶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ommunity Health Workers to Deliver Care for Sexual,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2015).
- ▶ WHO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Maternal Peripartum Infections (2015).
- ▶ WHO Recommendations on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s for Maternal and Newborn Health 2015 (2015).
- ▶ WHO Recommendations on Interventions to Improve Preterm Birth Outcomes (2015).
- ▶ WHO Recommendations on Interventions to Improve Preterm Birth Outcomes: Executive Summary (2015).
- ▶ WHO Recommendations on Interventions to Improve Preterm Birth Outcomes: Highlights and Key Messag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2015 Global Recommendations (2015).
- ▶ WHO Technical Consultation on Newborn Health Indicators: Every Newborn Action Plan Metrics (2015).

<Neglected Tropical Disease>

- ▶ Rabies: Rationale for Investing in the Global Elimination of Dog-Mediated Human Rabies, Freedom from Dog-Mediated Human Rabies Is a Global Public Good (2015).

<Nutrition>

- ▶ Birth Defects Surveillance Training: Facilitator's Guide (2015).
- ▶ Breastfeeding Advocacy Initiative: For the Best Start in Life (2015).
- ▶ Optimal Serum and Red Blood Cell Folate Concentrations in Women of Reproductive Age for Prevention of Neural Tube Defects (2015).
- ▶ UNICEF–WHO–World Bank Group: Joint Child Malnutrition Estimates, Key Findings of the 2015 Edition (2015).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 ▶ A Tool for Strengthening STI Surveillance at the Country Level (2015).
- ▶ Accelerating Dual Elimination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 of Syphilis and HIV through Use of New Diagnostic Tools (2015).
- ▶ Brief Sexuality–Related Communication: Recommendations for a Public Health Approach (2015).
- ▶ Ensuring Human Rights within Contraceptive Service Delivery: Implementation Guide (2015).
- ▶ Health Worker Roles in Providing Safe Abortion Care and Post–Abortion Contraception (2015).
- ▶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 (Fifth Edition) (2015).
- ▶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 Executive Summary (Fifth Edition) (2015).
- ▶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Wheel for Contraceptive Use (2015).

- ▶ Progress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Strategy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2006–2015, Document for the World Health Assembly (2015).
- ▶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2015).
- ▶ Sexual Health, Human Rights and the Law (2015).
- ▶ Stakeholder Consultation on Priority Implementation Research to Inform Development of WHO Normative Guidance on Topical Pre-Exposure Prophylaxis: Meeting Report (2015).
- ▶ Strengthening the Medico-Legal Response to Sexual Violence (2015).
- ▶ WHO Safe Childbirth Checklist Implementation Guide: Improving the Quality of Facility-Based Delivery for Mothers and Newborns (2015).
- ▶ WHO Statement on Depot-Medroxyprogesterone Acetate (DMPA) (2015).
- ▶ WHO Statement on Progestogen-Only Implants: Key Facts (2015).

<Strengthening Health Security by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15–2016 (2015).

<Tobacco Free Initiative>

- ▶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5: Raising Taxes on Tobacco (2015).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3

국제소비자법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및 동향 분석”

– UN, OECD, EU의 소비자정책을 중심으로 –

부록 ▶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송민수 박사는 전남대학교에서 2008년 민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활동 분야는 민법과 소비자법 그리고 소비자정책분야이다.

소비자보호 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및 동향 분석 - UN, OECD, EU의 소비자정책을 중심으로 -

송민수*

제1장 UN 소비자보호지침의 개정 동향

1. 개요

유엔소비자보호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 UNGCP)은 국제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소비자정책 및 법제를 마련하도록 촉구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다.¹ UNGCP는 1985년 제정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소비자정책 및 법제에 영향을 주었고,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정에서 UNGCP를 중요한 비교법적 선례로 수용되었고, 소비자정책의 추진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UNGCP는 1985년 제정 이후 1999년 1차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최근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개정논의가 추진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1 김성천, 유엔소비자보호지침(UNGCP)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2013, 1면.

되어 왔다.² 그 결과 2015년 12월 22일 유엔 제70차 총회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결의(A/RES/70/186)가 투표 없이 통과되어 유엔소비자보호지침이 대폭 개정되었고, 2016년 2월 4일 배포되었다.³ UNGCP는 이번 2차 개정으로, 3개 장(章)과 30개 조문이 추가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2. UNGCP의 연혁

UNGCP는 1985년 제정되었고, 1999년 개정된 이후 2015년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UNGCP는 1985년 4월 9일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채택된 결과물이다(Resolution A/C.2/54/L.24 9TH). 1985년 UNGCP는 4개장 총 4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목적 부분에서 “모든 국가의 소비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비자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제정한 것임을 명시했고, 지침(Guidelines)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의 소비자정책 및 법제의 방향을 제공했다. 특히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로서 ① 건강과 안전, ② 경제적 이익의 촉진과 보호, ③ 정보의 입수, ④ 소비자 교육, ⑤ 구제제도, ⑥ 단체·조직을 결성할 자유 등 6가지 소비자권리를 규정했다.

이후 UNGCP는 국제소비자보호기구(Consumer International : CI)의 요청에 따라 1999년 7월 26일 각국이 소비자보호를 환경보호와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의 촉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부분 개정 되었다(G.42~55). 개정된 지침은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정부의 정책 개발 및 이

2 국제소비자보호기구(Consumer International : CI)를 중심으로 한 UNGCP의 개정 제안이 있었고, 유엔무역개발회의(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가 2012년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UNGCP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왔다.

3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December 2015 (A/RES/70/186),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70/186>

행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을 다른 공공정책과 통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1985년 이후 전개된 새로운 기업활동 및 소비자문제, 기술발전 등 사회·경제·기술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UNGCP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I는 UNGCP가 그동안 소비자보호의 정책과 법제에 관한 근거 틀로서 작용했고 지금까지도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을 촉구했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도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유엔소비자보호지침 개정작업은 UNCTAD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에 관한 자문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 7월 첫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2013년 7월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고, 2014년 9월에 유엔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초안 보고서를 발표했고, 2015년 6월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결의초안이 작성되었다.

3. 개정 UNGCP의 구조와 주요 내용

현행 UNGCP는 제1장 목적, 제2장 적용범위, 제3장 일반원칙, 제4장 양호한 상업 활동에 관한 원칙, 제5장 지침, 제6장 국제협력, 제7장 국제담당기구 등 총 7개의 장과 총 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UNGCP는 UN 회원국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역할과 국제 협력 등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범위(제2장), 좋은 사업행위의 원칙(제4장), 국제담당기구(제7장) 등에 관한 장이 신설되었고, 소비자의 합법적 요구사항, 국가소비자보호정책, 지침의 내용 등 개별규정의 내용이 보완되는 등 총 30개 조문이 신설되었다.

가. 제장 목적

UNGCP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제1조).

모든 국가의 소비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비자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고, 소비자의 경제여건, 교육수준, 교섭력이 불평등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또한 소비자가 유해하지 않은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환경보호를 촉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

- (a) 자국민을 소비자로서 적절히 보호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를 지원⁴
- (b)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생산 및 분배방식의 촉진⁵
- (c)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분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 장려⁶
- (d)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모든 기업들의 남용적 기업관행을 억제하는 국가 지원⁷
- (e) 독립적인 소비자단체의 발전 촉진⁸
- (f) 소비자보호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 강화⁹
- (g)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 발전 장려¹⁰

4 To assist countries in achieving or maintaining adequate protection for their population as consumers

5 To facilit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atterns responsive to the needs and desires of consumers

6 To encourage high levels of ethical conduct for those engag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7 To assist countries in curbing abusive business practices by all enterpris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hich adversely affect consumers

8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consumer groups

9 To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h) 지속 가능한 소비의 촉진¹¹

나. 제2장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business-to-consumer transactions)이고,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도 포함하고 있다(제2조).

소비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회원국이 국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제3조).

다. 제3장 일반원칙

회원국은 다음에 정하는 지침 및 관련 국제 협정을 고려하여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개발,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감안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상황과 자국민들의 욕구에 적합하게 소비자 보호에 관한 독자적 우선 사항을 설정해야 한다.

- (a) 필수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¹²
- (b) 취약 소비자 보호¹³
- (c)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해로부터 소비자 보호¹⁴
- (d)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촉진 및 보호¹⁵

10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arket conditions which provide consumers with greater choice at lower prices

11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12 Access by consumers to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13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consumers

14 The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hazards to their health and safety

- (e) 소비자 개개인의 희망이나 요구에 따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이 가능하기 위한 적합한 정보에의 접근¹⁶
- (f) 소비자 선택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소비자 교육¹⁷
- (g) 효과적인 소비자분쟁 해결 및 구제의 이용가능성¹⁸
- (h) 소비자 단체와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자유¹⁹
- (i) 지속 가능한 소비 형태의 촉진²⁰
- (j)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이 기타 형태 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보호 수준을 밑돌지 않는 것²¹
- (k)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전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²²

라. 제4장 양호한 사업관행에 관한 원칙

사업자가 소비자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업행위에서 양호한 상관행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제11조).

- (a)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¹⁵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consumers

¹⁶ Access by consumers to adequate information to enable them to make informed choices according to individual wishes and needs

¹⁷ Consumer education, including education on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umer choice

¹⁸ Availability of effectiv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¹⁹ Freedom to form consumer and other relevant groups or organizations and the opportunity of such organizations to present their view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ffecting them

²⁰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²¹ A level of protection for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that is not less than that afforded in other forms of commerce

²² The protection of consumer privacy and the global free flow of information

- (b) 상업적 행위 (Commercial behaviour)
- (c) 공개 및 투명성 (Disclosure and transparency)
- (d) 교육 및 의식개혁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 (e) 프라이버시 보호 (Protection of privacy)
- (f) 소비자 고충 및 분쟁 (Consumer complaints and disputes)

마. 제5장 지침(Guidance)

UNGCP 제5장은 1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의 핵심영역과 특정분야와 관련된 조치 등에서 정부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A.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National policies for consumer protection)
- B. 신체의 안전 (Physical safety)
- C.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촉진과 보호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onsumers' economic interests)
- D.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준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quality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 E. 필수소비재와 서비스에 관한 배분시설 (Distribution facilities for essential consumer goods and services)
- F. 분쟁해결과 피해구제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 G.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mes)
- H. 지속가능한 소비의 촉진 (Promotion of sustainable consumption)
- I.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 J.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K. 특정영역에 관련된 조치 (Measures relating to specific areas) : 음식, 물, 약품, 에너지, 공공재, 여행 분야

바. 제6장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UNGCP 는 국가 간의 국제협력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제79조 이하).

사. 제7장 국제적인 제도상의 조직(International institutional machinery)

A. 제도상 협정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무역개발이사회에 있는 기존의 위원회 내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보호 법·정책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은 제도상의 조직이 된다(제95조).

B. 소비자보호법·정책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그룹의 기능

소비자보호법 및 정책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그룹을 UNCTAD 내에 설치하고(제95조), 지침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 10가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제97조).

4. 시사점

UNGCP 의 제2차 개정은 CI 의 개정논의 촉구 및 개정안 제시와 UNCTAD 의 개정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2015년 말 완료되었다. 제2차 UNGCP 개정으로 인해 향후 UN 회원국 정부의 소비자정책과 법제는 물론 기업의 경영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및 법제는 UNGCP 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먼저 소비자정책 분야에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법제 분야

에 있어서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UNGCP의 변화를 검토하고 수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특히, UNGCP의 제3장에 원칙 규정으로 추가된 4가지 사항(필수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취약소비자의 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수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전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비롯하여, 제4장에 신설된 양호한 사업관행에 관한 원칙, 그리고 제5장 지침에 추가된 사항(분쟁해결과 피해구제,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범위와 소비자 법제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가오는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18-2020)의 수립과 중요 정책과제의 개발 및 추진에 UNGCP의 개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소비자법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2장 OECD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 지침 및 권고 관련 동향

I. 서론

OECD²³ 소비자정책위원회(OECD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OECD

23 OECD의 목적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OECD는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정식명칭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이고, OECD 설립협약상의 목적(제1조)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를 규정하고 있다. OECD 활동으로는 우선, 정책검토(Peer Review)를 통한 상호 학습(Peer Learning)과 상호 압력(Peer Pressure)을 들 수 있다. 이는 회원국 간 정책경험(best practice)을 비교 또는 상호 학습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경제정책, 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이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으로,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전망, 에너지, 개발, 환경 등이 있다. 아울러 규범 제정(Rule Making) 역할로 선언(declaration), 지침, 약정(arrangement)과 같은

CCP)는 OECD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당국들이 참여하는 협력체로서 동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4월, 11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다.²⁴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로는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정책 지침, 참여적 전자상거래 보고서, OECD 소비자정책 의사결정에 관한 권고안, 기업의 자율규제, UN 소비자보호 지침 검토,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권고안 시행 점검 등을 볼 수 있다. 이 중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²⁵,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정책 지침²⁶ 그리고 OECD 소비자정책 의사결정에 관한 권고안은 최근 3년여의 논의를 거쳐 2014년에 마련되어 공개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와 성과를 분석하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한 관심은 인터넷경제에서의 소비자이익 보호와 소비자정책형성 및 접근방법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에 대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 새로운 성장요인(New Sources of Growth) 프로젝트 보고서와 참여형 전자상거래²⁷ 보고서의 작업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OECD 전자상거래 이슈관련 성과를 종합

非구속적 규범(soft law)과 결정(decision),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과 같은 구속력 있는 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확대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Outreach)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경제사회 체제 내에서의 적실성(relevance) 강화 목적을 추구한다.

24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OECD CCP)는 시장지배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1969년 11월 12일 설립되었고 현재 OECD 내 과학기술산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DSTI)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제48차 정례회의에 처음으로 옵저버(Observer)로서 참여하였고 이후 우리나라가 정식 회원자격을 취득한 1996년부터 2016년 제91차 정례회의에 이르기까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25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Intangible Digital Content Produc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36, 2014.

26 OECD, Consumer Policy Guidance on Intangible Digital Content Produc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41, 2014.

27 2013년 4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제86차 정례회의에서는 참여형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소비자보호 집행기구(ICPEN)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공동구매, B2C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문제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 회의 참석자들은

하여 1999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결과로 2016년 3월에 개정안이 공표되었다.²⁸ 이하에서는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정책 지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에 관한 개요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II.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1. 개요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은 2014년 4월 제87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배포되었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동 지침과 관련한 논의의 시작은 제77차 정례회의부터이다. 이 회의에서는 1999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를 논의하는 한편, 2009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OECD e-Conference 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 제80차 정례회의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품과 함께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보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제83차 정례회의에서는 ‘정보공개에의 명확성 및 투명성’, ‘주문 완료 후 정정’, ‘결제업체 · 수단별 소비자보호’ 및 ‘사기거래 소비자보호’의 총 4가지 이슈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이드선 초안을 마련하였고, 제84차 정례회의에서는 비공식 작업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사무국이 가이드선 초안을 수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수정된

소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를 통해 스스로가 방대한 제품 정보에 접근해 정보를 비교, 공유할 의지와 여력을 갖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사업자의 자율준수 지침 및 소비자톡톡 운용현황, 블로그에 대한 법집행 현황을 소개하고, 각국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만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정부에 의한 직접규제 등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28 OECD (2016),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OECD Recommendation, <https://www.oecd.org/sti/consumer/ECommerce-Recommendation-2016.pdf>

초안의 주요내용은 서술방식(관련 OECD 제도 및 정책원리, 주요 정책이슈 및 관련 소비자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스 제공)/가이드스 언어(규범적 표현 자제 제의로 “의무적” 표현 지양)/범위(기술적으로 중립적 위치 및 온라인 지불과 모바일 지불 중첩 혼동 개선)/구조(온라인 및 모바일 지불 포함 여부)/어린이(2008년 모바일 거래 가이드스 존재) 등에 관한 것이었다. 제85차 정례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권한 강화’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미국의 프라이버시(정보 수집 및 사용 옵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투명성), 보안 관리와 소비자 인식 관련 제안에 대해 각국의 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되었다. 그 결과 이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별하여 제공하고, 승인과정에서 예러 수정·거래 취소·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이슈를 삭제하며, 인 앱 결제에 대한 아동관련 이슈 논의 및 결제 안전망을 마련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있어서 모바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가이드스에 포함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²⁹ 동 지침이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된 제86차 정례회의에서는, 거래약관, 조건 및 비용에 관한 정보, 프라이버시, 보안, 아동, 사기 및 피해구제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합의된 주요 변화를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해당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제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결과, 표시가격과 의무비용 및 옵션비용 정보에 대한 사항이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결제 약관 및 조건의 복잡성에 대한 논의 결과, 소비자들이 결제 약관 및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제공 방안이 반영되었다. 프라이버시(Privacy)와 관련하여 결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의 추가 및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다. 보안(Security)과 관련하여 결제 보안에 대한 위반 시 피해구제 메커니즘의 제공을 반영하였다. 아동(Children)과 관련하여 각 주체의 역할 및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반영되었다. 사기, 기만, 오도 또는 불공정한 상행위와 관련하여

29 송민수,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한국소비자원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2014, 1-2면.

여 계약갱신에 대한 절차 및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수정되었다.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저비용의 보상청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추가하였다.

2. 주요 내용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개 분야 ① 거래 약관, 조건 및 비용에 관한 정보 ② 프라이버시, ③ 보안, ④ 승인 과정, ⑤ 아동, ⑥ 결제수단 및 제공자의 소비자보호 수준 차이, ⑦ 사기, 기만, 오도 또는 불공정한 상행위, ⑧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등에서 심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결제 메커니즘의 호환성 관련 쟁점들은 OECD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 약관, 조건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동 지침은 거래 약관, 조건 및 비용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결제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성, 결제 약관 및 조건의 복잡성, 청구서 내역의 명료성 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서 결제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약관, 조건 및 비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결제 및 거래의 주요 정보는 거래 초기 단계에서 분명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동 정보는 “계속적 이용(on the go)”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작은 화면이 있는 모바일 기기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기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법률상 의무비용이 광고된 가격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비용은 거래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결제 정보 혹은 결제 승인이 요구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되어야 한다. 다른 비용들은 관련 사업자에 의해 확정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되어야 한다. 셋째, “계속적 이용(on the go)” 상황에서 결제처리를 위한 세부사

항에 대한 정보 접근 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의 최적화·결제 정보 제시 방법의 간소화·단순화·표준화(적절한 경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보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접근가능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픽과 아이콘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방식들은 그 자체로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소비자들은 결제 및 거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한 옵션에는 정보의 인쇄, 메일링, 컴퓨터 저장이 있다. 이러한 옵션들은 가능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의 유형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결제 약관 및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제 약관 및 조건의 복잡성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결제 약관 및 조건의 전문뿐만 아니라 주요 요약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요약내용에는 총 거래비용, 제품 유용성, 배송 소요시간, 환불 및 교환정책, 청약철회권, 반복하여 발생하는 비용(자동 재구매 및 자동 갱신, 이를 취소하는 방법), 분쟁해결 방안(사업자 관련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결제 약관 및 조건의 요약 내용은 분명하고, 눈에 잘 띄며, 간결해야 하고,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구서 내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청구자(billing entities)는 분명히 청구서 내역상 그들이 청구하는 비용과 제3자가 청구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청구서 내역은 소비자들이 구매 제품 및 서비스 유형, 결제 제공자결제대행기관(payment provider) 혹은 판매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둘째, 청구서 내역은 a) 가격과 기타 주요 거래 정보를 확인해주고, b) 소비자들로 하여금 청구자(제3자에 의한 청구 포함)를 포함한 결제 관련 모든 당사자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c) 당사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서 결제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결제정보가 소비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자들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고안 및 개발 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장치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나 업데이트된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들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a) 결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b) 결제 제공자에 의해 요구되거나, c) 법률상 필요하거나, 혹은 d) 계좌 및 리스크 관리, 인증, 사기 예방, 법률 준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수집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인증 대리인(authenticating data)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름, 우편번호, 전화번호, 결제카드 번호, 은행 계좌번호, 은행 혹은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식별코드가 포함될 수 있다. 셋째, 결제과정에서 사업자가 위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에 법률상 필요하거나 결제를 마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분명하게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그러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제한 혹은 거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택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개인적인 위치 정보, 건강 정보, 재정 정보나 자녀 관련 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넷째, 사업자들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환경에서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서 투명해야 하며, a)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저장되는 이유와 b) 그러한 정보가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방식과 c) 소비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유형의 기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라이버시 공개 및 선택 방안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시점에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 보안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환경에서 수집 및 활용되는 소비자 결제정보의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결제수단 제공자들은 보안시스템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결제 관련 소비자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주체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둘째, 결제수단 제공자들은 소비자의 정보가 위태롭게 되거나 금전적 손실을 겪게 될 때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은 결제보안관련 쟁점 및 소비자들이 거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4) 승인 과정

소비자는 거래가 성립되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 또는 거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거래 성립 과정이 분명하고 명료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거래 승인을 요청 받는 시점과 거래 승인 후 결제기한이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또한 결제정보를 확인하거나, 거래 완료 전 거래 전체를 취소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둘째, 소비자들은 결제정보를 제공한 거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를 분명히 고지 받아야 한다.

(5) 아동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아동이 유발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를 부모나 보호자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 정부,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아동이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부모와 보호자에게 비용에 관한 정보와 아동의 결제로 발생한 비용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고 투명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부모나 보호자

가 그들의 승인 시에만 아동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이 결제하도록 승인한 제품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백한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이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도구나 부모나 보호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청구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부모나 보호자에게 그러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결제수단 및 제공자의 소비자보호 수준 차이

우선, 소비자들이 결제 처리과정에서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충분히 알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 결제 제공자, 사업자, 시민단체,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소비자들이 a) 구매 시 그들의 권리 및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과 b) 책임 제한, 반품, 교환, 가격할인, 환불정책 및 환불절차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결제 시스템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경 간 거래 관련 결제 제공자들은 약관 및 조건에 결제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권리 및 보호사항이 국경 간 거래 특성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셋째, 결제 제공자, 사업자, 시민단체,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함께 결제 시스템 및 관련 보호 쟁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교육해야 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거래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결제 제공자는 결제보호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결제 제공자는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과 상관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 보호수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보호에는 모든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사기성 또는 불법 청구 요금에 대한 책임규정과 기업자율규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결제 제공자는 a) 재판관할 사이에 결제 보호 정책이 일치될 경우 유

익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해야 하고, b) 결제 보호 수준이 다를 경우 국가 간 거래 관련 쟁점들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7) 사기·기만성, 오도하는, 불공정한 상거래

일관성 없는 결제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부실표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혹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정보 및 기타 결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격 및 기타 결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정보는 결제과정 동안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그릇된 혹은 오도성 있는 결제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나중에 그러한 정보를 수정하는 관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갱신 가능한 계약, 갱신 가능한 구독 및 재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자동 재구매, 계약 및 구매 갱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거래 과정 초기에 다음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재구매 혹은 재구독이 포함되거나 다른 상품에 대한 재구매 혹은 재구독이 결부되어 있는 시점, 네거티브 옵션과 같이 소비자가 계약이나 구독 갱신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갱신되는 시점, 다시 발생하는 모든 요금의 액수 및 빈도도 공개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쉽게 사용가능한 절차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한 절차들은 거래의 확인(승인)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져야 한다. 옵션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언제 자동 반복구매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구독이 자동 갱신되는지 고지 받아야 한다. 고지는 소비자들이 구매나 갱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이루어져야 하며, 취소방법에 대한 정보도 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제 제공자들은 사업자들과 함께 소비자들이 재구매와 자동 구독 및 계약 갱신에 대해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무료사용기간 만료 혹은 앱과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기간(trial period) 동안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조건으로 제품이 제공될 때, 무

료사용기간에 대한 정보 및 동 기간 만료 후 부과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무료사용기간 이후로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품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면, 소비자는 그 사실에 대해 알아야 하고, 부과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제3자에 의한 예기치 못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특히 휴대폰 청구서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제3자가 제품 및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용하는 개인 계좌와 같은 서브어카운트(sub-account)에 청구되는 요금을 차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명백한 승인 없이 제3자에 의해 요금부과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요금부과 제한 혹은 차단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그들의 계좌에 부과된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상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인앱결제와 관련한 예기치 못한 비용 청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자 모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목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소비자들이 그러한 앱을 사용할지 혹은 앱 사용을 제한하고 가능한 다른 구매방법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앱 사용에 수반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으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인앱결제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비자 신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결제 제공자, 사업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결제 사기 예방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관행 및 규제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사기·기만·오도성 상행위를 탐지하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개발해야 한다. 불법 사용이 의심될 경우 원격으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불법 사용될 경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휴대폰 및 앱이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인증시스템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기·기만·오도성 상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 및 모바일·온라인 앱 제공자들과의 거래방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사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8)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먼저 소비자들이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충분히 접근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정부, 결제 제공자, 플랫폼 운영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결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들과 문제 발생 시 준수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을 취해야 할 당사자 및 연락 방법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와 결제 제공자를 통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규제 기구, 법 집행 기관, ombudsman, 혹은 자율 규제 기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결제 중개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고 낮은 비용으로 쉽게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환불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결제 중개업자들은 분쟁해결 촉진을 위해 제3자들로 하여금 개별 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승인했다는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의미있는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결제 제공자, 판매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사용하기 쉬운 저비용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그 중에서도 소액 결제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에는 효과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메커니즘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다른 형태의 피해구제청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

Ⅲ. OECD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1. 개요

2014년에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3년에 마련한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과 과제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OECD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관한 소비자정책 지침”을 제정하였다.³⁰ OECD는 동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및 관련 정책 지침을 참고하였다.³¹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9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의 전체적인 검토의 일부과정으로서, 소비자들이 전자적 형태로(무형으로) 저장, 접근 및 수신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 및 이용의 경향, 소비자정책 과제를 검토하는 분석을 시작하였다. 각국 대표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2011년 4월과 2012년 4월에 각각, 원탁토의 및 워크숍에서

30 송민수, OECD 무형의 디지털콘텐츠 제품에 관한 소비자정책 지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2015, 1면.

31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Towards a Culture of Security (OECD, 2002),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cross Borders (OECD, 2003),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OECD, 2007a),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lectronic Authentication (OECD, 2007b), Policy Guidance for Addressing Emerging Consumer Protection and Empowerment Issues in Mobile Commerce (OECD, 2008), Consumer Education: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OECD'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OECD, 2009), Communiqué on Principles for Internet-Policy Making (OECD, 2011b) and OEC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Making (OECD, 2011c),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OECD, 2012b),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2013b),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2014).

그러한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논의 및 독립적인 연구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제작하였다(OECD 2013a).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시장에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변화를 지적하였다. 첫째, 인터넷 이용 증대 및 고속인터넷 용량 확장으로, 소비자층이 확대되고 제품에 대한 접근이 향상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 강화로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제품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되게 되었다. 셋째, 전자상거래 결제 방법이 한층 편리하고 용이해져 소비자의 제품 취득이 간소화되었다. 넷째,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증대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접속 및 이용하는 방법이 크게 변화되었다. 다섯째,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발되어 소비자가 더욱더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정리, 저장하고 제품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시장의 확대는 콘텐츠 취득 및 이용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개발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소매 웹사이트, 제3의 판매자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넷 프로토콜(IP) TV 및 증가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사항과 관련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가 무형의 제품을 취득 및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문제로는 부적절한 정보 공개, 오도·불공정 상업 행위, 소비자 개인 데이터의 수집·이용 및 공유에 대한 우려, 부적절한 분쟁 해결 및 배상 방법, 소비자의 ‘애플리케이션’ 및 온라인 게임 이용과 관련된 미승인 비용 청구 등이다.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정책 지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제공한다. 동 원칙을 마련함에 있어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형 제품의 혁신, 성장, 전파를 지원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제품 시장과 ICT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동 지침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4

월 제81차 정례회의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보호 워크숍을 개최하며 소비자 보호 이슈 및 향후 전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 10월 제82차 정례회의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소비자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있었다. 2012년 4월 제83차 정례회의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보호를 위한 디지털 제품 고유의 특성, 주요 소비자이슈,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역량 강화 및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은 디지털 콘텐츠 거래 소비자정보의 적정성, 정보제공 효율성 제고 방안, 불공정 약관 규제, 제품 호환성,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이다. 2012년 10월 제84차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콘텐츠 제품 시장 동향(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 반응, 사업자의 상품 및 유통 혁신, 사업자 경쟁심화, 기술발전 및 지급결제 메커니즘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소비자 이슈(소비자불만 접수현황, 불만 경향 및 소비자피해 현황 분석, 계약명료성, 지적재산권법, 사업자의 기만적 상행위, 개인정보보호, 소비자역량 및 분쟁조정 동향 분석)이다. 동 지침은 이후 2013년 제85·86차 정례회의와 2014년 제87차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된 후 2014년 9월에 채택되어 11월에 공개되었다.

2. 주요 내용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개 분야 ①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건 ② 프라이버시와 보안, ③ 사기, 오인을 발생시키는 불공정한 상행위, ④ 아동, ⑤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⑥ 디지털 역량 등에서 소비자정책 이슈에 관한 심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동 지침의 범위는 인터넷 플랫폼과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취득한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이다. 전자적 형태(CD와 같은 유형의 형태는 제외됨)로 인도받고, 상품주문 확정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한정하며 금전지급이 포함되는지를 불문한다.

(1)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건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디지털콘텐츠 제품이 유형의 형태의 제품과 비교하여 제약 조건이 첨부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동 제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때는 소비자는 이 제약조건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 2)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여러 조건에 대해서 명료하고 알게 쉽게 전달해야 한다.

- 다른 종류의 기기라도 정보는 쉽게 판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특히 이해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의 “계속적 이용(on the go)” 상태에서도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법을 추구해야 함
- 정보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경우 및 특정한 경우의 조건을 포함해야 함
-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한과 해당 제품을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에 대한 제한
-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기기의 종류와 수량에 의해 발생하는 제약
- 소비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취득한 후에 사업자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접속 이용 방법
-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취득하는 것에 따른 모든 제약
- 이용되는 기술적 수단 (제품이나 기기의 이용에 주는 모든 영향을 포함)
- 분쟁 해결의 선택 사항
- 철회할 권리(“cooling-off” 기간) 와 적용에 따른 환불 · 반품 · 제품교환 또는 수리의 선택 사항

3)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관한 광고가 이 제품의 이용 접속 조건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과 이용 상황에 관한 중요한 조건의 개요를 소비자가 동 제품을 취득하기 전에 명료하고 쉽게, 간과하는 것이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함
- 이해관계자는 소비자를 검색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기(원문이 없어 뜻을 파악하지 못 하였습니다. 뜻이 통하도록 다시 번역 요망)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함

(2) 프라이버시와 보안

1999년 전자상거래지침(파트 2/ 섹션Ⅶ)은 전자상거래가 OECD 프라이버시 지침(1980년 책정, 2013년 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다.³² 또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택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개인 데이터의 수집 이용에 관한 정보 및 소비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 전, 디지털 콘텐츠 제품 취득 시 및 이용 중 사업자에 의해서 취득·이용되는 개인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통지하여야 함
- 소비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과 결탁한 프라이버시 설정 또는 허가를 관리하는 방법을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추가적으로 사업자에게 부여한 허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2 동 지침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 이용에 대해 국내 적용되는 8개 원칙을 규정하였다.

- 2) 데이터의 제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거래의 완결 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이용 혹은 동 제품의 갱신에 필요는 없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데이터의 수집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방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의료 정보 또는 금전에 관한 정보와 같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기 전에 명시적인 승낙을 얻어야 한다.
- 4) 사업자는 개인 데이터의 과도한 수집에 따른 사업자 및 소비자 쌍방의 위험 특히 데이터의 도난, 분실,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위험(Risk)을 배려해야 한다.
- 5)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개인 데이터는 삭제해야 한다.
- 6)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디자인 개발할 때 상기 프라이버시의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관리 조치를 정비해야 한다.

- 이 조치는 금전 지불을 포함한 제품에도,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 사업자가 이 조치의 개발 디자인에 관련하여 기타 이해 관계자와 제휴하는 것이 기대됨

(3) 사기, 오인을 발생시키는 불공정한 상행위

사기·오인을 발생시키는 불공정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디지털 콘텐츠 제품이 광고에서 설명한 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구제는 수선·교환 또는 배상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제품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기술의 진보를 고려하여 제품 취득 후 적절한 기간(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동안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사업자는 적법하게 소비자가 취득한 제품의 접근 또는 이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경 사항 또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함
- 소비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제품의 접근 용이성에 중요한 변경을 하는 경우 통지해야 하고, 이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 조치가 주어져야 할 것임

또한, 시범이용기간이 끝나고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이용했을 때 새로운 요금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예측하지 않은 요금 부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이용 또는 취득 시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 그 취지를 통지하고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디지털 콘텐츠 제품이 한정 기간(시범이용기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거래 초기에 시용 기간 및 수습 기간 종료 시 비용 부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을 중지하기 위해서 취할 조치(즉 기간 또는 적용된 수습 기간 후에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고 쉽게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소비자가 지불하거나 추가적인 재정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시범이용기간을 넘어 상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이용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다음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

- 디지털 콘텐츠 제품 (특히 예를 들면 앱상에서 과금에 의해 취득하는 추가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고 쉽게 소비자가 간과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함
-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이용에 관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함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계약 및 구독 갱신뿐만 아니라 자동 반복 구매에 관해서 충분히 통보받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 및 관련 제품의 새로운 출시가 반복 구매 또는 구독이 갱신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가 거래를 취소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초기에 명확하고 쉽게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해당 통지에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과금의 액수 및 그 빈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계약의 자동 갱신 방지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을 종료하기 위한 간편한 절차를 소비자를 위해 준비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 대해서 거래 성립 시에 전달하여야 한다.
- 3) 선택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자동 반복 구매가 실시되거나 구독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명확하고 알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통지는 소비자가 구입이나 갱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어떻게 취소할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관련한 우려 및 자녀가 부모, 보호자 또는 계좌 명의인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취득하고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의 사용에 의한 요금 발생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자, 정부, 기타 이해 관계자는 이하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 1)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관한 상업광고 그 자체가 상업용 광고인 것을 알도록 하고 동 제품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층을 감안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2) 상업광고 및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아동이 동 제품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금에 관하여 사기 또는 오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 아동이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이용 중에 동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인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모,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적용 법규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업용 광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모, 보호자의 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 4)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이용 중에 동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광고에 아동이 주의할 수 있도록 동 제품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층을 고려한 교육 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5)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디지털 콘텐츠 제품 접근 이용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가 구제 조치를 요구할 상대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1) 거래에 관련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접근 및 이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를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제품에 접근(Access)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자체 또는 해당 제품이 이용되고 있는 기기 중 하나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지를 소비자가 규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 2) 동 지침에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회해야 할 당사자 및 연락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3)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관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소비자 및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가 없는 경우, 제품을 적법하게 취득한 플랫폼 또는 콘텐츠 제공자가 부담할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해당 문제로 영향을 받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 제품 접근 이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손상되었거나 광고내용 대로의 품질에 충족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취득한 소비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
- 2) 정부 사업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소비자가 국내외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취득하였으나 동 제품이 기대한 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결함이 있을 경우, 구제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구제 방법에는 하자있는 콘텐츠의 수리 또는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의 해제 및 전액 또는 부분적인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다.
- 3) 정부 사업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금전의 지불 없이 적법하게 취득된 디지털콘텐츠 제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구제 조치의 종류를 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 및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 4) 이와 같은 구제 수단은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명료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6) 디지털 역량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과 이용에 관한 소비자의 디지털역량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정부 사업자 기타 이해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취득과 이용에 관계있는 지식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계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

-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다른 연령층별 요구사항(Needs)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해야 함
- 해당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환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2) 교육과 계발 프로그램은 소비자 자신의 법적 권리 의무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 관련 제품의 이용에 관련된 여러 조건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IV.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1. 개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는 1999년에 전자상거래 분야의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을 제정한 바 있다.³³

이후 ICT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1999년에 제정된 지침에서 규율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2008년 OECD 디지털각료회의에서 발표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과 함께 제정 지침의 검토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4월 제87회 OECD CCP 정례회의에서부터 2015년 10월 제89회 정례회의까지 실무작업반의 운영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고, OECD 이사회의 의결 절

³³ 이금노, OECD 전자상거래 지침 개정과 그 의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2016, 1면.

차를 거친 후 2016년 3월에 공표되었다.

2. 주요 내용

(1) 제목 및 구성 변경

2016년 권고안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o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관한 OECD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로 제목이 일부 수정되었다. 특히, 제목에 ‘지침’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권고문의 형태로 작성하는 등, 그 형식과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

또한, 전문을 앞에 두고, 본문은 적용범위에 대한 동의(I), 회원국 등에 대한 권고(II),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고(III), 회원국 및 사무국 초청(IV), 비회원국 초청(V), CCP에 대한 지침(VI)으로 구성하고 있다.

2016년 권고안은 정보제공의 일반원칙, 분쟁해결을 위한 기업의 자체 대응, 프라이버시에서의 보안영역, 교육 및 인식에 있어서의 디지털역량 재고 등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다.

(2) 개정 내용

1) 모바일 거래

정보제공 등에 기술적 제한이 있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제27조), 소비자가 어떤 형태의 기기나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안전하고 적절한 거래기록이 제공될 것을(제39조) 규정하였다.

2) 디지털 재화

거래량이 급속이(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재화의 경우 다른 재화와 달리 기술 또는 법적문제로 재화의 구매 및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침의 적용 범위에 디지털 재화를 포함하고(전문 I), 광고 및 마케팅 내용이 실제 재화와 용역의 특성이나 접근 및 사용조건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제15조),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에 상호 호환성이나 사용상 제한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완하였으며(제32조), ‘확인과정’의 확인 범위가 ‘구매’에 제한되지 않도록 해당 문구를 ‘거래’로 확대하여 구체화하였다(36~39조).

3)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의 핵심적 내용인 소비자 정보가 무료 서비스 형태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권고안의 적용범위를 금전적 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거래까지 확대하고(전문 I), ‘온라인정보제공’ 조항에 개인정보 정책도 포함하며(제35조), 비금전적 거래로 획득된 재화와 관련된 분쟁해결 및 피해배상을 규정하였다(제46조).

4) 대금 지급

모바일 결제의 경우, 대금지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수동적인 소비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제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하고(제41조),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의무로 명시하여, 이 경우 소비자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제51조).

5) 정보 보안

신원도용 및 사기 등, 전자상거래에서 보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내용을 ‘대금지급’ 조항에 반영하였다(제40조).

6) 참여형 능동적 소비자

신중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간 거래가 증가하고, 후기나 추천 광고 등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범위’ 조항에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간(CtoC)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와 같은 사업유형도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전문 I), 추천 광고 등의 신뢰성이나 사업자 지원여부의 투명성 등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제17조).

7) 제품 안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과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을 반영하였다(제23조).

8) 정보/행동경제학 접근

행동경제학적 접근은 소비자가 접하는 복잡하고 쌍방향적인 환경 속에서 정보제공과 관련 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침역할을 할 수 있다. 서문에 ‘정보 및 행동경제학 관점의 실증과 통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정책의 중요성’ 및 ‘취약소비자 등 특별한 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보경제학 및 행동경제학을 참고할 것’을 언급하였다(제2조). 또한 ‘기만적 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였고(제16조), ‘이행 원칙’에 증거 기반의 소비자정책 개발을 명시(제52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9) 웹접근성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웹접근성에 장애를 가진 소비자를 사업자가 배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제24조).

10) 국제협력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고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국사업자에게 해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제54조).

11) 정책역량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권고안의 반영 및 집행 등의 정책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를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해나갈 수 있는 관계당국 및 기관의 이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53조).

V. 시사점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 소비자이슈에 관해 최근 몇 년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계속해왔다. 2014년에 확정되어 공개된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정책 지침의 내용과 2016년 개정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를 정부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국내의 소비자정책과 법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 이슈에 대한 각국 정책 및 OECD 정책제안 등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소비자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OECD의 소비자정책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정책의 주된 대상이 전자상거래 또는 모바일 거래 등으로 확산되는 각국의 동향을 확인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국에서는 국경을 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국의 소비자보호 법령 또는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 권고 등의 제정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크게 일반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외에서의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소비자정책 지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등은 국내 소비자법제의 현황분석을 거쳐 그 수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및 소비자보호지침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현재는 온라인과 모바일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의 확산과 같이 인터넷경제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증폭되는 상황에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간주될 만큼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정책은 규제 일변도여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과거 인터넷경제의 발전에 소비와 이용의 주체인 소비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소비자의 권익과 선택을 중시하는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시각으로 소비자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OECD 정책제안은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도 OECD에서 논의되는 소비자 이슈와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3장 EU 소비자법 적합성평가 동향

1. 개요

EU는 과도한 규제부담, 중복, 격차 등을 분석할 목적으로 소비자법(Consumer Law) 전반에 대해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³⁴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³⁵ 소비자법의 적합성 평가란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연관성, 기존 EU 규제와의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는 관련 정책으로 인한 충격, 상당한 시일의 경과로 인해 필요가 없어진 정책수단, 과도한 규제 부담 및 중복 등을 규명하는 한편, 현 EU 법령과 법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³⁶

EU의 소비자법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통계법에 근거한 ‘통계기반정책평가(통계법 제12조의2)’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지침’³⁷을 들 수 있다.

34 위원회의 ‘Smart Regulation에 관한 2010 communication’은 모든 정책부문의 규제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평가로서 적합성 체크(Fitness Check)를 소개하고 있음

35 European Commission, Evaluation and Fitness Check(FC) Roadmap, 2015.12

36 김재영·허민영, EU 소비자법의 목적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동향과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2016, 1면.

37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항에서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U 소비자법의 목적 적합성 평가 정책

(1) 평가 개요

EU는 ‘2015 위원회 업무 계획’에 소비자권리 및 광고에 대한 EU 주요 지침으로 불공정 상관행 지침³⁸, 소비자 보증 지침³⁹, 불공정 계약조항 지침⁴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포함하였다. EU 지침은 모두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및 EU 시장통합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조화 및 종합적 검토를 위해 각 지침들의 목적에 맞춰 그 적합성이 모두 평가되어야 것이다.

(2) 평가 범위

EU 지침의 적합성 평가는 각 지침의 정책적 목적 적합성을 기반으로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될 것이다. B2C 거래에 있어서 각 단계별(계약에 관련된 마케팅 및 판촉행위→계약체결→계약 이행) 해당 지침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EU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지는 영역도 평가의 범위에 포함된다.⁴¹

따라서 EU 지침의 적합성 평가는 각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들의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연관성을 분석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각 지침간의 조화로운 연계를 전제로 분석할 것이다. 현재의 지침들이 새로운 시장 트렌드, 소비자들의 행동패턴과 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조사하는 것이다.

38 Directive 2005/29/EC

39 Directive 1999/44/EC

40 Directive 93/13/EEC

41 일례로, 최근 「EU의 온라인 및 기타 다양한 과정을 통한 제품 판매에 관한 지침」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디지털 단일화 시장(Digital Single Market : DGM)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역시 EU 소비자법 각 지침의 목적에 관한 적합성 평가범주에 속한다.

특히 이러한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보호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 규제 틀의 단순화를 통해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부담, 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3) 적합성 평가 항목

- (효과성)** 해당 지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 및 정책의 기대부합성에 대한 평가
 - 해당 지침의 사업자 규제수준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평가 등
 - 해당 지침에 따른 정책수행이 중요한 변화(긍정/부정 측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효율성)** EU 회원국이 직접적인 법적 수단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편익 평가
 - 정책수행과정에서 비용대비 효과적인 모범사례의 발굴, 특정 규정이 비용대비 효과적 수행을 방해하는지 또는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지 등을 평가
 - 특정 정책이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동시에 평가
- (일관성)** 해당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법적 수단 및 정책들이 소비자보호정책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 전체 EU 규제 체계에서 해당 지침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과도하게 위배되거나 일정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평가
- (연관성)** 법적 또는 정책수단의 목적이 현재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 소비자의 행동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평가
- (EU 부가가치)** 기타 EU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특히 소비자법, 상법, 민법 등과의 실제적·절차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늠

(4) 평가 방법

적합성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각 지침에 관한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는 것 외에 다양한 적합성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분석) EU 회원국의 법·규정에 관한 법적 분석, 사례분석, 논문 및 자료설문 등을 수행

(소비자경험) 소비자설문, 행동학적 실험,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경험 측면에서 적합성 평가

(기타) EU 회원국 감독기관 및 소비자, 사업자 협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회, 워크숍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수행

(5) 평가 결과의 의견수렴

적합성 평가결과는 투명성 확보와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절차(consultation)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의견 청취 및 평가에 대한 일반인 참여기회 제공 차원의 12주간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대표기관(회원국 감독기관, 사업자·소비자·산업 협회 등)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터뷰 및 사례연구 등의 의견수렴, 각 회원국내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수렴, 각 회원국내 사업자(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사례연구를 통한 의견수렴, 회원국 전문가 포럼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이 있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필수 데이터, 보완자료 등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제1 평가연구-주요연구) 불공정 상관행 지침, 불공정 계약조항 지침, 가격표시 지침, 허위과장 및 비교 광고에 관한 지침 그리고 금지명령 지침의 평가에 관한 외부전문가 연구로 EU 소비자보호규정 및 관련 영역별 규정들과의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각 정책수단들을 평가
- (제2 평가연구) 판매 및 보증에 관한 지침의 특정 측면에서의 접근·평가로 일반 판매경로에서 적용되는 판매 및 보증에 관한 지침이 온라인 및 기타 판매경로(해외 등)를 통해 판매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제3 평가연구) 설문 등의 수집 데이터로 사전에 수행된 연구(제1,2연구)의 보완

3. 시사점

EU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법의 목적 적합성 평가는 지침 간의 조화와 평가를 고려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 소비자법령 및 제도 등이 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외에서도 소비자관련 법령 및 제도와 정책에 관한 평가를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이므로 이러한 추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도입에 규제영향 평가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평가체계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통계청의 통계기반정책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와 같은 과학적 평가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에 따른 성과도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의(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EU의 적합성평가를 비롯하여 정책평가에 관한 시스템의 검토와 향후 평가결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천(2013), 유엔소비자보호지침(UNGCP)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 김재영 · 허민영(2016), EU 소비자법의 목적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동향과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 송민수(2015), OECD 무형의 디지털콘텐츠 제품에 관한 소비자정책 지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 송민수(2014),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지침 제정,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 이금노(2016), OECD 전자상거래 지침 개정과 그 의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 CI(2012), Consum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 Access, Fairness and Representation, Consumer International, <<http://A2Knetwork.org/infosoc2012-book>>
- CI(2013a), Recommenda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UN Guidelines on Consumer Protection,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media/1107155/wcrd%20recommendations%20for%20the%20revision%20of%20the%20un%20guidelines%20on%20consumer%20protection_ymarch2013.pdf>
- CI(2013b), Consumers International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UN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http://unctad.org/meetings/en/Contribution/IGE2013_UNGCP_CI_en.pdf>

CI(2013c), Updating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for the Digital Age<<http://a2knetwork.org/sites/default/files/updating-ungcp.pdf>>

EU(2015), Evaluation and Fitness Check(FC) Roadmap, 2015. Q4.

OECD(2016),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OECD Recommendation, <https://www.oecd.org/sti/consumer/ECommerce-Recommendation-2016.pdf>

OECD(2014), Consumer Policy Guidance on Intangible Digital Content Produc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36, 2014.

OECD(2014), 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 OECD Publishing. doi: 10.1787/5jz432cl1ns7-en.

OECD(2013a), Protecting and Empowering Consumers in the Purchase of Digital Content Produc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19, OECD Publishing, doi: 10.1787/5k49czlc7wd3-en.

OECD(2013b),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www.oecd.org/sti/ieconomy/2013-oecd-privacy-guidelines.pdf.

OECD(2012a), OECD Workshop on Consumer Protection and Empowerment in the Purchase of Digital Content, <http://oecd.org/sti/consumer->

policy/oecdworkshoponconsumerprotectionandempowermentinthe
purchaseofdigitalcontent.htm.

OECD(2012b),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OECD, Paris, February 2012, [http://acts.oecd.org/
Instruments/ShowInstrumentView.aspx?InstrumentID=272&Instru
mentPID=277&Lang=en&Book=False](http://acts.oecd.org/Instruments/ShowInstrumentView.aspx?InstrumentID=272&InstrumentPID=277&Lang=en&Book=False).

OECD(2012c), E-Books: Developments and Policy Consideration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08, OECD Publishing, doi: 10.1787/
5k912zxcg5svh-en.

OECD(2011b), Communiqué 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Making,
OECD, 2011, www.oecd.org/internet/innovation/48289796.pdf.

OECD(2011c),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 Making, 13 December 2011, [www.oecd.org/internet/ieconomy/
49258588.pdf](http://www.oecd.org/internet/ieconomy/49258588.pdf).

OECD(2010), Consumer Policy Toolkit,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079663-en.OECD (2011a), OECD Roundtable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Purchase of Digital Content Products:
Summary of Discussion, [http://search.oecd.org/officialdocu-
ments/displaydocumentpdf/?cote=DSTI/CP\(2011\)14/FINAL&
docLanguage=En](http://search.oecd.org/officialdocuments/displaydocumentpdf/?cote=DSTI/CP(2011)14/FINAL&docLanguage=En).

OECD(2009), Consumer Education,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OECD, Paris, October,
www.oecd.org/dataoecd/32/61/44110333.pdf.

OECD(2008), Policy Guidance for Addressing Emerging Consumer Protection and Empowerment issues in Mobile Commerc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149, OECD Publishing, doi: 10.1787/230363687074.

OECD(2007a), OECD Recommendation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OECD, Paris, 2007, www.oecd.org/dataoecd/43/50/38960101.pdf.

OECD(2007b), OECD Recommendation 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OECD Guidance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OECD, Paris, 2007, www.oecd.org/sti/ieconomy/38921342.pdf.

OECD(2003), OECD Guidelin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cross Borders, OECD, Paris, www.oecd.org/sti/crossborderfraud.

OECD(2002), 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OECD, Paris, 2002, www.oecd.org/sti/ieconomy/15582260.pdf.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9),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OECD, Paris, 1999, www.oecd.org/dataoecd/18/13/34023235.pdf.

UNCTAD(2013a), Implementation Report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1985 - 2013), <http://unctad.org/meetings/en/SessionalDocuments/ciclpd23_en.pdf>

UNCTAD(2013b), Second Ad Hoc Expert Meeting on Consumer Protection,

<http://unctad.org/meetings/en/SessionalDocuments/IGE2013_PROG_ADHOC_en.pdf>

EC Better Regulation :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roadmaps/index_en.htm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United Nations

A/RES/70/186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4 February 2016Seventieth session
Agenda item 18 (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December 2015

[on the report of the Second Committee (A/70/470/Add.1)]

70/186. Consumer protection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81/62 of 23 July 1981, in which the Council requested the Secretary-General to continue consultations on consumer protection with a view to elaborating a set of general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Recalling also its resolution 38/147 of 19 December 1983 on consumer protection,

Noting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s 1984/63 of 26 July 1984 and 1999/7 of 26 July 1999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9/248 of 9 April 1985,

Recalling its resolution 65/142 of 20 December 2010 on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Taking note of the mandate entrusted to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at its thirteenth session, held in Doha from 21 to 26 April 2012, to conduct analysis and research and help all Member Stat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to formulate and implement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promote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and carry out peer review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¹

Recalling the objectives formulated in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² notably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reaffirmation they received in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³ the outcome document of the high-level plenary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¹ See TD/500/Add.1.² Resolution 55/2.³ Resolution 60/1.

15-16940 (E)



Please recycle



Goals in 2010,⁴ in particular in the pursuit of development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⁵

Noting that 2015 marks the thirtie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as a thematic issue, and acknowledging the enduring need for Member States to further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the General Assembly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on markets and of technology on consumers,

Acknowledging that, although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achieved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t the normative level since the adoption of the guidelines in 1985, such progress has not been consistently translated into more effective and better-coordinated protection efforts in all countries and across all areas of commerce,

Reaffirming the guidelines as a valuable set of principles for setting ou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enforcement institutions and redress systems and for assisting interested Member States in formulating and enforcing domestic and regional laws, rules and regulations that are suitable to their own economic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as well as promoting international enforcement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and encouraging the sharing of experiences in consumer protection,

Recognizing that, despite the diversity of mechanisms and legal cultures that exist across Member States, consensus exists on the need for common principles that establis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enforcement institutions and redress systems,

Believing that a robus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mechanisms and the ability of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uthorities to cooperate in obtaining redress, where available, across borders for consumers harmed by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serves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contributing to economic dynamism and consumer welfare,

Recognizing that Member States have a common interest in promoting and protecting consumer privacy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worldwide,

Considering that electronic commerce, which should be understood to include mobile commerce, has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to consumers worldwide and that the opportunities it offers should be harnessed to help facilitat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based on emerging network technologies, with computers, mobile phones and connected devices that promote consumer welfare,

Considering also that Member States, businesses, consum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devote special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certain consumer protection issues, such as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may be addressed most effectively through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Recognizing that consumer confidence and trust in a well-functioning market for financial services promotes financial stability, growth, efficiency and innovation over the long term and that the recent financial crisis places a renewed focus on

⁴ Resolution 65/1.

⁵ See resolution 70/1.

consumer protection, calling for effective regulatory, supervisory and enforcement frameworks in the financial sector to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consumers,

Recognizing also the importance of combating substandard, falsely labelled and counterfeit products which pose threats to the health and safety of consumers and to the environment and which also decrease consumer confidence in the marketplace,

Recognizing further the value of coordination and partnership with established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at focus on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to consumers and avoid duplicating efforts,

Recalling the proposal of the Seve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Review All Aspects of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⁶

1. *Decides* to adopt the revised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of which they form an integral part;
2.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disseminate the guidelines to Member Stat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3. *Requests* all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hat elaborate guidelines and related documents on specific areas relevant to consumer protection to distribute them to the appropriate bodies of individual States;
4.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implement the present resolution and the guidelines contained in its annex;
5. *Requests*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o exchange information on progress and experienc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solution, review that information and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n this subject on the occasion of the Eighth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Review All Aspects of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6. *Requests*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o promote the guidelines and to encourage interested Member States to create awareness of the many ways in which Member States,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can promote consumer protection in the provision of public and private goods and services;
7. *Decides*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onsumer protection law and policy within the framework of an existing commission of the Trade and Development Board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hich will operate until the holding of the Ninth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Review All Aspects of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t which its work will be reviewed and the renewal of its mandate considered;
8. *Also decides* that the necessary resources should be made available withi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o carry out the tasks embodied in the revised guidelines through the reallocation of existing resources and/or the use of extrabudgetary resources from voluntary contributions;

⁶ See TD/RBP/CONF.8/11.

9.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ontinue to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by Member States,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81st plenary meeting
22 December 2015*

Annex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 Objectives

1.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and needs of consumers in all Member States, particularly in developing ones, recognizing that consumers often face imbalances in economic terms, educational levels and bargaining power and bearing in mind that consumers should have the right of access to non-hazardous products, as well as the right to promote just, equitable and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se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have the following objectives:

(a) To assist countries in achieving or maintaining adequate protection for their population as consumers;

(b) To facilit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atterns responsive to the needs and desires of consumers;

(c) To encourage high levels of ethical conduct for those engag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d) To assist countries in curbing abusive business practices by all enterpris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hich adversely affect consumers;

(e)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consumer groups;

(f) To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g)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arket conditions which provide consumers with greater choice at lower prices;

(h)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II. Scope of application

2. These guidelines apply to business-to-consumer transactions, including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by State-owned enterprises to consumers. For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include the laws, regulations, rules, frameworks, procedures, decisions, mechanisms and programmes of Member States, as well as private sector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that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promote consumer welfare.

3. For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the term “consumer” generally refers to a natural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acting primarily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while recognizing that Member States may adopt differing definitions to address specific domestic needs.

III. General principles

4.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strengthen or maintain a strong consumer protection policy,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set out below and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 so doing, each Member State must set its own prioritie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and the needs of its population, and bearing in mind the costs and benefits of proposed measures.

5. The legitimate needs which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meet are the following:

- (a) Access by consumers to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 (b)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consumers;
- (c) The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hazards to their health and safety;
- (d)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consumers;
- (e) Access by consumers to adequate information to enable them to make informed choices according to individual wishes and needs;
- (f) Consumer education, including education on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umer choice;
- (g) Availability of effectiv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 (h) Freedom to form consumer and other relevant groups or organizations and the opportunity of such organizations to present their view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ffecting them;
- (i)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 (j) A level of protection for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that is not less than that afforded in other forms of commerce;
- (k) The protection of consumer privacy and the global free flow of information.

6. Unsustainable patter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rticularl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re the major cause of the continued deterior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All Member States should strive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developed countries should take the lead in achieving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developing countries should seek to achieve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in their development process, having due regard for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he special situation and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gard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7. Policies for promoting sustainable consump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goals of eradicating poverty, satisfying the basic human needs of all members of society and reducing inequality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8.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or maintain adequate infrastructure to develop, implement and monitor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measures for consumer protection are implemented for the benefit of all sectors of the population, particularly the rural population and people living in poverty.

9. All enterprises should obey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y do business. They should also conform to the appropriat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onsumer protection to whic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in question have agreed. (Hereinafter, references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guidelines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is paragraph.)

10. The potential positive role of universities and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s in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IV. Principles for good business practices

11. The principles that establish benchmarks for good business practices for conducting online and offline commercial activities with consumers are as follows: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Businesses should deal fairly and honestly with consumers at all stages of their relationship, so that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business culture. Businesses should avoid practices that harm consumer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consumers;

(b) **Commercial behaviour.** Businesses should not subject consumers to illegal, unethical, discriminatory or deceptive practices, such as abusive marketing tactics, abusive debt collection or other improper behaviour that may pose unnecessary risks or harm consumers. Businesses and their authorized agents should have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sponsibility for upholding consumer protection as an objective;

(c) **Disclosure and transparency.** Businesses should provide complete, accurate and not misl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goods and services, terms, conditions, applicable fees and final costs to enable consumers to take informed decisions. Businesses should ensure easy access to this information, especially to the key terms and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means of technology used;

(d)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Businesses should, as appropriate, develop programmes and mechanisms to assist consumers to develop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understand risks, including financial risks, to t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access competent and professional advice and assistance, preferably from an independent third party, when needed;

(e) **Protection of privacy.** Businesses should protect consumers' privacy through a combination of appropriate control, security, transparency and consent mechanisms relating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ir personal data;

(f) **Consumer complaints and disputes.** Businesses should make available complaints-handling mechanisms that provide consumers with expeditious, fair, transparent, inexpensive, accessible, speedy and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without unnecessary cost or burden. Businesses should consider subscribing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pertaining to internal complaints handl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codes.

V. Guidelines

12. The following guidelines should apply both to home-produced goods and services and to imports.

13. In applying any procedures or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due regard should be given to ensuring that they do not become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and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A. National policies for consumer protection

14.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that encourage:

- (a) Good business practices;
- (b) Clear and timely information to enable consumers to contact businesses easily, and to enable regulato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identify and locate them. This may include information such as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ts legal name and the name under which it trades, its principal geographic address, website and e-mail address or other means of contact, its telephone number and its government registration or licence numbers;
- (c) Clear and timely information regarding the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businesse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elevant transaction;
- (d) Clear, concise and easy to understand contract terms that are not unfair;
- (e) A transparent process for the confirmation, cancellation, return and refund of transactions;
- (f) Secure payment mechanisms;
- (g) Fair, affordable and speedy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 (h) Consumer privacy and data security;
- (i) Consumer and business education.

15. Member States should work towards ensuring that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have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promote effective compliance and to obtain or facilitate redress for consumers in appropriate cases.

B. Physical safety

16. Member States should adopt or encourage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al systems, safety regulations, nat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voluntary standards and the maintenance of safety records to ensure that products are safe for either intended or normally foreseeable use.

17. Appropriate policies should ensure that goods produced by manufacturers are safe for either intended or normally foreseeable use. Those responsible for bringing goods to the market, in particular suppliers, exporters, importers, retailers and the lik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tributors”), should ensure that while in their care these goods are not rendered unsafe through improper handling or storage and that while in their care they do not become hazardous through improper handling or storage. Consumers should be instructed in the proper use of goods and should be informed of the risks involved in intended or normally foreseeable use. Vital safety information should be conveyed to consumers by internationally understandable symbols wherever possible.

18. Appropriate policies should ensure that if manufacturers or distributors become aware of unforeseen hazards after products are placed on the market, they should notify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as appropriate, the public without delay. Member States should also consider ways of ensuring that consumers are properly informed of such hazards.

19. Member States should, where appropriate, adopt policies under which, if a product is found to be seriously defective and/or to constitute a substantial and

severe hazard even when properly used, manufacturers and/or distributors should recall it and replace or modify it, or substitute another product for it. If it is not possible to do thi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onsumer should be adequately compensated.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consumers

20. Member States should seek to enable consumers to obtain optimum benefit from their economic resources. They should also seek to achieve the goals of satisfactory production and performance standards, adequate distribution methods, fair business practices, informative marketing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practices which could adversely affect the economic interests of consumers and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marketplace.

21. Member States should intensify their efforts to prevent practices which are damaging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consumers through ensuring that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others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adhere to established laws and mandatory standards. Consumer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monitor adverse practices, such as the adulteration of foods, false or misleading claims in marketing and service frauds.

22.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strengthen or maintain, as the case may be, measures relating to the control of restrictive and other abusive business practices which may be harmful to consumers, including means for the enforcement of such measures. In this connection, Member States should be guided by their commitment to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35/63 of 5 December 1980.

23. Member States should adopt or maintain policies that make clea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ducer to ensure that goods meet reasonable demands of durability, utility and reliability, and are suited to the purpose for which they are intended, and that the seller should see that these requirements are met. Similar policies should apply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24.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fair and effective competition in order to provide consumers with the greatest range of choice among products and services at the lowest cost.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are not used to protect domestic businesses from competition or applied unfairly.

25. Member States should, where appropriate, see to it that manufacturers and/or retailers ensure adequate availability of reliable after-sales service and spare parts.

26.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from such contractual abuses as one-sided standard contracts, exclusion of essential rights in contracts and unconscionable conditions of credit by sellers.

27. Promotional marketing and sales practices should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fair treatment of consumers and should meet legal requirements. This require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consumers to take informed and independent decisions, as well as measures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accurate.

28.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ll concerned to participate in the free flow of accurate information on all aspects of consumer products.

29. Consumer access to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and services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such means as product profiles,

environmental reports by industry, information centres for consumers, voluntary and transparent eco-labelling programmes and product information hotlines.

30. Member State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consumer organizations, should take measures regarding misleading environmental claims or information in advertising and other marketing activities.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advertising codes and standards for the regulation and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claims should be encouraged.

31. Member States should, within their own national context, encourag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by businesses, in cooperation with consumer organizations, of codes of marketing and other business practices to ensure adequate consumer protection. Voluntary agreements may also be established jointly by businesses, consumer organization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ese codes should receive adequate publicity.

32. Member States should regularly review legislation pertaining to weights and measures and assess the adequacy of the machinery for its enforcement.

D.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quality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33. Member States should, as appropriate, formulate or promote the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voluntary and other,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the safety and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and give them appropriate publicity. 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product safety and quality should be reviewed from time to time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conform, where possible, to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s.

34. Where a standard lower than the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 is being applied because of local economic conditions,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raise that standard as soon as possible.

35.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facilities to test and certify the safety, quality and performance of essential consumer goods and services.

E. Distribution facilities for essential consumer goods and services

36. Member States should, where appropriate, consider:

(a) Adopting or maintaining policies to ensure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where appropriate, specific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the distribution of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where this distribution is endangered, as could be the case particularly in rural areas. Such policies could include assistance for the creation of adequate storage and retail facilities in rural centres, incentives for consumer self-help and better control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are provided in rural areas;

(b)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cooperatives and related trading activities, as well a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m, especially in rural areas.

F.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37.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fair, effective, transparent and impartial mechanisms to address consumer complaints through administrative, judicial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for cross-border

cases.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or maintain legal and/or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able consumers or, as appropriate, relevant organizations to obtain redress through formal or informal procedures that are expeditious, fair, transparent, inexpensive and accessible. Such procedures should take particular account of the needs of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consumers.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consumers with access to remedies that do not impose a cost, delay or undue burden on the economic value at stake and at the same time do not impose excessive or undue burdens on society and businesses.

38.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all businesses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in an expeditious, fair, transparent, inexpensive, accessible and informal manner, and to establish voluntary mechanisms, including advisory services and informal complaints procedures, which can provide assistance to consumers.

39. Information on available redress and other dispute-resolving procedure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consumers. Access to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mechanism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enhanced, particularly in cross-border disputes.

40.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collective resolution procedures are expeditious, transparent, fair, inexpensive and accessible to both consumers and businesses, including those pertaining to overindebtedness and bankruptcy cases.

41. Member States should cooperate with businesses and consumer groups in furthering consumer and business understanding of how to avoid disputes, of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mechanisms available to consumers and of where consumers can file complaints.

G.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mes

42.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or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general consumer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mes,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consumer choices and behaviour and the possible implications, including benefits and costs, of changes in consumption, bearing in mind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 people concerned. The aim of such programmes should be to enable people to act as discriminating consumers, capable of making an informed choice of goods and services, and conscious of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developing such programme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needs of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consumers, in both rural and urban areas, including low-income consumers and those with low or non-existent literacy levels. Consumer groups, busines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of civil society should be involved in these educational efforts.

43. Consumer education should, where appropriate,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basic curriculum of the educational system, preferably as a component of existing subjects.

44. Consumer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mes should cover such important aspects of consumer protection as the following:

- (a) Health, nutrition, prevention of food-borne diseases and food adulteration;
- (b) Product hazards;
- (c) Product labelling;

- (d) Relevant legislation, how to acces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obtain redress and agencies and organiz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 (e) Information on weights and measures, prices, quality, credit conditions and availability of basic necessities;
- (f) Environmental protection;
- (g) Electronic commerce;
- (h) Financial services;
- (i) Efficient use of materials, energy and water.

45.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consumer organizations and other interested groups, including the media, to undertake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mes, including on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consumption patterns and on the possible implications, including benefits and costs, of changes in consumption, particularly for the benefit of low-income consumer groups in rural and urban areas.

46. Businesses should, where appropriate, undertake or participate in factual and relevant consumer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grammes.

47. Bearing in mind the need to reach rural consumers and illiterate consumers, Member States should, as appropriate, develop or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nsumer information programmes in the mass media or through other delivery channels that reach such consumers.

48. Member States should organize or encourage training programmes for educators, mass media professionals and consumer advisers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carrying out consumer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mes.

H. Promotion of sustainable consumption

49. Sustainable consumption includes meeting the nee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for goods and services in ways that are economically,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50.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consumption is shared by all members and organizations of society, with informed consumers, Member States, businesses, labour organizations and consumer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laying particularly important roles. Informed consumers have an essential role in promoting consumption that is environment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including through the effects of their choices on producers.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the integration of those policies with other public policies. Policymaking by Member States should be conducted in consultation with business, consumer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concerned groups. Business has a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sustainable consumption through the desig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Consumer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ve a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and debate on sustainable consumption, for informing consumers and for working with Member States and businesses towards sustainable consumption.

51. Member States, in partnership with business and relevant organizations of civil society,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strategies that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through a mix of policies that could include regulations; economic and social instruments; sectoral policies in such areas as land use, transport, energy and housing; information programme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act of consumption

patterns; removal of subsidies that promote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promotion of sector-specific best practice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52.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the design, development and use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safe and energy- and resource-efficient, considering their full life cycle impacts.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recycling programmes that encourage consumers to both recycle wastes and purchase recycled products.

53.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standards for products and services; such standards should not result in disguised barriers to trade.

54. Member States should encourage impartial environmental testing of products.

55. Member States should safely manage environmentally harmful uses of substances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ound alternatives for such uses. New potentially hazardous substances should be evaluated on a scientific basis for their long-term environmental impact prior to distribution.

56.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awareness of the health-related benefits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bearing in mind both direct effects on individual health and collective effects through environmental protection.

57. Member States, in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encourage the transformation of un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use of new environmentally sound products and services and new technolog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can meet consumer needs, while reducing pollution and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58. Member States are encouraged to create or strengthen effective regulatory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cluding aspects of sustainable consumption.

59.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a range of economic instruments, such as fiscal instruments and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taking into account social needs, the need for disincentives for unsustainable practices and incentives for more sustainable practices, while avoiding potential negative effects for market access, in particular for developing countries.

60. Member States, in cooperation with business and other relevant groups, should develop indicators, methodologies and databases for measur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consumption at all levels. That information should be publicly available.

61.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should take the lead in introducing sustainable practices in their own operat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ir procurement policies. Member State procurement, as appropriate,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use of environmentally sound products and services.

62. Member State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promote research on consumer behaviour related to environmental damage in order to identify ways to make consumption patterns more sustainable.

I. Electronic commerce

63. Member States should work towards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by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ransparent and effective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ensuring a level of protection that is not less than that afforded in other forms of commerce.

64. Member States should, where appropriate, review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to accommodate the special features of electronic commerce and ensure that consumers and businesses are informed and aware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digital marketplace.

65. Member States may wish to consi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evisions thereof, and, where appropriate, adapt those guidelines and standards to thei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so that they can adhere to them, as well as collabo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in their implementation across borders. In so doing, Member States may wish to study the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J. Financial services

66. Member States should establish or encourage, as appropriate:

- (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and enforcement policies;
- (b) Oversight bodies with the necessary authority and resources to carry out their mission;
- (c) Appropriate controls and insurance mechanisms to protect consumer assets, including deposits;
- (d) Improved financial education strategies that promote financial literacy;
- (e) Fair treatment and proper disclosure, ensuring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so responsible and accountable for the actions of their authorized agents.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should have a written policy on conflict of interest to help detect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When the possibility of a conflict of interest arises between the provider and a third party, that should be disclosed to the consumer to ensure that potential consumer detriment generated by conflict of interest be avoided;
- (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by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authorized agents, including responsible lending and the sale of products that are suitable to the consumer's needs and means;
- (g) Appropriate controls to protect consumer financial data, including from fraud and abuse;
- (h) A regulatory framework that promotes cost efficiency and transparency for remittances, such that consumers are provided with clear information on the price and delivery of the funds to be transferred, exchange rates, all fees and any other costs associated with the money transfers offered, as well as remedies if transfers fail.

67. Member States should adopt measures to reinforce and integrate consumer policies concerning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education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accessing and using financial services.

68. Member States may wish to consider relevant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on financial services and the revisions thereof, and, where appropriate, adapt those guidelines and standards to thei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so that they can adhere to them, as well as collabo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in their implementation across borders. In so doing, Member States may wish to study the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Group of 20, as well as the Principles for Innovative Financial Inclusion of the Group of 20 and the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f the World Bank.

K. Measures relating to specific areas

69. In advancing consumer interests,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Member States should, where appropriate, give priority to areas of essential concern for the health of the consumer, such as food, water, pharmaceuticals, energy and public utilities, and also address the specificities of tourism. Policies should be adopted or maintained for product quality control, adequate and secure distribution facilities, standardized international labelling and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research programmes in these areas. Member State guidelines in regard to specific areas should be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document.

70. **Food.** When formulating national policies and plans with regard to food, Member Stat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eed of all consumers for food security and should support and, as far as possible, adopt standards from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dex Alimentarius or, in their absence, other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food standards. Member States should maintain, develop or improve food safety measures, including, inter alia, safety criteria, food standards and dietary requirements and effective monitoring, inspection and evaluation mechanisms.

71.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al policies and practices,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protection of soil and water, taking into account traditional knowledge.

72. **Water.** Member States should, within the goals and targets set for the 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 formulate, maintain or strengthen national policies to improve the supply, distribution and quality of water for drinking.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the choice of appropriate levels of service, quality and technology, the need for education programmes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73. Member States should assign high priority to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concerning the multiple uses of water,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neral and its finite character as a resource.

74. **Pharmaceuticals.**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or maintain adequate standards, provisions and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s for ensuring the quality and appropriate use of pharmaceuticals through integrated national drug policies which could address, inter alia, procurement, distribution, production, licensing arrangements, registration systems and the availability of reliable information on pharmaceuticals. In so doing, Member States should take special account of the work and recommendation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pharmaceuticals. For relevant products, the use of that organization's Certification Scheme on the Quality of Pharmaceutical Products Mov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other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on pharmaceuticals should be encouraged. Measures should also be taken, as appropriate, to promote the use of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for drugs, drawing on the work done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75. In addition to the priority areas indicated above, Member States should adopt appropriate measures in other areas, such as pesticides and chemicals in regard, where relevant, to their use, production and storage, taking into account such relevant health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s Member States may require producers to provide and include in the labelling of products.

76. **Energy.**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universal access to clean energy and formulate, maintain or strengthen national policies to improve the supply, distribution and quality of affordable energy to consumer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hoice of appropriate levels of service, quality and technology, regulatory oversight, the need for awareness-raising programmes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77. **Public utilities.** Member States should promote universal access to public utilities and formulate, maintain or strengthen national policies to improve rules and statutes dealing with provision of service, consumer information, security deposits and advance payment for service, late payment fees, termination and restoration of service, establishment of payment plans and dispute resolution between consumers and utility service provider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consumers.

78. **Tourism.** Member Stat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are adequate to address the marketing and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touris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vel, traveller accommodation and timeshares. Member States should, in particular, address the cross-border challenges raised by such activity, including enforcement cooperation and information-sharing with other Member States, and should also cooperate with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tourism-travel sector.

VI. International cooperation

79. Member States should, especially in a regional or subregional context:

(a) Develop, review, maintain or strengthen, as appropriate, mechanism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national policies and measures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b) Cooperate or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to achieve greater results within existing resources. Examples of such cooperation could be collaboration in the setting up or joint use of testing facilities, common testing procedures, exchange of consumer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mes, joint training programmes and joint elaboration of regulations;

(c) Cooperate to improve the conditions under which essential goods are offered to consumers, giving due regard to both price and quality. Such cooperation could include joint procurement of essential goods, exchange of information on different procurement possibilities and agreements on regional product specification.

80. Member States should develop or strengthen information links regarding products which have been banned, withdrawn or severely restricted in order to enable other importing countries to protect themselves adequately against the harmful effects of such products.

81. Member States should work to ensure that the quality of products and the information relating to such products does not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a way that would have detrimental effects on consumers.
82. Member States should improve their ability to cooperate in combating fraudulent and deceptive cross-border commercial practices, as that serves an important public interest, recognizing that cooperation on particular investigations or cases under these guidelines remain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y that is asked to cooperate.
83. The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of Member States should coordinate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activities to avoid interference with the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activities of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taking place in other jurisdictions.
84. The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of Member State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resolve disagreements that may arise regarding cooperation.
85. Member States and their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should make use of existing international networks and enter into appropriat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rrangements and other initiatives to implement these guidelines.
86. Member States should enable their consumer protection policy agencies, in consultation with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the framework for combating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s set out in these guidelines.
87. Member States are invited to designate a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y or a consumer protection policy agency to act as a contact point to facilitate cooperation under these guidelines. Those designations are intended to complement and not replace other means of cooperation. Such designations should be notified to the Secretary-General.
88. Member States should provide their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with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pursue, obtain and, where appropriate, share relevant information and evidence, particularly on matters relating to cross-border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ffecting consumers. That authority should extend to cooperation with foreign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and other appropriate foreign counterparts.
89.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participating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rrangements to improve international judicial and inter-agency cooperation in the recovery of foreign assets and the enforcement of decisions in cross-border cases.
90. Member States may wish to consider relevant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on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ross-border commercial practices, in considering the legal authority to provide to their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gencies, and, where appropriate, adapt those guidelines and standards to their circumstances. In so doing, Member States may wish to study the Guidelin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cross Bord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91.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Member States, international bodies and business should work together to develop, transfer and disseminate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including through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to devise new and innovative mechanisms for financing their transfer

among all countries, in particular to and among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92.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ppropriate, should promote and facilitate capacity-building in the area of sustainable consumption,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particular, Member States should also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consumer group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of civil society,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capacity in this area.

93.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bodies, as appropriate, should promote programmes relating to consumer education and information.

94. Member States should work to ensure that policies and measures for consumer protection are implemented with due regard to their not becoming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and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VII. International institutional machinery

A. Institutional arrangements

95. An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onsumer protection law and policy,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an existing commission of the Trade and Development Board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ill provide the institutional machinery.

96. Member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s to implement these guidelines.

B. Functions of the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onsumer protection law and policy

97. The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on consumer protection law and policy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a) To provide an annual forum and modalities for multilateral consultations, discussion and exchange of views between Member St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guidelines, in particular their implementation and the experience arising therefrom;

(b) To undertake studies and research periodically on consumer protection issues related to the guidelines based on a consensus and the interests of Member States and disseminate them with a view to increasing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giving greater effectiveness to the guidelines;

(c) To conduct voluntary peer reviews of national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of Member States, as implemented by consumer protection authorities;

(d) To collect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matters relating to the overall attainment of the goals of the guidelines and to the appropriate steps Member States have taken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s to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ir objectives and principles;

(e) To provide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economies in transition in formulating and enforcing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f) To consider relevant studies, documentation and report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etworks, to exchange information on work programmes and topics for

consultations and to identify work-sharing projects and cooperation in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g) To make appropriat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n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of Member States, including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se guidelines;

(h) To operate between and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Review All Aspects of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i) To conduct a periodic review of the guidelines, when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Review All Aspects of the Set of Multilaterally Agreed Equitable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ontrol of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j) To establish such procedures and methods of work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its mandate.

98.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neither the intergovernmental group nor its subsidiary organs shall pass judgement on the activities or conduct of individual Member States or of individual enterprises in connection with a specific business transaction. The intergovernmental group or its subsidiary organs should avoid becoming involved when enterprises to a specific business transaction are in dispute.

99. The intergovernmental group shall establish such procedures as may be necessary to deal with issues related to confidentiality.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04

국제스포츠법 분야

“국제스포츠에 있어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의 분석을 겸하여–

부록 ▶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섭 교수는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1994년 공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활동 분야는 행정법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 및 ADR 법 분야이다.

국제스포츠에 있어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김 용 섭*

Abstract

스포츠는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는 다양한 국가법질서가 적용될 수 있는 사회현상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적인 개입이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오늘날 스포츠의 국제화와 더불어 스포츠의 상업주의가 강조되면서 통일된 국제스포츠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적지 않고, 스포츠 분쟁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를 통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AS의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AS의 법적지위와 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특히, 2016년부터 IOC 상벌위원회에서 CAS로 이관된 반도핑 특별부(AD hoc Division)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살펴 보았다. 아울러 본고에서 고찰한 독일 Claudia Pechstein 선수의 도핑사례와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은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를 이해하고 법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크다.

국제스포츠법의 분야인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검토를 통해, 2018년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법적으로 대비하고, 그동안 대한 체육회가 보여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혼선과 시행착오를 극복함과 아울러 종목별 국가대표선발규정을 비롯한 미비된 국내 스포츠법제의 정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I. 머리말

스포츠는 국가를 초월하여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올림픽과 각종 국제스포츠경기를 통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스포츠 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세계인의 축제가 되고 있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스포츠 경기의 개최와 선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TV와 인터넷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세계인이 동시에 관전하는 등 스포츠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는 오늘날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스포츠 영역은 다양한 국가법질서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사회현상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적인 개입이 제한되는 부분사회에 속한다.² 다른 한편으로 통일된 국제스포츠법은 스포츠 선수의 관점에서 스포츠에 있어서 동등대우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³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제스포츠법의 중요문제이다. 도핑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고, 사후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1999. 11. 10.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가 발족되었다. WADA가 주축이 되어 2003. 5. 5. 제정하여 2004. 1. 1.부터 시행중인 WADA Code에서는 국제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기술적인 규율과 더불어 도핑을 억제하기 위한 실체적이며 절차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⁴ 박태환 선수의 2016년 리우올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임시적 보전조치로 관심을 끌었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1 Burak Herguner, "The IOC as a transnational organization; Pradigm shift and its rising role in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ieview, 2012, p. 177.

2 Jens Adolphsen (Hrsg.), Sportrecht in der Praxis, Verlag W. Kohlhammer, 2012, S. 247.

3 동등대우의 원칙은 스포츠에 있어서 성과원칙 및 경쟁원칙과 더불어 스포츠의 중요한 3대 기본원칙이다. 올림픽 등 아마스포츠에 있어서 단일단체원칙(Ein Verband Prinzip)이 적용되고 있는 바, 이는 경쟁스포츠에 있어서 성과비교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4 Jens Adolphsen (Hrsg.), a. a. O., S. 248.

Sport) 역시 이러한 스포츠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의 국제화⁵에 따라 스포츠분쟁에 있어서 CAS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핑과 관련된 선수의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등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국제스포츠 분쟁이 배타적으로 C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CAS가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분쟁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고찰하려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빙상선수인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는 국제스포츠법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으로 CAS의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위 사례에서 CAS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독일의 국내법원에 의한 관할을 인정하지 않고 CAS를 통한 해결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Claudia Pechstein 사건은 박태환 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향후 올림픽 경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CAS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바람직한 권리구제수단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는 국제스포츠법 분야 특히 CAS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대비하고⁶, 종목별 국가대표선발규정 등 국내 스포츠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CAS 등 국제스포츠기구의 법제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스포츠법제의 개선 등 법정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5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2014. 12. 8. 올림픽아젠다 2020을 발표하여,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한편 IOC는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올림픽에서 도핑문제에 대한 제소를 CAS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부터 CAS 반도핑특별 중재부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6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동아시아 3국이 순차적으로 동계 또는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는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2020년에는 동경올림픽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북경동계올림픽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무엇보다 국제스포츠분쟁 특히, CAS의 분쟁해결기구와 그 제도운영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논의의 진행은 스포츠 분쟁과 ADR(II)에서 1. ADR의 일종으로서의 CAS 2. 스포츠 분쟁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CAS를 통한 분쟁해결시스템(III)에서 1. CAS의 연혁과 발전과정 2.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의 조직과 역할 3. 중재인과 조정인의 자격 4. CAS의 중재 및 조정절차 5. 임시적 보전조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4. CAS의 중재 및 조정절차 부분에서 통상중재절차, 항소중재절차, 특별중재부의 절차, 조정절차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나아가 CAS의 법적지위와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IV)에서는 1. 도핑에 대한 법적규제 2. CAS의 법적지위 및 반도핑 특별부(Anti-Doping Division)의 신설 3. 제1차적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독일의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의 분석(V)에서 1. 사실관계 2. CAS의 결정과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 3. 독일 뮌헨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OLG München)의 판결 4.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 5. 평가 및 시사점의 순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 스포츠분쟁과 ADR

1. ADR의 일종으로서의 CAS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과는 달리 비정형적이고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저렴하며,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스스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가 아닌 상생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단심(單審)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⁷

⁷ 조정제도의 신속성이 장점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신속성의 관점을 지나치게

오늘날은 ADR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선진 각국에서 ADR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 이유는 ADR이 재판과는 달리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의 비공개원칙과 당사자의 자율적인 해법발견과 지속적 관계 유지 등 매력적인 분쟁해결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⁸ ADR은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 다양한 형태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스포츠 분쟁 ADR 기구가 각국마다 발전하여 왔지만 국제스포츠의 경우에는 CAS가 발족되어 제3자인 중립적인 중재인과 또는 조정인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스포츠 분쟁사건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의 세계는 통상의 인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가령 스포츠선수와 감독, 스포츠 선발의 문제, 도핑에 따른 스포츠단체의 제재조치 등 다양한 스포츠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스포츠세계에 있어서도 상업화와 더불어 점점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쟁이 야기 될 경우 법원의 소송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며, 특히 스포츠계라고 하는 협소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갈등해결에 매우 유용하다.⁹

스포츠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도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인 ADR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에 있어서 국제성, 경제적 가치, 신속성, 법적용의 통일성 및 분쟁해결의 권위가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¹⁰

강조하기보다는, 충실한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으며, 신속하게 해결되었으나 지속적인 관계의 개선보다 제3자인 법원, 조정인의 해결에 그치는 수가 있으므로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8 조정과 재판을 별개의 제도인지 아니면 연관된 분쟁해결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정 등 ADR을 재판과의 일관성이 있는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재판에 대한 대안적 해결이라기보다는 보충적인 분쟁해결 제도로 인식하고 조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9 김용섭,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정학회 제19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6. 6. 3. 28면.

10 Jan F. Orth, “Zur Zukunft der internationalen Schiedsgerichtsbarkeit im sport- auch in

스포츠에 대한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로서 국내적인 분쟁해결기구와 국제적 분쟁해결기구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2006년 대한체육회 산하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현재 국내 스포츠 중재제도는 한국 상사중재원을 통하여 해결되거나 대한체육회 내부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적 스포츠분쟁조정기구로는 CAS 를 들 수 있다. CAS 는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스위스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CAS 의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스위스 연방법원에 그 판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CAS 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의사유 가령,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¹¹

2. 스포츠 분쟁의 유형 및 특징

스포츠 분쟁사건은 그 관할권과 관련하여 국가내의 분쟁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분쟁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적 스포츠분쟁과 국제적 스포츠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분쟁과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 중에 스포츠 중재나 조정 등 ADR 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스포츠의 분쟁은 크게 3가지 범주로 유형구분이 가능하다.¹² 먼저 첫째 유형은 법률적 쟁송으로서 법원에 제소될 수 있는 범주이다. 가령 클럽 팀과 선수와의 사이에 연봉, 이적, 계약해제에 관한 분쟁이나 선수와 후원계약(sponsorship contract)의 분쟁, 경기단체, 팀, 선수 등이 보유하는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에 관한 분쟁 등을 들

Deutschland”, SpuRt 6/2015, S. 230.

11 2006년도에 Danilo Hondo 선수가 도핑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스위스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CAS에 의하여 자격정지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 등 몇몇 사례가 있을 뿐이다.

12 小川和茂, “스포츠仲裁”, 法律時報 第87卷 第4号, 31-32面.

수 있다.

둘째 유형은 법률적 쟁송이나 법원에 제소하기 보다는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범주이다. 가령 대표선수선발에 관한 분쟁, 선수, 감독, 코치, 팀 등의 자격인정이나 경기단체규칙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분쟁, 경기단체에의 가입의 허부에 관한 분쟁, 반도핑 규칙 위반의 유무에 관한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유형은 법률적 쟁송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판 외 분쟁해결 기구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범주이다. 가령 경기 중 심판의 판정에 관한 분쟁을 들 수 있다. 다만, 올림픽 경기 중에 판정시비와 관련하여 CAS 를 통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국제적인 스포츠중재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분쟁유형으로는 먼저 국제스포츠 경기단체가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분쟁, 올림픽경기 참가와 관련된 분쟁 그리고 방송중계권 계약 등 스포츠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쟁은 특히 국제스포츠단체의 규정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절차위반과 관련하여 선수이적과 관련된 분쟁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금지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도핑의 문제가 국제스포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일반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스포츠에 전문적인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스포츠 분쟁은 우선 선수의 최고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단기간이므로 분쟁을 국내 법원에 제소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선수의 입장에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법적인 해결 보다는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수나 코치의 경우 도핑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범위한 금지약물의 목록과 상세한 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함과 아울러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쟁기구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

13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국제스포츠 분쟁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159면.

차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의 분쟁은 법률적인 쟁송에 속하더라도 신속하고, 절차도 유연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중립적인 중재인이나 조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ADR 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III. CAS를 통한 분쟁해결시스템

1. CAS의 연혁과 발전과정

CAS는 특별한 국제스포츠 분쟁해결기구이며 국가적 법원에 의한 제소가 아닌 순수한 중재법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포츠 중재의 역사는 비교적 일천하다. CAS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한 기구는 올림픽헌장 제15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 영속적인 국제 비정부 비영리조직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라고 할 것이다.¹⁵ IOC는 스포츠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쟁을 유연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CAS라고 하는 특별히 권위 있는 ADR 기구로 출범한 것이다.¹⁶

CAS는 1984년 당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장인 사마란치의 제안으로 창설되었고, 스위스 로잔느에 본부를 두고 있다. 당시 사마란치 위원장은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고 올림픽의 상업화를 지향하였다. 그 과정에서 올림픽의 고유한 가치가 다소 손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음에도 올림픽에 있어서 적자해소와 이윤추구를 위해 올림픽에 존재하는 상업성의 과도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¹⁷ 결국 CAS는 경제적

14 小川和茂, “스포츠仲裁”, 法律時報 第87卷 第4号, 32面.

15 한희원, “현행 올림픽헌장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리즘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한 규범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1호, 2010, 178면.

16 <http://www.tas-cas.org/en/general-information/history-of-the-cas.html>.

17 김철, “IOC의 국제법상 지위”,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2010, 245-246면.

이해관계의 대립에 착안하여 특히 스포츠 단체의 제재조치와 경기규정에 기초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선수의 보호 관점에서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이다. CAS는 당시 IOC 위원이며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로 있던 케바 음바에 (Kéba Mbaye)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출범시키고 초대 위원장이 되어 초창기 CAS의 정착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CAS의 실질적 운영은 IOC에 의하여 이루어져 독립성과 중립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¹⁸

따라서 한때 CAS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어, CA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스위스 연방법원에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⁹ 이와 더불어 1994년 9월 22일부터 스포츠와 관련된 중재규정이 제정되어 CAS의 조직과 중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1999년부터 CAS의 중재규정은 조정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권고적 절차에 대하여도 함께 규율하게 되었다. 2000년 이래 CAS의 관할영역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1년에 국제경기연맹(IAAF), 2002년에 FIFA가 CAS의 전속관할로 되었다. CAS는 올림픽 경기도중의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를 통해 WADA Code 제13조 2, 1항²⁰에 따라 반도핑 분쟁에 있어 최종적인 심급임을 밝히고 있다. CAS는 2004년 이후 신청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 CAS는 국제경기연맹에 의하여 도핑제재로 자격이 정지된 선수들이 제기한 항소사건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18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2008. 2, 95면.

19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102면. 2004, 102면. 이 소송에서 스포츠선수와 국제마술연맹과의 관계를 판정하는 CAS는 독립되어 있어 CAS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 WADA Code 제13조 2, 1.항에서 국제수준의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항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제경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또는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결정은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

2.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의 조직과 역할

ICAS의 과제는 CAS의 독립성의 확보와 더불어 CAS의 중재절차를 관리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CAS의 주체는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사법인인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CAS)이다.²¹ 스위스연방법원은 IOC와의 관계에서 CAS의 독립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방론으로 기술했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IOC로부터 분리하여 스위스 법에 따른 법인으로 ICAS를 설립하여 별도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와 관련되는 분쟁을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라는 스위스 로잔느에 위치하는 2개의 기구가 존재하게 되었다. 1994년에 독립한 스포츠중재위원회(ICAS)가 설립됨과 동시에 그 관리 하에 CAS를 운영하는 것에 의해, IOC로부터 조직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ICAS는 CAS의 최상급 기관이다. ICAS의 주된 역할은 CAS의 독립성을 지키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ICAS는 CAS의 행정과 재정에 책임을 진다.²²

ICAS는 ADR과 스포츠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식견 있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와 연관 있는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법률가로 구성된 ICAS는 CAS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ICAS위원장을 선출하고, 통상중재부의 위원장, 항소중재부의 위원장, 특별중재부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사무국을 두어 사무총장과 다수의 사무국원이 당사자, CAS 중재재판관, ICAS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21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102면, 2004, 152-153면.

22 ICAS 및 CAS 절차규정 S2- The purpose of ICAS is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and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of CAS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It is also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CAS.

3. 중재인과 조정인의 자격

CAS의 중재인은 충분한 법학적 교육과 스포츠법이나 국제중재에 대한 경험을 갖는 사람으로서 CAS 중재인 목록에 있는 자 중에서 ICAS에 의하여 임명된다.²³ 중재인은 1인 또는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CAS에 제소 전에 당해사건의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우 그 사건의 중재인이 될 수 없다. 2016년 현재 CAS 중재인의 명단에는 90여 개국의 350명의 중재인과 60명의 조정인이 있다.

CAS의 조정인은 4년 임기로 ICAS에 의하여 선임되며,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해 놓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ADR에 대한 식견과 스포츠법적 쟁점에 대하여 역량이 있으며, 영어나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조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련의 진행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조정인으로 활동하는 한에서는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지녀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²⁴

4. CAS의 중재 및 조정절차

가. 개설

CAS의 주된 사무소는 스위스 로잔느에 있다. 1996년에 CAS는 2개의 상설 지부 2곳을 개설하였다. 하나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있는 덴버이다. 1999년 12월에 덴버에서 뉴욕으로 옮겼다. CAS는 대안적 심문센터(alternative hearing center)를 상해, 아부다비, 쿠알라룸푸르, 카이로에 설치하고 있다.²⁵

²³ CAS 중재규칙 S 13

²⁴ CAS 조정규칙 제6조 및 제10조

CAS는 3개 분과를 두고 있는데, 통상중재부, 항고중재부 그리고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로 나누어지며, 특별중재부는 1996년부터 올림픽경기, 1998년 이래 영연방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 2000년부터 EURO, 2006년부터 FIFA 월드컵, 2014년부터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경우에 개최도시에 설치하는 임시적인 분쟁해결기구라고 할 수 있다.

CAS에서 중재인들은 국가의 법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헌장, 각 종목별 스포츠단체의 경기규칙 및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나. 통상중재 절차(the ordinary arbitration procedure)

통상중재의 절차를 보통중재 또는 일반중재의 절차로 지칭되기도 한다. 통상중재의 절차는 특정한 스포츠 단체나 기관에 의한 결정에 대한 취소도 아니고 올림픽 경기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것도 아닌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을 위한 절차이다.²⁶ 여기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결정한다. 가령 스포츠스폰서 계약, 스포츠 중계권에 관한 계약, 운동선수의 고용에 관한 계약, 선수이적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²⁷

CAS의 통상중재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CAS에 중재하기로 하는 중재합의 조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 분쟁당사자간에 중재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가능하다.²⁸

25 William Stenheimer, "CAS Procedure and Practice", Sports Arbitration Conference Seoul, 2016. 5. 2. p. 12

26 CAS 중재규칙 S 20 a

27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2008, 97면, 연기영 교수는 상거래계약, 프로계약이나 초상권에 관련되는 문제 등을 취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8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국제스포츠 분쟁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167면.

다. 항소중재 절차(the appeals arbitration procedure)

항소중재 절차는 통상중재 절차와는 달리 일단 내려진 결정을 전제로 하여 불복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영어의 ‘the appeals arbitration procedure’ 를 학자에 따라 항소중재절차 또는 상소중재절차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항소중재절차라고 하기로 한다.²⁹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중재판정 다시 말해 CAS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항고중재절차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항소’로 확립되어 설명되므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항소중재부에서는 각각의 적용할 수 있는 단체의 규율과 피고인 단체가 그 주소지를 갖는 나라의 법과 관련된다.

항소중재 절차는 스포츠단체의 내부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특히 도핑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분쟁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³⁰ 이러한 분쟁의 예로서는 IOC, 국제경기연맹(IFs) 등의 내부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징계처분, 운동선수의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격에 관한 결정, 운동경기의 공식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 등이 있다.³¹

중재재판관은 항소중재부에서 사실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심사할 수 있다.

29 강병근 교수는 이를 초기의 논문에서는 ‘상소중재절차’라고 번역하였다가 나중의 논문에서는 ‘항소중재절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불복제도라면 이를 ‘항소중재절차’나 ‘상소중재절차’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항고중재절차’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0 CAS 중재규칙 S 20 b

31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국제법의 과제- 국제스포츠 분쟁해결 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164면.

라.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의 절차

특별중재부는 올림픽 경기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기간 중에 야기되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개최 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대회 개최기간 중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공정한 경기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 CAS는 1996년 이래 기본적으로 올림픽 경기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9명, 하계 올림픽에는 12명의 중재인을 올림픽 개최지에 배치하는 형태로 이른바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특별중재부의 설치목적은 올림픽기간 동안은 물론 올림픽 개막식 이전 10일 동안에 야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중재부는 최종적인 심급으로 선수의 자격문제, 도핑과 관련한 징계처분 등을 다룬다.

이 특별중재부의 판정은 개막식 10일 전에 시작하여 폐막식 날에 종결된다. 중재심판관은 즉석에서 특별중재부의 위원장에 의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임명된다. 아울러 패널은 3인 또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중재부의 패널결정은 즉시 집행될 수 있으며,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의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특히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CAS에 의하여 임명된 14인의 중재인으로 특별중재부를 구성하였다. 2016년부터 종전에 IOC 상벌위원회에서 처리하던 도핑 관련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된 CAS의 특별중재부에서 심리하였다. 전체적으로 20건을 처리하여 지금까지 특별중재부에서 가장 많이 사건을 처리한 실적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새로 이관된 CAS 반도핑 특별부(Anti-Doping ad hoc Division, ADD)에서는 8건의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를 지었다. 2016년 리우올림픽 특별 중재부에서는 20건의 심리를 거치는 등 특별중재절차에서 전체적으로 28건을 접수하여 심리하는 이정표를 남겼다.

마. 조정절차(the mediation procedure)

CAS 조정은 각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당사자와 함께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하고자 조정합의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비구속적이며 비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각 당사자는 CAS 조정인을 통하여 협상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³² 그러나 조정은 조정인이 어느 일방 당사자를 위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 이처럼 CAS 조정은 중재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절차 대신에 조정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CAS는 CAS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조정인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³³ 조정의 합의는 하나의 계약서나 분리된 합의서에 조정조항이 있으면 족하다.³⁴

원칙적으로 CAS 조정에 있어서는 계약적 분쟁을 주로 다루게 된다. 엄격한 요건 하에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도핑(doping issues), 승부조작(match-fixing), 뇌물수수(corruption)와 같이 징계문제와 관련된 분쟁사안은 CAS 조정으로부터 제외된다.³⁵

조정절차는 1인 또는 3인의 패널을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조정부와 항소조정부로 구분된다. CAS의 조정절차는 CAS 조정규칙에 의한다. 조정이 성공한 경우에는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명에 따라 종료되게 된다.³⁶

³² CAS 조정규칙 제1조 제1항.

³³ 양 당사자가 조정인을 CAS 조정인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CAS 조정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CAS 조정인의 목록에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CAS 위원장에 의하여 지명될 수 있다.

³⁴ CAS 조정규칙 제2조.

³⁵ CAS 조정규칙 제1조 제2항.

³⁶ 김종호, “국제스포츠에 있어서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유럽의 프로축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5권 제2호, 2011, 24면

5. 임시적 보전조치

CAS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임시적 보전조치라는 특별한 잠정적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다.³⁷ 임시적 보전조치의 3가지 요건으로는 첫째로,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경우일 것 둘째로, 신청 당사자가 본안의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 셋째로, 신청당사자의 이익이 반대 당사자 또는 다른 올림픽 공동체의 회원들의 권리를 압도하는지 여부를 들 수 있다.³⁸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재당사자는 중재요청서 또는 항소요청서를 CAS에 제출한 후, 패널에 해당 서류가 이송되기 이전에는 관련 중재부 위원장이 그리고 서류 이송 후에는 패널이 일방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임시적 보전조치를 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항소중재절차에 합의하면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상기 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지만, 통상 중재절차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임시적 보전조치는 포기할 수 없다.³⁹

임시적 보전조치가 신청되면 관련 중재부 위원장 혹은 패널은 임시적 보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명령을 발해야 한다. 다만 매우 긴급한 경우 관련 중재부 위원장 혹은 패널은 제출된 요청서를 근거로 명령을 내린 후 해당 당사자를 심리할 수 있다. 임시적 보전조치를 발할 때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⁴⁰

임시적 보전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적 및 국제적 중재기구간의 경합이 가능하다. 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 CAS로 하기로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CAS에 의한 배타적 결정만이 가능하고 국내적 법원에의 제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⁴¹

37 김중호, 앞의 논문, 20-27면.

38 김중호, 앞의 논문, 26면.

39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107면.

40 CAS 중재규칙 제37조

IV. CAS의 법적지위와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도핑에 대한 법적 규제

도핑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금지목록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코치나 감독 등이 선수에게 이러한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⁴² 전통적인 도핑이외에 혈액도핑도 금지하고 있는 바, 혈액도핑이란 기존의 약물 도핑과는 달리 미리 채혈한 자신의 혈액을 경기시작 직전에 투입하여 일시적으로 적혈구의 수를 증가시켜 경기력 향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세계 반도핑 기구(WADA)는 심장마비를 우려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핑은 운동선수의 건강의 보호, 스포츠 윤리의 확보, 경쟁에 있어 동등한 기회보장 및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⁴³ 다시 말해 경쟁을 왜곡하고 스포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경기(fair play)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수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 나아가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어 도핑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도핑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는 엄격한 제재처분이 내려지므로 선수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도핑과 이에 대한 제재결정에 대하여 CAS에 제소하여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스포츠의 규율뿐만 아니라 국내 스포츠에 있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핑에 관한

41 Jens Adolphsen (Hrsg.), Sportrecht in der Praxis, Verlag W. Kohlhammer, 2012, S. 289.

42 김용섭,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4호, 2015, 165면.

43 김용섭, “도핑규제의 법적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15호, 2010, 183면 이하.

개념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 2에서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스포츠선수가 금지약물 등을 복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CAS의 법적지위 및 반도핑 특별부(Ad hoc Anti-Doping Division)의 신설

가. CAS의 반도핑 사건의 관할과 지위

도핑은 국제스포츠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세계 반도핑기구(WADA)는 WADA Code 를 제정하고 있다. WADA Code 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제정하는 규범으로 도핑목록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전 세계의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적 스포츠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WADA Code 는 UNESCO 협약의 부록에 붙여져 있어, 동 협약에 가입하고 승인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WADA Code 를 준수하여야 한다.⁴⁴ 다만, 선수에게 곧바로 WADA Code 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국가의 반도핑 규정을 통하거나, 국제적 또는 국내적 스포츠단체의 도핑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WADA Code 는 해석에 있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선수에게 적용하게 된다. 반도핑 사건은 WADA Code 제13조 제2. 3항⁴⁵ 및 CAS 의 스포츠중재규칙 제47조⁴⁶에 따라 CAS 의 전속관할이다.

44 김용섭,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4호, 2015, 168면.

45 13.2.3 항소권을 가진 당사자: 제13.2.1항 하의 사건에서 다음의 당사자들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a) 항소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관계자 (b)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한편 올림픽 헌장 제61조 제2항⁴⁷에서 “올림픽 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the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에 따라 CAS 에 분쟁해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올림픽과 관련하여 CAS 의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다.⁴⁸ CAS 는 독일 연방대법원(BGH)에서 받아들인 바와 같이 순수한 중재재판소로서 그 결정의 효력이 국가법원의 결정과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⁴⁹

나. IOC 상벌위원회에서 CAS 반도핑 특별부의 권한 이관

IOC 는 2016. 3. 2. IOC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림픽 경기 도중에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종전의 IOC 상벌위원회에서 독립적인 기구로 결정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CAS 에 새로이 설치된 반도핑 특별부에서 2016년 리우 올림픽 경기의 분쟁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CAS 반도핑 특별부는 IOC 상벌위원회로 부터 올림픽 기간 동안의 도핑사건에 대하여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채취한 시료의 재분석의 권한을 이관 받게 되었다.⁵⁰

상대방 (c) 관련 국제경기연맹 (d) 당사자 거주 국가 또는 관계자가 국적 또는 자격을 소지한 국가의 도핑방지기구 (e)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경기의 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 올림픽 경기 또는 장애인올림픽경기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f) 세계반도핑기구(WADA)

⁴⁶ R47 Appeal: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a federation, association or sports-related body may be filed with CAS if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e said body so provide or if the parties have concluded a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 and if the Appellant has exhausted the legal remedies available to it prior to the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at body. An appeal may be filed with CAS against an award rendered by CAS acting as a first instance tribunal if such appeal has been expressly provided by the rules of the federation or sports-body concerned

⁴⁷ 2. Any dispute arising on the occasion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Olympic Games shall be submitted exclusively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⁴⁸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2007, 429면.

⁴⁹ Peter W. Heermann, “Die Sportschiedsgerichtsbarkeit nach dem Pechstein- Urteil des BGH”, NWJ 31/2016, S. 2224.

⁵⁰ <http://www.sportsintegrityinitiative.com/cas-anti-doping-division-to-handle-olympic>.

이러한 움직임은 제4차 올림픽 최고정상회의에서 올림픽 아젠다 2020의 제15항에 명기되어 있는 ‘깨끗한 선수보호(Protecting the Clean Athlete)’에 입각하여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반도핑 테스트를하기로 결정하였다.⁵¹ 이 점은 동 회의에서 도핑에 대한 억제와 깨끗한 선수의 보호에 어떠한 관용도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깨끗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도핑의 근본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승부조작, 경쟁왜곡 및 이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권한 이양의 법적인 근거는 올림픽 헌장 제59조 제2. 4항⁵²과 IOC 반도핑 규정 (Anti-Doping Rule) 제8조 2. 2항⁵³에서 찾을 수 있다. 올림픽 헌장에 따라 IOC 상별위원회로 이관하였던 권한을 IOC 반도핑규정 제8조 제2. 2항에 의해 리우 올림픽기간 동안에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의 경우 독립된 기구인 CAS 반도핑 특별부로 이관한 것이다.

다. CAS 반도핑 특별부의 신설

CAS의 반도핑 특별부는 스포츠계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채택된 절차 규율을 통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어떠한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다. CAS는 스포츠중재재판소로 명명됨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하여 법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스포츠 분쟁사건에 있어서 최고심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CAS 반도핑 특별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특별한 목록에 제시된 중재인 및 직원으

51 Olympic agenda 2020 - 15. Change the philosophy to protecting clean athletes

52 Olympic charter 59.2.4 the IOC Executive Board may delegate its power to a disciplinary commission

53 CASAD 16/07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v. Izzat Artykov; :Pursuant to Rule 59.2.4 of the Olympic Charter, the IOC Executive Board has delegated to the CAS ADD its power to decide upon any violation of the World AntiDoping Code arising upon the occasion of the Olympic Games (Art. 8.2.2 IOC ADR).

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집행이사를 통하여 활동하는 ICAS는 반도핑에 관한 경험이 있는 중재인의 특별목록을 제시한다. 모든 중재인은 법적 훈련을 갖고 반도핑과 관련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양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⁵⁴

종전에 IOC 상벌위원회에서 다루던 올림픽 개최지의 도핑사건을 2016년부터 CAS의 반도핑 특별부를 신설하여 처리하였는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8건 중 7건을 CAS 반도핑 특별부에서 심리하였다.⁵⁵

3. 제1차적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가. 개설

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핑위반제재결정 위원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에 선수가 그 제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항소는 CAS에 항소하고, 국내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항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할 수 있다.⁵⁶

아울러 제1차적 도핑제재결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CAS에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나아가 CAS의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스위스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국내 법원에 제소가능성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민사법이나 형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핑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게 된 선수는 자신의 민사적 권리를 위

⁵⁴ CAS 반도핑중재부에 적용되는 중재규칙 제2조, 제3조 및 12조.

⁵⁵ WADA는 도핑사례에 있어서 WADA Code에 개정된 조직의 관할하에서 CAS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올림픽 개최지에 도핑분쟁을 위한 반도핑 특별중재부(Ad hoc Anti-Doping Division)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⁵⁶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 kada-ad. or. kr.) 참조

하여 법원에 제소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국가법의 사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⁵⁷

그러나 선수의 징계 등에 대하여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스포츠단체 내부의 자율적 처리에 맡긴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 제소하여도 관할이 없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포츠단체 내부의 규율일지라도 국가법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길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은 국내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의 심사의 척도는 일반적으로 단체의 기관이 규정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법치국가적인 원칙에 합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⁵⁸ 따라서 국내 스포츠분쟁으로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청문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스포츠단체가 제시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선수에 대한 제재에 있어 비례원칙 등은 지켰는지, 적절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냈는지 등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제소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국내법원은 CAS의 배타적 관할인 사안의 경우에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

다. 통일적 불복제도로서의 CAS

CAS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분쟁해결 기구이다. 패널에서 ① 통상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② 연맹, 협회, 스포츠 관련단체의 규정, 규칙, 특별합의에서 정한 경우 그 결정에 관한 분쟁의 항소절차를 통한 분쟁의 해결 ③ IOC, IFs, NOCs, WADA, IOC와 OCOGs가 승인하는 협회의 요청에 따른 비구속적 권고적 의견의 제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⁵⁹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WADA Code 제13조 제2, 1항⁶⁰에 의하면 국

57 http://de.wikipedia.org/wiki/internationaler_sportgerichtshof.

58 Dirk-Reinerr Mrtens, "Sportrecht- Eine Einführug in die Praxis", Boorberg, 2011, s.121

59 CAS 중재규칙 S 12,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 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 104면.

60 13.2.1 국제수준의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한 항고: 국제경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제경기대회의 참가에 의해 발생한 사안 또는 국제수준의 선수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반도핑 규칙위반 등에 따른 당해 결정은 CAS에만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CAS의 결정은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집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국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한편, CAS 중재규칙 제57조 제1항에서 재심사(Panel's review)제도를 두고 있다. CAS의 재심사는 심사의 범위 내에서 사실과 법을 심사할 전권을 갖는다. 여기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사는 전적으로 선수의 부담으로 이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중재판정취소의 관할 법원으로서의 스위스 연방법원

CAS의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스위스 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서 개최된 CAS 중재 판정뿐만 아니라 스위스 이외의 지역으로 올림픽 개최지에서 특별중재부에 의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스위스 연방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7년 Cañas 사건 이래 CAS의 판정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사례 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나, 2009년에 190건의 결정 중에 21건이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며, 2010년에는 159건 중에 18건으로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대략 통상적으로 CAS의 전체 사건 중 10%가 스위스 연방법원에 중재판정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 이래 2010년 말까지 5건만이 승소하였다. 대략 전체 사건수의 0.3% 정도가 승소하였고, 2009년과 2010년을 합쳐 1% 정도가 승소하였다.

또는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결정은 배타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다. 13.2.2 다른 선수 및 기타 관계자와 관계된 항고: 제13.2.1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결정은 국가도핑방지기구가 수립한 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단체에 항고할 수 있다.

V. 독일의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의 도핑사례의 분석

1. 사실관계

독일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여자선수인 Claudia Pechstein 은 1972년 2월 22일 동독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참가한 동계올림픽에서만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비롯하여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려 독일 빙상사에 남녀를 통틀어 큰 획을 그은 전무후무한 선수이다.⁶¹

Claudia Pechstein 은 2009년 2월에 국제빙상연맹에 의하여 2년간 자격정지가 된 사실이 같은 해 7월에 알려지게 되었다. 2009년 2월 노르웨이 함마르에서 개최된 세계 올라운드 빙속선수권대회 도중 제출한 망상적혈구(reticulocyte) 수치가 3.5%가 검출되어 국제빙상연맹의 허용치인 1.1%를 상회하여 혈액도핑으로 증거가 포착되었다. 이로써 Claudia Pechstein 은 간접적인 도핑 증거로 적발된 첫 번째 선수가 되었다.

Claudia Pechstein 은 자신에게 내려진 2년간의 자격정지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였으나 국제빙상연맹의 중요한 논거를 받아들였다. 고농도 망상적혈구 수치는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현저히 높이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도핑의 엄격한 징표라고 보았다. Claudia Pechstein 은 스위스 법원에 임시적 보전조치를 신청하였고, 스위스 연방법원은 2009년 12월 8일 임시적 보전조치에 대하여 2009년 12월 11일 솔트레이크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의 참가를 허용하였다. 다만, 본안에서는 스위스 연방법원은 2010년 9월 28일의 판결을 통해 CAS 결정에 대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2년의 자격정지가 확정되었다.⁶²

⁶¹ http://de.wikipedia.org/wiki/claudia_pechstein

⁶² BGH, Urteil vom 7. 6. 2016-KZR 6/15

여기에 그치지 않고 Claudia Pechstein 자신의 특이 체질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2014년 2월 26일 국제빙상연맹(ISU)과 독일 빙상협회(DES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CAS의 결정과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

CAS는 2009년 11월 25일 Claudia Pechstein에게 부과된 2년의 도핑제재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Claudia Pechstein은 스위스 연방법원에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제소하였으나, 2010년 2월 10일의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자 2010년 3월 4일에 항소하여 새로운 진단방법을 근거로 하여 도핑이 아니고 유전적인 특이체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2009년 11월 25일의 CAS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판정하라고 CAS에 되돌려 보내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연방법원은 이러한 Claudia Pechstein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2010년 9월 28일의 판결로 이를 기각하였다.

3. 독일 뮌헨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OLG München)의 판결

먼저 2014년 2월 26일 뮌헨 지방법원 제1부⁶³는 독일 국가대표 빙상선수인 Claudia Pechstein이 독일 빙상협회(DESG)와 국제빙상연맹(ISU)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서 사실상 선수의 합의 속에 포함된 중재 합의는 원고에게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지만, 법원은 도핑에 따른 자격정지가 정당한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CAS의 결정에 기속되고 따라서 자격정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독자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⁶⁴

⁶³ AZ 37 O28331/12

⁶⁴ http://de.wikipedia.org/wiki/Claudia_Pechstein

항소심인 독일 뮌헨 고등법원(OLG München)⁶⁵은 CAS 에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 체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Claudia Pechstein 이 경기에 출전을 합의(Athletenvereinbarung)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재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동 판결은 그 논거로서 원고로서는 중재합의에 자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소송을 배제할 시점에 구조적 불평등(strukturelles Ungleichgewicht)이 존재하고 있고, 독일빙상연맹과 국제빙상연맹은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4.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국제빙상연맹이 상고하였는바, 2016년 6월 7일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Claudia Pechstein 의 소송은 스위스법원에 제소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독일 민사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하였다.

스위스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3가지 핵심쟁점을 분명히 밝혔다. 첫째로, CAS 를 순수한 중재재판소로 파악하면서 CAS 의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절차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의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둘째로, 스포츠단체에 소속된 선수를 사실상 강제하는 중재합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식적인 스포츠경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법원에 제소하여 판사에 의하여 재판받는 절차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로써 강제적인 상태를 근거로 하여 체결된 중재합의가 아니므로 중재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스포츠단체의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Claudia Pechstein 이 제기한 국제빙상연맹(ISU)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⁶⁶

⁶⁵ OLG München Urteil vom 15. Januar 2015– U1110/14 kart

5.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제1심법원인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Claudia Pechstein 이 체결한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보면서도 도핑에 따른 자격정지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격정지가 적법한지는 CAS 에서 이를 배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 독일법원에서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인 뮌헨 고등법원(OLG)은 CAS 로의 중재합의는 강행적인 공정거래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뮌헨 고등법원(OLG)은 원고가 CAS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사법원에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인 뮌헨 고등법원(OLG)은 도핑에 따르는 자격정지에 대해 적법하게 판정한 CAS 결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독일 법원은 CAS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대법원(BGH)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laudia Pechstein 은 자발적으로 CAS 의 중재심판을 받아들였으므로, 국제 빙상연맹의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CAS 에 중재하도록 한 중재합의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독일의 경쟁법상의 의미에서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아울러 독일 연방대법원은 CAS 는 순수한 중재기구이며, 통일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통일적인 기준과 시간절차 등에 비추어 스포츠단체 뿐만 아니라 선수를 위해서도 장점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CAS 의 중재합의가 자발적인가 아니면 강제적인가

66 Peter W. Heermann, “Die Sportschiedsgerichtsbarkeit nach dem Pechstein – Urteil des BGH”, NWJ 31/2016, S. 2224.

의 문제이다.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재합의가 강제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핵심적 쟁점이다. 독일의 학자⁶⁷ 중에는 이처럼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기 위해 선수에게 중재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가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서명과 참여가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재합의의 서명을 거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더 이상 선수로서 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오히려 국내 법원과 CAS 사이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비로소 대안이 있게 된다.

Claudia Pechstein 사건에 있어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CAS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고, 도핑과 관련된 국제스포츠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닌 CAS의 중립성과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 시사점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국가대표선수가 국제스포츠 경기연맹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CAS에 제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재합의 조항이 진정한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올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선수가 자발적으로 CAS에 제소하기로 중재합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제스포츠연맹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중재합의가 강제적인 것으로 스포츠 단체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아직 우리의 경우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참고적으로 우리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

67 다른 학자를 대표하여, Udo Steiner, "Verhältnis von schiedsgerichtsbarkeit und staatlicher Gerichtsbarkeit", SchiedsVZ2013, 15(17)=SpuRt 2014, 2(3).

정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우월한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동응낙적인 스포츠 중재합의 역시 불공정한 거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의 계약에서 분쟁해결조항으로서 중재합의조항이 인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제경기단체와의 참가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정독립과 적정절차에 따른 스포츠중재가 CAS 에서 이루어지는 한 스포츠중재합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다.⁶⁸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국가 법원에 의한 제소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CAS 에 분쟁해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지만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비록 국제경기연맹이 사업자가 될지라도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박태환 선수가 도핑양성판정을 받아 국제 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대한체육회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에 대하여는 올림픽 출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수영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 제6호의 규정⁶⁹에 따라 2016년 리우올림픽의 출전제한 조치를 유지하자, 박태환 선수는 국내법원과 CAS 에 제소한 바 있다. 박태환 선수가 2016년 리우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2016. 7. 8. CAS 의 임시적 보전조치를 통해서 대한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⁷⁰

68 小川和茂, 前掲論文, 35-36面

69 수영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대한체육회 및 연맹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0 박태환 선수는 2016. 6. 29. 도핑제재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금 3년 동안 올림픽 출전을

우리의 경우 박태환 사건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올림픽의 선수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CAS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태환 선수가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도핑제재를 마친 후에 새로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중복적 제재가 수반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CAS의 관할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본안판결에 앞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규정의 무효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CAS에서 배타적으로 중재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도 CAS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CAS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따를 수 없다고 하다가 막상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CAS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의결하여, CAS의 임시적 보전조치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 지자 이를 수용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박태환 선수 측으로 하여금 국내법원의 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전향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CAS에 임시적 보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등 한국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한국수영연맹은 그야말로 혼선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⁷¹

다만,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여 중재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원에 제소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핑을 통한 제재가 끝난 후에 다시금 일정기간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비롯하여 대한체육회 산하의 종목별 국가대표선발규정은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과 거의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중적 제재(ne bis in idem)를 내용으로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급히 법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⁷²

금지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규정의 효력을 문제삼아 CAS에 한국올림픽조직위원회(KOC)와 한국수영연맹(KSF)를 상대로 올림픽 출전 임시조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CAS 항소중재부장은 2016. 7. 8. 박태환선수가 한국팀선수로 2016년 올림픽경기에 참전할 수 있다고 임시적 보전조치의 결정을 내렸다.

71 <http://www.ytn.co.kr> YTN 뉴스, 2016. 7. 8. 자 박태환 선수 보도기사

VI. 맺음말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오늘날 스포츠는 국제화와 세계화가 진행되어 스포츠 분쟁을 CAS에 의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CAS의 결정과는 별개로 국내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불복절차가 있는 것인지 국내 스포츠법학의 차원에서 깊게 다루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CAS의 분쟁해결 절차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종전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다가 운영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하였는바, 오늘날 스포츠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중재 판정을 위해 국내에 전문적인 스포츠중재기구를 다시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도핑과 관련한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반도핑법률의 제정 등 국내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상반기에 독일의 연방대법원에서 선고된 독일의 빙상선수인 Claudia Pechstein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CAS의 배타적 관할을 명확히 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16년부터 CAS에 반도핑 특별부로 권한을 이양받아 리우 올림픽에서 가동된 바 있다.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어, CAS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스포츠중재제도와 불복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법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72 장달영, “박태환 선수를 이중처벌해서는 안된다”, 미디어오늘, 2015. 2. 11. 자.

참고문헌

- 강병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 분쟁의 처리”,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
- 강병근,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스포츠 국제법이 과제- 국제스포츠 분쟁 해결제도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창간호, 2000.
- 김용섭,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글로벌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4호, 2015.
- 김용섭, “도핑규제의 법적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15호, 2010.
- 김용섭,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조정학회 제19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6. 6. 3.
- 김종호, “국제스포츠에 있어서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유럽 프로축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2호, 2011.
- 김 철, “IOC의 국제법상 지위”,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2010.
- 연기영,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의 설립방안”, 스포츠와 법 제5권, 2004.
-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2008.
-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2007.
- 채우석,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1호, 2009.
- 한희원, “현행 올림픽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즘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

한 규범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1호, 2010.

Burak Herguner, “The IOC as a transnational organization; Pradigm shift and its rising role in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ieview, 2012

Peter W. Heermann, “Die Sportschiedsgerichtsbarkeit nach dem Pechstein-Urteil des BGH”, NWJ 31/2016.

Jens Adolphsen, “Sportschiedsgerichtsbarkeit Anfang 2016, SpuRt 2/2016.

Jens Adolphsen (Hrsg.), Sportrecht in der Praxis, Verlag W. Kohlhammer, 2012.

Udo Steiner, “Das Verhältnis von Schiedsgerichtsbarkeit und staatlicher Gerichtsbarkeit?”, SpuRt 1/ 2014.

Urs Scherrer(Hrsg.), Einstweiliger Rechtsschutz im internationalen Sport, Nomos, 1999.

Ulrich Haas, Dirk-Reiner Martens, Sportrecht-Eine Einführung in die Praxis, 2011.

Georg Engelbrecht, “Zur Überprüfungsbefugnis des TAS nach Art. R57 Abs. 1 seiner Schiedsordnung”, SpuRt 5/2009.

Jan F. Orth, “Zur Zukunft der internationalen Schiedsgerichtsbarkeit im Sport- auch in Deutschland, SpuRt 6/ 2015.

Christian Krähe, “Anti-Doping-Regeln des IOC für die Olympischen Winterspiele Sotschi 2014”, SpuRt 6/2013.

Peter F. Schlosser, “Kompetenzfragen in der Sportsschiedsgerichtsbarkeit”,
SchiedsVZ, 2015.

Stephan Netzle, “Die Beschwerde gegen Schiedssprüche des CAS, SpuRt
1/2011.

OLG München: Zur Verletzung des kartellrechtlichen Missbrauchsverbots
durch eine Schiedsvereinbarung zugunsten des CAS, SchiedsVZ,
2015.

Richard H. McLaren, “CAS Doping Jurisprudence; What can we learn ?”,
[2006] I.S.L.R.

William Stenheimer, CAS Procedure and Practice, Sports Arbitration
Conference Seoul, 2016. 5. 2

小川和茂, “스포츠仲裁”, 法律時報 87卷 4号, 2015.

上柳 敏郎, “스포츠紛争の解決手段と仲裁制度における代理人の實務”, 法律のひ
ろば, 2015, 10.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In force as from 1 January 2016

Statutes of the Bodies Working for the Settlement of Sports-Related Disputes

A Joint Dispositions

S1 In order to resolve sports-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and mediation, two bodies are hereby created:

-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
-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The disputes to which a federation, association or other sports-related body is a party are a matter for arbitration pursuant to this Code, only insofar as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e bodies or a specific agreement so provide.

The seat of both ICAS and CAS is Lausanne, Switzerland.

S2 The purpose of ICAS is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and to safeguard the independence of CAS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It is also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CAS.

S3 CAS maintains a list of arbitrators and provides for the arbitral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onducted by Panels composed of one or three arbitrators.

CAS comprises of an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and an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CAS maintains a list of mediators and provides for the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s through mediation. The mediation procedure is governed by the CAS Mediation Rules.

B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

1 Composition

S4 ICAS is composed of twenty members, experienced jurists appointed in the following manner:

- a. four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IFs”), viz. three by the 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Fs (“ASOIF”) and one by the

Association of Winter Olympic IFs (“AIOWF”), chosen from within or outside their membership;

- b. four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Association of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s (“ANOC”), chosen from within or outside its membership;
- c. four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chosen from within or outside its membership;
- d. four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twelve members of ICAS listed above, after appropriate consultation with a view to safeguarding the interests of the athletes;
- e. four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sixteen members of ICAS listed above, chosen from among personalities independent of the bodies designating the other members of the ICAS.

- S5 The members of ICAS are appointed for one or several renewable period(s) of four years. Such nominations shall take place during the last year of each four-year cycle.

Upon their appointment, the members of ICAS sign a declaration undertaking to exercise their function personally, with total objectivity and independence, in conformity with this Code. They are, in particular, bound by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provided in Article R43.

Members of the ICAS may not appear on the list of CAS arbitrators or mediators nor act as counsel to any party in proceedings before the CAS.

If a member of the ICAS resigns, dies or is prevented from carrying out her/his functions for any other reason, she/he is replaced, for the remaining period of her/his mandate,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pplicable to her/his appointment.

ICAS may grant the title of Honorary Member to any former ICAS member who has made an exception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CAS or CAS. The title of Honorary Member may be granted posthumously.

2 Attributions

- S6 ICAS exercises the following functions:

1. It adopts and amends this Code;
2. It elects from among its members for one or several renewable period(s) of four years:
 - the President,
 - two Vice-Presidents who shall replace the President if necessary, by order of seniority in age; if the office of President becomes vacant, the senior Vice-President shall exercise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t until the election of a new President,
 - the President of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and the President of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of the CAS,
 - the deputies of the two Division Presidents who can replace them in the event they are prevented from carrying out their functions;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of the Vice-Presidents shall take plac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OC, the ASOIF, the AIOWF and the ANOC.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Presidents, Division Presidents and their deputies shall take place at the ICAS meeting following the appointment of the ICAS members for the forthcoming period of four years.

3. It appoints the arbitrators who constitute the list of CAS arbitrators and the mediators who constitute the list of CAS mediators; it can also remove them from those lists;
4. It resolves challenges to and removals of arbitrators, and performs any other functions identified in the Procedural Rules;
5. It is responsible for the financing of CAS. For such purpose, *inter alia*:
 - 5.1 it receives and manages the funds allocated to its operations;
 - 5.2 it approves the ICAS budget prepared by the CAS Court Office;
 - 5.3 it approves the annual accounts of CAS prepared by the CAS Court Office;
6. It appoints the CAS Secretary General and may terminate her/his duties upon proposal of the President;
7. It supervises the activities of the CAS Court Office;
8. It provides for regional or local, permanent or *ad hoc* arbitration;
9. It may create a legal aid fund to facilitate access to CAS arbitration for individual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and may create CAS legal ai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10. It may take any other action which it deem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ties and to promote the settlement of sports-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and mediation.

- S7 ICAS exercises its functions itself, or through its Board, consisting of the President, the two Vice-Presidents of the ICAS, the President of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and the President of the CAS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The ICAS may not delegate to the Board the functions listed under Article S6, paragraphs 1, 2, 5.2 and 5.3.

3 Operation

- S8 1. ICAS meets whenever the activity of CAS so requires, but at least once a year.
- A quorum at meetings of the ICAS consists of at least half its members. . Decisions are taken during meetings or by correspondence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Abstentions and blank or spoiled votes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alculation of the required majority. Voting by proxy is not allowed. Voting is held by secret ballot if the President so decides or upon the request of at least a quarter of the members present. The President has a casting vote in the event of a tie.
2. Any modification of this Code requires a majority of two-thirds of the ICAS member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S8.1 apply.

3. Any ICAS member is eligible to be a candidate for the ICAS Presidency. Registration as a candidate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il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no later than four months prior to the election meeting.

The election of the ICAS President shall take place at the ICAS meeting following the appointment of the ICAS members for a period of four years. The quorum for such election is three-quarters of the ICAS members. The President is elected by an absolut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If there is more than one candidate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 successive rounds of voting shall be organized. If no absolute majority is attained, the candidate having the least number of votes in each round shall be eliminated. In the case of a tie among two or more candidates, a vote between those candidates shall be organized and the candidate having the least number of votes shall be eliminated. If following this subsequent vote, there is still a tie, the candidate(s) senior in age is(are) selected.

If a quorum is not present or if the last candidate in the voting rounds, or the only candidate, does not obtain an absolute majority in the last round of voting, the current president shall remain in her/his position until a new election can be held. The new election shall be held within four months of the unsuccessful elec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with the exception that the President is elected by a simple majority when two candidates or less remain in competition.

The election is held by secret ballot. An election by correspondence is not permitted.

4. The CAS Secretary General takes part in the decision-making with a consultative voice and acts as Secretary to ICAS.

S9 The President of ICAS is also President of CAS. She/he is responsible for the ordinary administrative tasks pertaining to the ICAS.

S10 The Board of ICAS meets at the invitation of the ICAS President.

The CAS Secretary General takes part in the decision-making with a consultative voice and acts as Secretary to the Board.

A quorum of the Board consists of three of its members. Decisions are taken during meetings or by correspondence by a simple majority of those voting; the President has a casting vote in the event of a tie.

S11 A member of ICAS or the Board may be challenged when circumstances allow legitimate doubt to be cast on her/his independence *vis-à-vis* a party to an arbitration which must be the subject of a decision by ICAS or the Board pursuant to Article S6, paragraph 4. She/he shall pre-emptively disqualify herself/himself when the subject of a decision is an arbitration procedure in which a sports-related body to which she/he

belongs appears as a party or in which a member of the law firm to which she/he belongs is an arbitrator or counsel.

ICAS, with the exception of the challenged member, shall determine the process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 for challenge.

The disqualified member shall not take part in any deliberations concerning the arbitration in question and shall not receive any information on the activities of ICAS and the Board concerning such arbitration.

C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1 Mission

S12 CAS constitutes Panels which have the responsibility of resolving disputes arising in the context of sport by arbitration and/or mediation pursuant to the Procedural Rules (Articles R27 et seq.).

For such purpose, CAS provides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effects the constitution of Panels and oversees the efficient conduct of the proceedings.

The responsibilities of Panels are, *inter alia*:

- a. to resolve the disputes referred to them through ordinary arbitration ;
- b. to resolve through the appeals arbitration procedure disputes concerning the decisions of federations, associations or other sports-related bodies, insofar as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e said sports-related bodies or a specific agreement so provide
- c. to resolve the disputes that are referred to them through mediation.

2 Arbitrators and mediators

S13 The personalities designated by ICAS, pursuant to Article S6, paragraph 3, appear on the CAS list for one or several renewable period(s) of four years. ICAS reviews the complete list every four years; the new list enters into force on 1 January of the year following its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not less than one hundred fifty arbitrators and fifty mediators.

S14 The ICAS shall appoint personalities to the list of CAS arbitrators with appropriate legal training, recognized competence with regard to sports law and/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 good knowledge of sport in general and a good command of at least one

CAS working language, whose names and qualifications ar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ICAS, including by the IOC, the IFs, the NOCs and by the athletes' commissions of the IOC, IFs and NOCs. ICAS may identify the arbitrators having a specific expertise to deal with certain types of disputes.

The ICAS shall appoint personalities to the list of CAS mediators with experience in mediation and a good knowledge of sport in general.

S15 ICAS shall publish such lists of CAS arbitrators and mediators, as well as all subsequent modifications thereof.

S16 When appointing arbitrators and mediators, the ICAS shall consider continental representation and the different juridical cultures.

S1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ocedural Rules (Articles R27 et seq.), if a CAS arbitrator resigns, dies or is unable to carry out her/his functions for any other reason, she/he may be replaced, for the remaining period of her/his mandate,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applicable to her/his appointment.

S18 Arbitrators who appear on the CAS list may serve on Panels constituted by either of the CAS Divisions.

Upon their appointment, CAS arbitrators and mediators shall sign an official declaration undertaking to exercise their functions personally with total objectivity,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CAS arbitrators and mediators may not act as counsel for a party before the CAS.

S19 CAS arbitrators and mediators are bound by the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provided for in the Code and in particular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any facts or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proceedings conducted before CAS.

ICAS may remove an arbitrator or a mediator from the list of CAS members, temporarily or permanently, if she/he violates any rule of this Code or if her/his action affects the reputation of ICAS and/or CAS.

3 Organisation of the CAS

S20 The CAS is composed of two divisions,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and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 a.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constitutes Panels, whose responsibility is to resolve disputes submitted to the ordinary procedure, and performs, through the intermediary of its President or her/his deputy, all other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efficient running of the proceedings pursuant to the Procedural Rules (Articles R27 et seq.).
- b.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constitutes Panels, whose responsibility is to resolve disputes concerning the decisions of federations, associations or other sports-related bodies insofar as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e said sports-related bodies or a specific agreement so provide. It performs, through the intermediary of its President or her/his deputy, all other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efficient running of the proceedings pursuant to the Procedural Rules (Articles R27 et seq.).

Arbitration proceedings submitted to CAS are assigned by the CAS Court Office to the appropriate Division. Such assignment may not be contested by the parties nor be raised by them as a cause of irregularity. In the event of a change of circumstances during the proceedings, the CAS Court Offic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anel, may assign the arbitration to another Division. Such re-assignment shall not affect the constitution of the Panel nor the validity of any proceedings, decisions or orders prior to such re-assignment.

The CAS mediation system operates pursuant to the CAS Mediation Rules.

- S21 The President of either Division may be challenged if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legitimate doubts with regard to her/his independence *vis-à-vis* one of the parties to an arbitration assigned to her/his Division. She/he shall pre-emptively disqualify herself/himself if, in arbitration proceedings assigned to her/his Division, one of the parties is a sports-related body to which she/he belongs, or if a member of the law firm to which she/he belongs is acting as arbitrator or counsel.

ICAS shall determine the procedure with respect to any challenge. The challenged President shall not participate in such determination.

If the President of a Division is challenged, the functions relating to the efficient running of the proceedings conferred upon her/him by the Procedural Rules (Articles R27 et seq.), shall be performed by her/his deputy or by the CAS President, if the deputy is also challenged. No disqualified person shall receive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CAS regard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giving rise to her/his disqualification.

- S22 CAS includes a Court Office composed of the Secretary General and one or more Counsel, who may represent the Secretary General when required.

The CAS Court Office performs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is Code.

D Miscellaneous Provisions

- S23 These Statutes are supplemented by the Procedural Rules adopted by ICAS.
- S24 The English text and the French text are authentic. In the event of any divergence, the French text shall prevail.
- S25 These Statutes may be amended by decision of the ICAS pursuant to Article S8.
- S26 These Statutes and Procedural Rules come into force by the decision of ICAS, taken by a two-thirds majority.

Procedural Rules

A General Provisions

R27 Application of the Rules

These Procedural Rules apply whenever the parties have agreed to refer a sports-related dispute to CAS. Such reference may arise out of an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in a contract or regulations or by reason of a later arbitration agreement (ordinary arbitration proceedings) or may involve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rendered by a federation, association or sports-related body where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such bodies, or a specific agreement provide for an appeal to CAS (appeal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disputes may involve matters of principle relating to sport or matters of pecuniary or other interests relating to the practice or the development of sport and may include, more generally, any activity or matter related or connected to sport.

R28 Seat

The seat of CAS and of each Arbitration Panel ("Panel") is Lausanne, Switzerland. However, should circumstances so warrant, and after consultation with all parties, the President of the Panel may decide to hold a hearing in another place and may issue the appropriate directions related to such hearing.

R29 Language

The CAS working languages are French and English. In the absence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President of the Panel or, if she/he has not yet been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shall select one of these two languages a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t the outset of the procedure, taking into account all relevant circumstances. Thereafter,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exclusively in that language, unless the parties and the Panel agree otherwise.

The parties may request that a language other than French or English be selected, provided that the Panel and the CAS Court Office agree. If agreed, the CAS Court Office determines with the Panel the conditions related to the choice of the language; the Panel may order that the parties bear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f a hearing is to be held, the Panel may allow a party to use a language other than that chosen for the arbitration, on condition that it provides, at its own cost, interpretation into and from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arbitration.

The Panel or,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the Panel, the Division President may order that all documents submitted in languages other than that of the proceedings be filed together with a certified translation in the language of the proceedings.

R30 Representation and Assistance

The parties may be represented or assisted by persons of their choice. The names, addresses, electronic mail addresses, telephone and facsimile numbers of the persons representing the partie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AS Court Office, the other party and the Panel after its formation. Any party represented by an attorney or other person shall provide written confirmation of such representation to the CAS Court Office.

R31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All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that CAS or the Panel intend for the parties shall be made through the CAS Court Office. The notifications and communications shall be sent to the address shown in the arbitration request or the statement of appeal, or to any other address specified at a later date.

All arbitration awards, orders, and other decisions made by CAS and the Panel shall be notified by courier and/or by facsimile and/or by electronic mail but at least in a form permitting proof of receipt.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statement of appeal and any other written submissions, printed or saved on digital medium, must be filed by courier delivery to the CAS Court Office by the parties in as many copies as there are other parties and arbitrators, together with one additional copy for the CAS itself, failing which the CAS shall not proceed. If they are transmitted in advance by facsimile or by electronic mail at the official CAS email address (procedures@tas-cas.org), the filing is valid upon receipt of the facsimile or of the electronic mail by the CAS Court Office provided that the written submission and its copies are also filed by courier within the first subsequent business day of the relevant time limit, as mentioned above.

Filing of the above-mentioned submissions by electronic mail is permitted under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CAS guidelines on electronic filing.

The exhibits attached to any written submissions may be sent to the CAS Court Office by electronic mail, provided that they are listed and that each exhibit can be clearly identified; the CAS Court Office may then forward them by the same means. Any other communications from the parties intended for the CAS Court Office or the Panel shall be sent by courier, facsimile or electronic mail to the CAS Court Office.

R32 Time limits

The time limits fixed under this Code shall begin from the day after that on which notification by the CAS is received. Official holidays and non-working days ar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ime limits. The time limits fixed under this Code are respected if the communications by the parties are sent before midnight, time of the location where the notification has to be made, on the last day on which such time

limits expire. If the last day of the time limit is an official holiday or a non-business day in the country where the notification is to be made, the time limit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 first subsequent business day.

Upon application on justified grounds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or parties), either the President of the Panel or, if she/he has not yet been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may extend the time limits provided in these Procedural Rules, with the exception of the time limit for the filing of the statement of appeal, if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and provided that the initial time limit has not already expired. With the exception of the time limit for the statement of appeal, any request for a first extension of time of a maximum of five days can be decided by the CAS Secretary General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ther party (-ies).

The Panel or, if it has not yet been constituted,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may, upon application on justified grounds, suspend an ongoing arbitration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R33 Independence and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Every arbitrator shall be and remain impartial and independent of the parties and shall immediately disclose any circumstances which may affect her/his independence with respect to any of the parties.

Every arbitrator shall appear on the list drawn up by the ICA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which are part of this Code, shall have a good command of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shall be available as required to complete the arbitration expeditiously.

R34 Challenge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if the circumstances give rise to legitimate doubts over her/his independence or over her/his impartiality. The challenge shall be brought within seven days after the ground for the challenge has become known.

Challeng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ICAS Board, which has the discretion to refer a case to ICAS. The challenge of an arbitrator shall be lodged by the party raising it, in the form of a petition setting forth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challenge, which shall be sent to the CAS Court Office. The ICAS Board or ICAS shall rule on the challenge after the other party (or parties), the challenged arbitrator and the other arbitrators, if any, have been invited to submit written comments. Such comments shall be communicated by the CAS Court Office to the parties and to the other arbitrators, if any. The ICAS Board or ICAS shall give brief reasons for its decision and may decide to publish it.

R35 Removal

An arbitrator may be removed by the ICAS if she/he refuses to or is prevented from carrying out her/his duties or if she/he fails to fulfil her/his duties pursuant to this Code within a reasonable time. ICAS may exercise such power through its Board. The Board shall invite the parties, the arbitrator in question and the other arbitrators, if any, to submit written comments and shall give brief reasons for its decision. Removal of an arbitrator cannot be requested by a party.

R36 Replacement

In the event of resignation, death, removal or successful challenge of an arbitrator, such arbitrator shall be re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her/his appointment. If, within the time limit fixed by the CAS Court Office, the Claimant/Appellant does not appoint an arbitrator to replace the arbitrator it had initially appointed, the arbitration shall not be initiated or, in the event it has been already initiated, shall be terminate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or otherwise decided by the Panel, the proceedings shall continue without repetition of any aspect thereof prior to the replacement.

R37 Provisional and Conservatory Measures

No party may apply for provisional or conservatory measures under these Procedural Rules before all internal legal remedies provided for in the rules of the federation or sports-body concerned have been exhausted.

Upon filing of the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the Applicant shall pay a non-refundable Court Office fee of Swiss francs 1,000.—, without which CAS shall not proceed. The CAS Court Office fee shall not be paid again upon filing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or of the statement of appeal in the same procedure.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prior to the transfer of the file to the Panel, or thereafter, the Panel may, upon application by a party, make an order for provisional or conservatory measures. In agreeing to submit any dispute subject to the ordinary arbitration procedure or to the appeal arbitration procedure to these Procedural Rules, the parties expressly waive their rights to request any such measures from state authorities or tribunals.

Should 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measures be filed,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or the Panel shall invite the other party (or parties) to express a position within ten days or a shorter time limit if circumstances so require.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or the Panel shall issue an order on an expedited basis and shall first rule on the *prima facie* CAS jurisdiction. The Division President may terminate the arbitration procedure if she/he rules that the CAS clearly has no jurisdiction. In cases of utmost urgency,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prior to the transfer of the file to the Panel, or thereafter the President of the Panel may issue an order upon mere presentation of the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 opponent is subsequently heard.

When deciding whether to award preliminary relief,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or the Panel, as the case may be, shall consider whether the relief is necessary to protect

the applicant from irreparable harm, the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of the claim, and whether the interests of the Applicant outweigh those of the Respondent(s).

The procedure for provisional measures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already granted, if any, are automatically annulled if the party requesting them does not file a related request for arbitration within 10 days following the filing of the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ordinary procedure) or any statement of appeal within the time limit provided by Article R49 of the Code (appeals procedure). Such time limits cannot be extended.

Provisional and conservatory measures may be made conditional upon the provision of security.

B Speci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Ordinary Arbitration Procedure

R38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y intending to submit a matter to arbitration under these Procedural Rules (Claimant) shall file a request with the CAS Court Office containing:

- the name and full address of the Respondent(s);
-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legal argument, including a statement of the issue to be submitted to the CAS for determination;
- its request for relief;
- a copy of the contract contai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of any document providing for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Procedural Rules;
- any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and choice of the arbitrator(s); if the relevant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s for three arbitrators, the name of the arbitrator from the CAS list of arbitrators chosen by the Claimant.

Upon filing its request, the Claimant shall pay the Court Office fee provided in Article R64.1.

If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are not fulfilled when the request for arbitration is filed, the CAS Court Office may grant a single short deadline to the Claimant to complete the request, failing which the CAS Court Office shall not proceed.

R39 Initiation of the Arbitration by CAS and Answer – CAS Jurisdiction

Unless it is clear from the outset that there is no arbitration agreement referring to CAS, the CAS Court Office shall take all appropriate actions to set the arbitration in motion. It shall communicate the request to the Respondent, call upon the parties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law applicable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and set time limits for the Respondent to submit any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and choice of the arbitrator(s) from the CAS list, as well as to file an answer to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answer shall contain:

- a brief statement of defence;
- any defence of lack of jurisdiction;
- any counterclaim.

The Respondent may request that the time limit for the filing of the answer be fixed after the payment by the Claimant of its share of the advance of costs provided by Article R64.2 of this Code.

The Panel shall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irrespective of any legal action already pending before a State court or another arbitral tribunal relating to the same object between the same parties, unless substantive grounds require a suspension of the proceedings.

When an objection to CAS jurisdiction is raised, the CAS Court Office or the Panel, if already constituted, shall invite the parties to file written submissions on jurisdiction. The Panel may rule on its jurisdiction either in a preliminary decision or in an award on the merits.

Where a party files a request for arbitration related to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facts similar to those which are the subject of a pending ordinary procedure before CAS, the President of the Panel, or if she/he has not yet been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may,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decide to consolidate the two procedures.

R40 Formation of the Panel

R40.1 Number of Arbitrators

The Panel is composed of one or three arbitrators.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does not specify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determine the number,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Division President may choose to appoint a Sole arbitrator when the Claimant so requests and the Respondent does not pay its share of the advance of costs within the time limit fixed by the CAS Court Office.

R40.2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The parties may agree on the method of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s from the CAS list.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the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If, by virtu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a sole arbitrator is to be appointed, the parties may select her/him by mutual agreement within a time limit of fifteen days set by the CAS Court Office upon receipt

of the request. In the absence of agreement within that time limit,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proceed with the appointment.

If, by virtu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three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the Claimant shall nominate its arbitrator in the request or within the time limit set in the decision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failing which the request for arbitration is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The Respondent shall nominate its arbitrator within the time limit set by the CAS Court Office upon receipt of the request. In the absence of such appointment,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proceed with the appointment in lieu of the Respondent.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select the President of the Panel by mutual agreement within a time limit set by the CAS Court Office. Failing agreement within that time limit,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appoint the President of the Panel.

R40.3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 and Transfer of the File

An arbitrator nominated by the parties or by other arbitrators shall only be deemed appointed after confirmation by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who shall ascertain that each arbitrator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R33.

Once the Panel is formed, the CAS Court Office takes notice of the formation and transfers the file to the arbitrators, unless none of the parties has paid an advance of costs provided by Article R64.2 of the Code.

An *ad hoc* clerk independent of the parties may be appointed to assist the Panel. Her/his fees shall be included in the arbitration costs.

R41 Multiparty Arbitration

R41.1 Plurality of Claimants / Respondents

I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names several Claimants and/or Respondents, CAS shall proceed with the formation of the Panel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arbitrators and the method of appointment agreed by all parties. In the absence of agreement,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decide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0.1.

If a sole arbitrator is to be appointed, Article R40.2 shall apply. If three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and there are several Claimants, the Claimants shall jointly nominate an arbitrator. If three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and there are several Respondents, the Respondents shall jointly nominate an arbitrator. In the absence of such a joint nomination,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proceed with the particular appointment.

If there are three or more parties with divergent interests, both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the absence of

agreement, the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0.2.

In all cases, the arbitrators shall select the President of the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0.2.

R41.2 Joinder

If a Respondent intends to cause a third party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it shall so state in its answer, together with the reasons therefor, and file an additional copy of its answer. The CAS Court Office shall communicate this copy to the person whose participation is requested and fix a time limit for such person to state its position on its participation and to submit a response pursuant to Article R39. It shall also fix a time limit for the Claimant to express its position on the participation of the third party.

R41.3 Intervention

If a third party wishes to participate as a party to the arbitration, it shall file an application to this effect with the CAS Court Office, together with the reasons therefor within 10 days after the arbitration has become known to the intervenor, provided that such application is filed prior to the hearing, or prior to the closing of the evidentiary proceedings if no hearing is held. The CAS Court Office shall communicate a copy of this application to the parties and fix a time limit for them to express their position on the participation of the third party and to file, to the extent applicable, an answer pursuant to Article R39.

R41.4 Joint Provisions on Joinder and Intervention

A third party may only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if it is boun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if it and the other parties agree in writing.

Upon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set in Articles R41.2 and R41.3,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or the Panel, if it has already been appointed, shall decide on the participation of the third party,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the *prima facie* existenc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s contemplated in Article R39.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decision of the Panel on the same matter.

If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accepts the participation of the third party, CAS shall proceed with the formation of the Panel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arbitrators and the method of appointment agreed by all parties. In the absence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decide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0.1. If a sole arbitrator is to be appointed, Article R40.2 shall apply. If three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the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and shall nominate the President of the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0.2.

Regardless of the decision of the Panel on the participation of the third party, the formation of the Panel cannot be challenged. In the event that the Panel accepts the participation, it shall, if required, issue related procedural directions.

After consideration of submissions by all parties concerned, the Panel shall determine the status of the third party and its rights in the procedure.

After consideration of submissions by all parties concerned, the Panel may allow the filing of *amicus curiae* brief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may fix.

R42 Conciliation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before the transfer of the file to the Panel, and thereafter the Panel may at any time seek to resolve the dispute by conciliation. Any settlement may be embodied in an arbitral award rendered by consent of the parties.

R43 Confidentiality

Proceedings under these Procedural Rules are confidential. The parties, the arbitrators and CAS undertake not to disclose to any third party any facts or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ispute or the proceedings without the permission of CAS. Awards shall not be made public unless all parties agree or the Division President so decides.

R44 Procedure before the Panel

R44.1 Written Submissions

The proceedings before the Panel comprise written submissions and, in principle, an oral hearing. Upon receipt of the file and if necessary, the President of the Panel shall issue dire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written submissions. As a general rule, there shall be one statement of claim, one response and, if the circumstances so require, one reply and one second response. The parties may, in the statement of claim and in the response, raise claims not contained in the request for arbitration and in the answer to the request. Thereafter, no party may raise any new claim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Together with their written submissions, the parties shall produce all written evidence upon which they intend to rely. After the exchange of the written submissions, the parties shall not be authorized to produce further written evidence, except by mutual agreement, or if the Panel so permits, on the basi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their written submissions, the parties shall list the name(s) of any witnesses, whom they intend to call, including a brief summary of their expected testimony, and the name(s) of any experts, stating their area of expertise, and shall state any other

evidentiary measure which they request. Any witness statements shall be filed together with the parties' submissions, unless the President of the Panel decides otherwise.

If a counterclaim and/or jurisdictional objection is filed, the CAS Court Office shall fix a time limit for the Claimant to file an answer to the counterclaim and/or jurisdictional objection.

R44.2 Hearing

If a hearing is to be held, the President of the Panel shall issue directions with respect to the hearing as soon as possible and set the hearing date. As a general rule, there shall be one hearing during which the Panel hears the parties, any witnesses and any experts, as well as the parties' final oral arguments, for which the Respondent is heard last.

The President of the Panel shall conduct the hearing and ensure that the statements made are concise and limited to the subject of the written presentations, to the extent that these presentations are relevant.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hearings are not public. Minutes of the hearing may be taken. Any person heard by the Panel may be assisted by an interpreter at the cost of the party which called such person.

The parties may only call such witnesses and experts which they have specified in their written submissions. Each party is responsible for the availability and costs of the witnesses and experts it has called.

The President of the Panel may decide to conduct a hearing by video-conference or to hear some parties, witnesses and experts via tele-conference or video-confere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he/he may also exempt a witness or expert from appearing at the hearing if the witness or expert has previously filed a statement.

The Panel may limit or disallow the appearance of any witness or expert, or any part of their testimony, on the grounds of irrelevance.

Before hearing any witness, expert or interpreter, the Panel shall solemnly invite such person to tell the truth, subject to the sanctions of perjury.

Once the hearing is closed, the parties shall not be authorized to produce further written pleadings, unless the Panel so orders.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the Panel may, if it deems itself to be sufficiently well informed, decide not to hold a hearing.

R44.3 Evidentiary Proceedings Ordered by the Panel

A party may request the Panel to order the other party to produce documents in its custody or under its control. The party seeking such production shall demonstrate that such documents are likely to exist and to be relevant.

If it deems it appropriate to supplement the presentations of the parties, the Panel may at any time order the production of additional documents or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appoint and hear experts, and proceed with any other procedural step. The Panel may order the parties to contribute to any additional costs related to the hearing of witnesses and experts.

The Panel shall consult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and terms of reference of any expert. The expert shall be independent of the parties. Before appointing her/him, the Panel shall invite her/him to immediately disclose any circumstances likely to affect her/his independence with respect to any of the parties.

R44.4 Expedited Procedure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he Division President or the Panel may proceed in an expedited manner and may issue appropriate directions therefor.

R44.5 Default

If the Claimant fails to submit its statement of cla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4.1 of the Code, the request for arbit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If the Respondent fails to submit its respon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R44.1 of the Code, the Panel may nevertheless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and deliver an award.

If any of the parties, or its witnesses, has been duly summoned and fails to appear at the hearing, the Panel may nevertheless proceed with the hearing and deliver an award.

R45 Law Applicable to the Merits

The Panel shall decid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 or, in the absence of such a choice, according to Swiss law. The parties may authorize the Panel to decide *ex aequo et bono*.

R46 Award

The award shall be made by a majority decision, or, in the absence of a majority, by the President alone. The award shall be written, dated and signed.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it shall briefly state reasons. The sol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Panel or the signatures of the two co-arbitrators, if the President does not sign, shall suffice. Before the award is signed, it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AS Secretary General who may make rectifications of pure form and may also draw the attention of the Panel to fundamental issues of principle. Dissenting opinions are not recognized by the CAS and are not notified.

The Panel may decide to communicate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to the parties, prior to delivery of the reasons. The award shall be enforceable from such notification of the operative part by courier, facsimile and/or electronic mail.

The award, notified by the CAS Court Office,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subject to recourse avail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pursuant to Swiss Law within 30 days from the notification of the original award. It may not be challenged by way of an action for setting aside to the extent that the parties have no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business establishment in Switzerland and that they have expressly excluded all setting aside proceedings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in a subsequent agreement, in particular at the outset of the arbitration.

C Speci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Appeal Arbitration Procedure

R47 Appeal

An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a federation, association or sports-related body may be filed with CAS if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e said body so provide or if the parties have concluded a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 and if the Appellant has exhausted the legal remedies available to it prior to the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at body.

An appeal may be filed with CAS against an award rendered by CAS acting as a first instance tribunal if such appeal has been expressly provided by the rules of the federation or sports-body concerned.

R48 Statement of Appeal

The Appellant shall submit to CAS a statement of appeal containing:

- the name and full address of the Respondent(s);
- a copy of the decision appealed against;
- the Appellant's request for relief;
- the nomination of the arbitrator chosen by the Appellant from the CAS list, unless the Appellant requests the appointment of a sole arbitrator;
- if applicable, an application to stay the execution of the decision appealed against, together with reasons;
- a copy of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r the specific agreement providing for appeal to CAS.

Upon filing the statement, the Appellant shall pay the CAS Court Office fee provided for in Article R64.1 or Article R65.2.

If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are not fulfilled when the statement of appeal is filed, the CAS Court Office may grant a one-time-only short deadline to the Appellant to complete its statement of appeal, failing receipt of which within the deadline, the CAS Court Office shall not proceed.

R49 Time limit for Appeal

In the absence of a time limit set in the statutes or regulations of the federation, association or sports-related body concerned, or in a previous agreement, the time limit for appeal shall be twenty-one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decision appealed against. The Division President shall not initiate a procedure if the statement of appeal is, on its face, late and shall so notify the person who filed the document. When a procedure is initiated, a party may request the Division President or the President of the Panel, if a Panel has been already constituted, to terminate it if the statement of appeal is late. The Division President or the President of the Panel renders her/his decision after considering any submission made by the other parties.

R50 Number of Arbitrators

The appeal shall be submitted to a Panel of three arbitrators,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a Panel composed of a sole arbitrator or, in the absence of an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decides to submit the appeal to a sole arbitrator,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whether or not the Respondent has paid its share of the advance of costs within the time limit fixed by the CAS Court Office.

When two or more cases clearly involve the same issues, the President of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may invite the parties to agree to refer these cases to the same Panel; failing an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decide.

R51 Appeal Brief

Within ten days following the expiry of the time limit for the appeal, the Appellant shall file with the CAS Court Office a brief stating the facts and legal arguments giving rise to the appeal, together with all exhibits and specification of other evidence upon which it intends to rely. Alternatively, the Appellant shall inform the CAS Court Office in writing within the same time limit that the statement of appeal shall be considered as the appeal brief. The appeal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if the Appellant fails to meet such time limit.

In its written submissions, the Appellant shall specify the name(s) of any witnesses, including a brief summary of their expected testimony, and the name(s) of any experts, stating their area of expertise, it intends to call and state any other evidentiary measure which it requests. The witness statements, if any, shall be filed together with the appeal brief, unless the President of the Panel decides otherwise.

R52 Initiation of the Arbitration by the CAS

Unless it appears from the outset that there is clearly no arbitration agreement referring to CAS, that the agreement is clearly not related to the dispute at stake or that the internal legal remedies available to the Appellant have clearly not been exhausted, CAS shall take all appropriate actions to set the arbitration in motion. The CAS Court Office shall communicate the statement of appeal to the Respondent, and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proceed with the formation of the Panel in accordance with Articles R53 and R54. If applicable, she/he shall also decide promptly on any application for a stay or for interim measures.

The CAS Court Office shall send a copy of the statement of appeal and appeal brief to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challenged decision, for information.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Panel or, if it has not yet been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may proceed in an expedited manner and shall issue appropriate directions for such procedure.

Where a party files a statement of appeal in connection with a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a pending appeal before CAS, the President of the Panel, or if she/he has not yet been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may decide, after inviting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to consolidate the two procedures.

R53 Nomination of Arbitrator by the Respondent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a Panel composed of a sole arbitrator or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considers that the appeal should be submitted to a sole arbitrator, the Respondent shall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ten days after receipt of the statement of appeal. In the absence of a nomination within such time limit,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make the appointment.

R54 Appointment of the Sole Arbitrator or of the President and Confirmation of the Arbitrators by CAS

If, by virtue of the parties' agreement or of a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a sole arbitrator is to be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appoint the sole arbitrator upon receipt of the motion for appeal or as soon as a decision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has been rendered.

If three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appoint the President of the Panel following nomination of the arbitrator by the Respondent and after having consulted the arbitrators. The arbitrators nominated by the parties shall only be deemed appointed after confirmation by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Before proceeding with such confirmation, the President of the Division shall ensure that the arbitrators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R33.

Once the Panel is formed, the CAS Court Office takes notice of the formation of the Panel and transfers the file to the arbitrators, unless none of the parties has paid an advance of cos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R64.2 of the Code.

An *ad hoc* clerk, independent of the parties, may be appointed to assist the Panel. Her/his fees shall be included in the arbitration costs.

Article R4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appeals arbitration procedure, except that the President of the Panel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Appeals Division.

R55 Answer of the Respondent – CAS Jurisdiction

Within twenty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grounds for the appeal, the Respondent shall submit to the CAS Court Office an answer containing:

- a statement of defence;
- any defence of lack of jurisdiction;
- any exhibits or specification of other evidence upon which the Respondent intends to rely;
- the name(s) of any witnesses, including a brief summary of their expected testimony; the witness statements, if any, shall be filed together with the answer, unless the President of the Panel decides otherwise;
- the name(s) of any experts it intends to call, stating their area of expertise, and state any other evidentiary measure which it requests.

If the Respondent fails to submit its answer by the stated time limit, the Panel may nevertheless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and deliver an award.

The Respondent may request that the time limit for the filing of the answer be fixed after the payment by the Appellant of its share of the advance of cos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R64.2.

The Panel shall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It shall rule on its jurisdiction irrespective of any legal action already pending before a State court or another arbitral tribunal relating to the same object between the same parties, unless substantive grounds require a suspension of the proceedings.

When an objection to CAS jurisdiction is raised, the CAS Court Office or the Panel, if already constituted, shall invite the parties to file written submissions on the matter of CAS jurisdiction. The Panel may rule on its jurisdiction either in a preliminary decision or in an award on the merits.

R56 Appeal and answer complete – Conciliation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or the President of the Panel orders otherwise on the basi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parties shall not be authorized to supplement or amend their requests or their argument, to produce new exhibits, or to specify further evidence on which they intend to rely after the submission of the appeal brief and of the answer.

The Panel may at any time seek to resolve the dispute by conciliation. Any settlement may be embodied in an arbitral award rendered by consent of the parties.

R57 Scope of Panel's Review – Hearing

The Panel has full power to review the facts and the law. It may issue a new decision which replaces the decision challenged or annul the decision and refer the case back to the previous instance. The President of the Panel may request communication of the file of the federation, association or sports-related body, whose decision is the subject of the appeal. Upon transfer of the CAS file to the Panel, the President of the Panel shall issue dire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hearing for the examination of the parties, the witnesses and the experts, as well as for the oral arguments.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the Panel may, if it deems itself to be sufficiently well informed, decide not to hold a hearing. At the hearing, the proceedings take place in camera,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Panel has discretion to exclude evidence presented by the parties if it was available to them or could reasonably have been discovered by them before the challenged decision was rendered. Articles R44.2 and R44.3 shall also apply.

If any of the parties, or any of its witnesses, having been duly summoned, fails to appear, the Panel may nevertheless proceed with the hearing and render an award.

R58 Law Applicable to the merits

The Panel shall decid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pplicable regulations and, subsidiarily, to the rules of law chosen by the parties or, in the absence of such a choic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federation, association or sports-related body which has issued the challenged decision is domiciled or according to the rules of law that the Panel deems appropriate. In the latter case, the Panel shall give reasons for its decision.

R59 Award

The award shall be rendered by a majority decision, or in the absence of a majority, by the President alone. It shall be written, dated and signed. The award shall state brief reasons. The sole signature of the President of the Panel or the signatures of the two co-arbitrators, if the President does not sign, shall suffice.

Before the award is signed, it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AS Secretary General who may make rectifications of pure form and may also draw the attention of the Panel to fundamental issues of principle. Dissenting opinions are not recognized by CAS and are not notified.

The Panel may decide to communicate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to the parties, prior to the reasons. The award shall be enforceable from such notification of the operative part by courier, facsimile and/or electronic mail.

The award, notified by the CAS Court Office,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subject to recourse avail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pursuant to Swiss Law within 30 days from the notification of the original award. It may not be challenged by way of an action for setting aside to the extent that the parties have no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business establishment in Switzerland and that they have expressly excluded all setting aside proceedings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in an agreement entered into subsequently, in particular at the outset of the arbitration.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parties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transfer of the file to the Panel. Such time limit may be ext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upon a reasoned request from the President of the Panel.

The award, a summary and/or a press release setting forth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s shall be made public by CAS, unless both parties agree that they should remain confidential. In any event, the other elements of the case record shall remain confidential.

D Special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Consultation Proceedings

R60 [abrogated]

R61 [abrogated]

R62 [abrogated]

E Interpretation

R63 A party may, not later than 45 days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the award, apply to CAS for the interpretation of an award issued in an ordinary or appeals arbitration, if the operative part of the award is unclear, incomplete, ambiguous, if its components are self-contradictory or contrary to the reasons, or if the award contains clerical mistakes or mathematical miscalculations.

When an application for interpretation is filed, the President of the relevant Division shall review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interpretation. If so, she/he shall submit the request for interpretation to the Panel which rendered the award. Any Panel members who are unable to act at such time shall be replac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R36. The Panel shall rule on the request within one month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request for interpretation to the Panel.

F Costs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R64 General

R64.1 Upon filing of the request/statement of appeal, the Claimant/Appellant shall pay a non-refundable Court Office fee of Swiss francs 1,000.—, without which the CAS shall not proceed. The Panel shall take such fee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 final amount of costs.

If an arbitration procedure is terminated before a Panel has been constituted, the Division President shall rule on costs in the termination order. She/he may only order the payment of legal costs upon request of a party and after all parties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file written submissions on costs.

R64.2 Upon formation of the Panel, the CAS Court Office shall fix, subject to later changes, the amount, the method and the time limits for the payment of the advance of costs. The filing of a counterclaim or a new claim may result in the calculation of additional advances.

To determine the amount to be paid in advance, the CAS Court Office shall fix an estimate of the costs of arbitration, which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R64.4. The advance shall be paid in equal shares by the Claimant(s)/Appellant(s) and the Respondent(s). If a party fails to pay its share, another may substitute for it; in case of non-payment of the entire advance of costs within the time limit fixed by the CAS, the request/appeal shall be deemed withdrawn and the CAS shall terminate the arbitration; this provision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ny counterclaim.

R64.3 Each party shall pay for the costs of its own witnesses, experts and interpreters.

If the Panel appoints an expert or an interpreter, or orders the examination of a witness, it shall issue directions with respect to an advance of costs, if appropriate.

R64.4 At the end of the proceedings, the CAS Court Office shall determine the final amount of the cost of arbitration, which shall include:

- the CAS Court Office fee,
- the administrative costs of the CA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S scale,
- the costs and fees of the arbitrators,
- the fees of the *ad hoc* clerk, if any,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S fee scale,
- a contribution towards the expenses of the CAS, and
- the costs of witnesses, experts and interpreters.

The final account of the arbitration costs may either be included in the award or communicated separately to the parties.

R64.5 In the arbitral award, the Panel shall determine which party shall bear the arbitration costs or in which proportion the parties shall share them. As a general rule, the Panel has discretion to grant the prevailing party a contribution towards its legal fe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ceedings and, in particular, the costs of witnesses and interpreters. When granting such contribution, the Panel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omplexity and outcome of the proceedings, as well as the conduct 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ties.

R65 Appeals against decisions issued by international federations in disciplinary matters

R65.1 This Article R65 applies to appeals against decisions which are exclusively of a disciplinary nature and which are rendered by an international federation or sports-body. In case of objection by any party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provision, the CAS Court Office may request that the arbitration costs be paid in advance pursuant to Article R64.2 pending a decision by the Panel on the issue.

R65.2 Subject to Articles R65.2, para. 2 and R65.4, the proceedings shall be free. The fees and costs of the arbitrator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S fee scale, together with the costs of CAS are borne by CAS.

Upon submission of the statement of appeal, the Appellant shall pay a non-refundable Court Office fee of Swiss francs 1,000.— without which CAS shall not proceed and the appeal shall be deemed withdrawn.

If an arbitration procedure is terminated before a Panel has been constituted, the Division President shall rule on costs in the termination order. She/he may only order the payment of legal costs upon request of a party and after all parties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file written submissions on costs.

R65.3 Each party shall pay for the costs of its own witnesses, experts and interpreters. In the arbitral award, the Panel has discretion to grant the prevailing party a contribution towards its legal fe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ceedings and, in particular, the costs of witnesses and interpreters. When granting such contribution, the Panel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omplexity and the outcome of the proceedings, as well as the conduct and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ties.

R65.4 If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including the predominant economic nature of a disciplinary case or whether the federation which has rendered the challenged decision is not a signatory to the Agreement constituting ICAS, the President of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may apply Article R64 to an appeals arbitration, either ex officio or upon request of the President of the Panel.

R66 Consultation Proceedings

[abrogated]

G Miscellaneous Provisions

R67 These Rules are applicable to all procedures initiated by the CAS as from 1 January 2016. The procedures which are pending on 1 January 2016 remain subject to the Rules in force before 1 January 2016, unless both parties request the application of these Rules.

R68 CAS arbitrators, CAS mediators, ICAS and its members, CAS and its employees are not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act or omission in connection with any CAS proceeding.

R69 The French text and the English text are authentic.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the French text shall prevail.

R70 The Procedural Rules may be amended pursuant to Article S8.

| 집필진 |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조정팀장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기획 및 편집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한정미	연구위원
김형건	연구위원
김종천	연구위원
이기평	부연구위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2016 GLOBAL LEGAL ISSUES (IV)

2016년 11월 13일 인쇄

2016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이 익 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FAX : 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ISBN : 978-89-6684-677-1 93360

값 : 12,000원

1. 이 보고서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를 금합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6 GLOBAL LEGAL ISSUES (Ⅳ)



값 12,000원